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28-01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자료집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28-01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자료집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자료집

차 례

1. UPR 제도 및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결과 ····· 1

2.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UPR 독립보고서(2022. 7. 14.) ····· 45

3. 제4차 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2022. 11., 법무부) ····· 97

4. 제4차 UPR 이해관계자 요약보고서(2022. 11., OHCHR) ····· 179

5. 국가인권위원회 UPR INFO 사전세션 참석 발언문(2022. 11. 30.) ····· 197

6. 주한 외교공관 대상 UPR 브리핑 세션 개최 자료(2023. 1. 14.) ····· 207

7. 제4차 UPR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3. 2. 27.) ····· 223

8. 법무부 주최 〈UPR 후속조치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발제문(2023. 4. 14.) ····· 227

9.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발언문(2023. 7. 7.) ····· 257

10. 제4차 UPR 대한민국 심의 최종보고서 및 정부답변서(영문) ····· 263

11. 제4차 UPR 대한민국 심의 최종보고서 및 정부답변서(국문) ····· 305

1. UPR 제도 및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결과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도 및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결과

구 성

Ⅰ. 개괄

Ⅱ.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도 개요

Ⅲ. UPR 심의 대응 단계별 국가인권기구 역할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UPR 심의 대응 경과

Ⅴ. 제4차 UPR 권고

Ⅵ. 정부의 제4차 UPR 권고 수용·참조

[붙임] 제4차 UPR 권고 목록

UPR 제도 및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결과

Ⅰ. 개괄

❑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제도는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에 제1~3차 UPR 심의를 받은 바 있음.

❑ 2023. 1. 26. 제42차 UPR 실무그룹 회의(UPR Working Group Session,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때 95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총 263개의 인권 개선 권고를 제시함.

❑ 2023. 6. 대한민국 정부는 위 UPR 권고사항에 대해 수용·참조*(불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유엔에 통보하였음.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UPR 최종결과가 2023. 7. 7.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본회의)에서 채택됨으로써 제4차 UPR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었음.

* 수검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UPR 제도의 취지에 따라 권고 '불수용(reject)'이 아닌 '참조(note)'라는 용어 사용

Ⅱ.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도 개요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제도는 2006년 신설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핵심 인권감시 체계

- **(대상)**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정기적·순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2008년 개시
- **(목적)** UPR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음.
- **(성격)** 유엔 회원국 모두가 타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평가받으며, 미흡한 부분을 상호 권고하는 동료 평가(Peer Review) 성격
- **(심의)** ① 정부 제출 국가보고서, ② 유엔인권조약기구 권고 통합본, ③ 이해관계자(국가인권기구 및 NGO) 제출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UPR 실무그룹 회의(유엔 인권이사국으로 구성)에서 심의
- **(결과)** 유엔 회원국들이 수검국에게 제시한 권고사항(UPR 실무그룹 회의 결과보고서)과 이에 대한 수검국의 답변서(권고 수용·참조 입장)를 유엔 인권이사회(본회의)에서 채택
- **(후속조치)** 이후 수검국은 차기 UPR 심의 주기가 도래할 때까지 위의 권고를 국내에서 충실히 이행(국가인권기구는 정부의 권고 이행 촉진 및 이행 경과 모니터링)

❑ 대한민국에 대한 UPR 심의 경과

UPR 심의	1차	2차	3차	4차
	2008. 5.	2012. 10.	2017. 11.	2023. 1.
대한민국에 대한 UPR 권고 건수	**33**	**70**	**218**	**263**
수용(Support)	15	42	121	164 (일부수용 5 포함)
참조(Note)	18	28	97	99
권고 수용율	45.5%	60.0%	55.5%	60.5% (일부수용 제외)

Ⅲ. UPR 심의 대응 단계별 국가인권기구 역할

UPR 심의 관련 인권위 역할

▶ 인권위 독립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UPR 권고 도출 도모

▶ 정부의 UPR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부에 권고 이행을 촉구하며, 정부와 시민단체의 가교 역할을 통한 인권증진 개선 도모

❑ UPR 실무그룹 심의 전 단계

- ○ 전차 UPR 권고 이행 평가 및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 인권위의 의견을 담은 자체 보고서(독립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

- ○ 유엔 회원국 등에 한국의 인권개선 과제 및 UPR 권고(안) 제시

❑ UPR 실무그룹 심의 단계

- ○ UPR 실무그룹 회의에 옵저버(Observer)로 참석하여 대한민국 심의 과정 모니터링

❑ UPR 실무그룹 심의 후 단계

- ○ 정부의 UPR 권고 수용 촉진

- ○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UPR 최종결과 채택(Item 6. UPR)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 ○ UPR 권고의 국내 이행 촉진

- ○ 정부의 UPR 권고 이행 모니터링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UPR 심의 대응 경과

❑ 2022. 7. 14. 인권위, 제4차 UPR 심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유엔에 제출

- 여성 인권, 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이주민 인권, 정보 인권, 노동 인권, 기업과 인권, 기후변화와 인권 등 12개 영역에 대한 현안 및 권고(안) 제시

❑ 2022. 11. 8. 인권위, UPR INFO 사전세션 참석을 위한 인권단체 간담회 개최

- 국제사회(유엔 회원국 외교부 등)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인권현안 브리핑을 준비하기 위한 협업 논의

❑ 2022. 11. 30. 인권위, UPR INFO 사전세션 참석 및 발표(제네바)

- 각국 유엔대표부를 대상으로 한국의 인권현안 및 UPR 권고사항 제안(22개국 60여 명 참석)

❑ 2023. 1. 13. 인권위, 주한 외교공관 대상 UPR 브리핑 세션 개최

- 인권위 독립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인권개선 과제 및 UPR 권고 제안(43개 대사관 소속 외교관 총 46명 참석)

❑ 2023. 1. 26. 제42차 UPR 실무그룹 회의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제4차 정기 심의 진행

-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참석(10개 부처 구성)
- 총 95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 등 표명

❑ 2023. 2. 1. UPR 실무그룹, 대한민국 심의 결과보고서 채택

- 95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총 263개의 권고 제시
- 정부는 이중 97개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나머지 166개의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여부 검토 후 제53차 인권이사회 개최(2023. 6.~7.) 전까지 유엔에 통보키로 함.

❑ 2023. 2. 27. 인권위, 정부의 UPR 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발표
-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

❑ 2023. 4. 14. 법무부, 제4차 UPR 후속조치 간담회 개최
- 관련 정부부처, 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과), 시민사회단체 참석
- **[위원회 발제]** 정부의 수용 미정 권고에 대하여 수용 권장 및 이행 방안 제시

❑ 2023. 6. 법무부, 유엔에 UPR 권고 수용 답변서 제출
- 총 263개의 권고사항 중 159개 수용, 5개 일부 수용, 99개 참조

❑ 2023. 7. 7. 인권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대한민국 UPR 최종결과 채택' 세션 참석 및 인권위 입장 발표
- 유엔 인권이사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UPR 최종결과 채택
- **[위원회 발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중요 권고사항(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을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 표명, 개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촉구

❑ 2023. 7. 인권위, 제4차 UPR 최종결과에 대하여 상임위 보고



▲ UPR INFO 사전세션 참석 및 인권위 권고 제안 발표(2022. 11. 제네바)





▲ 주한 외교공관 대상 UPR 브리핑 세션 개최 및 인권위 권고 제안(2023. 1. 서울)





▲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 및 인권위 입장 발언(2023. 7. 제네바)

V. 제4차 UPR 주요 권고

○ **법률 및 제도 개선**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등 국제조약의 비준
- 차별금지법 제정
-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
- 북한인권법 폐지
- 사형제 폐지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자유권 보호**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 개선
-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호 강화
-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에 의한 사생활 권리 및 인권침해 예방
-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사회권 보호**

- 노동권 침해 행위로부터 노동자 보호
- 모든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 강화
- 차별없는 교육 제공 및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 HIV 보균자 대상 지원 조치 및 HIV/AIDS 예방 교육 강화

○ **여성 인권**

- 여성차별 철폐 및 성평등 증진 정책 및 제도 강화
- 젠더 폭력, 사이버 성폭력, 가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부부강간을 형사처벌하도록 법률 개정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
- 성별 임금 격차 해소
-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고위직 진출, 여성 대표성 증진
-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경우, 타 기관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던 기능 및 서비스의 유지 및 강화

○ **아동 인권**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정책계획 및 아동권리협약 이행 강화
- 아동 폭력 및 학대, 아동대상 사이버 폭력 근절 정책 강화
-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 미성년자(소년범) 구금 제한
- 촉법소년 연령하향 계획 재검토
- 아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출산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부모 지원
-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 시행

○ **장애인 인권**

-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 장애인의 탈시설화 과정 개선
- 장애인의 차별없는 건강권 향유 강화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지원 강화
-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중단, 지역사회에 기반한 돌봄제도 도입
-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 선거 및 정치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 확대

○ **이주자 인권**

- 인종차별·외국인혐오 예방 및 대응 강화

-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비롯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 외국인 노동자 노동권 보호 강화 및 근로사업장 변경 제한 개선
-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강화
-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실태 개선
- 난민인정심사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신설
- 인권에 기반한 이민정책 도입
-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이주아동 등록제도 개선

◦ **노인 인권**
- 노인의 사회보장·의료 접근권 강화, 노인 빈곤 감소를 위한 조치 강화
- 노인을 위한 복지, 연금, 생활 여건 개선
- 노인을 위한 주거 정책 강화
- 노인 학대 예방 정책 강화

◦ **성 소수자 인권**
-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 동성혼의 법적 인정
- 성 소수자의 성별정정 전제조건 없이 허용
- 전환치료 금지

◦ **군 인권**
- 군 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 **기후변화와 인권**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및 달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위협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시행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한 통합적 대응 시스템 및 행동계획 수립
- 화석연료 사용 근절,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조치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권고**

- 성에 대한 권리 및 여성 인권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의 젠더 및 여성권리 관련 권한 강화

○ **기타**

-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조치 강화
-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의 0.7%로 확대

VI. 정부의 제4차 UPR 권고 수용·참조

❑ 정부의 수용·참조 결정 기준

- ○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UPR 정신을 존중하되 개별 권고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함
  - ⇒ 이미 실행되었거나 구현중인 권고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용(support)'
  - ⇒ 즉각적·단기적 조치가 요구되어 시행하기 어렵거나, 우리의 법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부의 기본적 입장과 차이가 있는 권고사항은 '참조(note)'

- ○ 제4차 UPR 권고 총 263개 중 164개 수용(일부수용 5개 포함), 99개 참조

❑ 주요 권고 수용·참조 비교표

	수용(support)	참조(note)
법률 제도 개선	■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 고려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평등 비차별	■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지속 ■ 성 소수자 전환치료 근절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폐지 ■ 성 소수자 성별정정 요건 완화 ■ 인종차별범죄 가중처벌, 증오선동 형사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형법 개정)
자유권	■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 구금시설 가혹행위 근절 ■ 군 내 성폭력 근절, 인권 증진 ■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인공지능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사형제 폐지 ■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 고문방지 국가예방 메커니즘 신설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개선
사회권	■ 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안전망 확대, 취약계층 권리 보호 강화 ■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증진 ■ 취약계층의 주거, 교육, 고용 보장 ■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	■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확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여성	■ 고용영역에서 여성차별 해소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 성평등 증진 정책·제도 강화 ■ 공공·민간영역 여성 대표성 증진 ■ 자발적 임신중단 접근성 강화 ■ 여성 대상 폭력 근절	■ 여성차별철폐협약 유보 철회 (가족성 선택의 자유)

	수용(support)	참조(note)
장애인	■ 장애인 탈시설화 과정 개선 ■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중단
아동	■ 소년사법제도 관련 법률 및 미성년자 구금 조치 재검토 ■ 아동의 공정한 재판 권리 보장 ■ 아동학대·성폭력 예방 강화	■ 형사책임연령 하향 계획 재고
이주민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개선 ■ 미등록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근절 ■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 개선 ■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 이주자와 그 가족의 결합을 위한 정책 강화
기후 변화	■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 권리 보호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위협요소 완화	■ 모든 화석연료 사용 근절,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
기타	-	■ 북한인권법 폐지(북한 권고)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피해자 배상(북한 권고)

❑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support)한 주요 권고

○ **법률·제도 개선**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 비준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 고려(검토)
제4차 NAP 수립 관련, 다양한 인권현안 반영 및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보고·후속조치 메커니즘 신설

○ **평등·비차별**

성 소수자 전환치료 근절
젠더 기반 차별, 폭력, 학대 철폐 관련 법률 및 정책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지속

○ 자유권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구금시설 내 가혹행위(고문) 근절
군대 내 성폭력 근절
군대 내 인권 증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이러한 권리의 제한 및 공권력 사용은 국제기준 준수, 집회 및 노조 활동에 대한 임의적 방해 및 제한 중단)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금 종료 및 범죄기록 삭제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조치
보안감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사생활 권리 및 인권 침해 방지

○ 사회보장·노동권·교육권

교직원 대상 통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에 관한 훈련 실시
학교 인프라 강화 및 농촌지역 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및 차별 철폐
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안전망 확대, 취약계층 권리 보호 강화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증진
빈곤 감소, 노인의 사회보장 및 의료 접근 보장
HIV 보균자 대상 치료 보장
취약계층의 주거, 교육, 고용 보장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 보장
청소년 성교육, 성 정체성 관련 교육, 젠더기반 폭력 예방 교육 제공
평등한 교육 제공

○ **여성**

임신중절의 비범죄화 및 합법적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고용영역에서의 여성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 강화
성별 간 임금격차 해소
여성차별 철폐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강화
공공·민간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노력 강화
공공·민간영역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자발적 임신중단에 대한 접근성 강화
가정폭력, 성 기반 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온·오프라인상 폭력 처벌 강화, 여성·여아 대상 온·오프라인 폭력 근절 온라인 차별 및 폭력 근절을 위한 기업의 책임성 강화

○ **아동·이주민**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 미성년자의 구금 방지, 소년사법제도 관련 법률 및 미성년자 구금 조치 재검토
아동 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예방 및 모니터링 정책 강화
아동 대상 온라인 폭력 근절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제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 조치 이행
아동의 공정한 재판 권리 보장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조치 이행 지속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관련 법률 개정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조사관련 조치 강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강화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근절 조치 및 노력 강화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 개선 및 난민인정심사제도 개선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도입
이주아동 의무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등록제도 개선

○ **노인·장애인**

노인 복지 및 생활 여건 개선
노인의 주거 정책 및 노인의 빈곤 방지, 동등한 서비스 보장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조치 시행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입법, 재정 강화
장애인 탈시설화 과정 개선
선거절차 및 공공·정치영역에서의 장애인 참여 개선
장애인 교육 및 돌봄시설 개선
장애인 역량강화 및 고용기회 제공

○ **기후변화와 인권**

기후위기로부터 취약계층 권리 보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제기준 달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위협 요소 완화

○ **국제개발협력**

인권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ODA 규모 확대(국민총소득의 0.7% 수준으로 증액)

❑ 대한민국 정부가 참조(note)한 주요 권고 및 입장

○ **법률·제도 개선**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무국적자감소협약 가입	▶ 국적법을 통해 무국적자 관련 정책 시행중
유네스코 교육차별금지협약 가입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하는 등 교육차별 철폐 노력중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제1항제g호 유보 철회 (가족성 선택의 자유)	▶ 지속적으로 검토중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비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비준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 및 비준	▶ 지속적으로 검토중

○ **평등·비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포함)	▶ 즉각적·단기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 군대 내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 기강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인종차별적 범죄 가중처벌, 증오선동을 형사처벌하는 법률 제정(형법 개정)	▶ 형사법상 범행의 동기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음. 형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은 신중한 검토 필요
동성간 결혼 및 입양 합법화	▶ 동성간 결혼 및 가족제도 변경은 중대한 문제로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즉각적인 조치 없음
성별정정 요건 완화	▶ 관련 입법 필요, 입법 부재 상황에서 성별정정 허가는 재판사항으로서 법관이 결정

○ **자유권**

사형제 폐지,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장	▶ 안보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수호를 위해 필요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자의적 법률 적용을 예방하고 있음
고문방지 국가예방 메커니즘 신설	▶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등 국가예방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형사책임연령 하향 계획 재고	▶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처벌가능 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추진중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개선	▶ 대체복무 기간과 분야는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 논의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 논의 지원 예정

○ **사회보장·노동권**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보호 적용)	▶ 다양한 노동 형태를 고려할 때, 모든 유형의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OECD 평균으로 상향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 중,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종합적 검토 예정

○ **장애인·이주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중단	▶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공동체 안전을 위해 입원제도의 원천적 금지는 어려움
이주자와 그 가족의 결합을 위한 정책 강화	▶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 **기후변화와 인권**

모든 화석연료 사용 근절,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	▶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모든 화석연료 사용의 근절은 어려움

○ **기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피해자 배상 (북한 권고)	-
북한인권법 폐지 (북한 권고)	▶ 북한인권법은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 '참조(note)'가 아닌 '불수용(not accept)'으로 명시

[붙임] 제4차 UPR 권고 목록

제4차 UPR 절차 결과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Ⅰ. 대한민국이 수용한 권고

※ 원문의 권고 단락 번호 표기(138, 139, 140)

국제조약의 비준 및 국가인권프레임워크

138.1.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할 것 (덴마크)

138.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남미비아)

138.3.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것 (우크라이나)

138.4.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을 지속할 것 (일본)

139.6.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할 것 (멕시코)

139.31.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검토할 것 (말라위)

139.38.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인권현안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식으로 수립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139.40.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하여 이행,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국내 상설 메커니즘을 신설할 것 (파라과이)

139.109. 성에 대한 권리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를 강화할 것 (콜롬비아)

139.117.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젠더 및 여성권리 관련 권한을 강화할 것 (몰디브)

인권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138.5.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토대로 국제 협력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 (엘살바도르)

138.6. 국제개발협력 전략계획, 인권을 위한 중기 전략, 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 계획을 완전히 이행할 것 (키르기스스탄)

인종차별 예방 및 혐오표현 근절

138.7.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청소년, 공무원, 교육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할 것 (베트남)

138.8.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에 대항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알제리)

138.9. 혐오표현 및 인종차별적 증오 선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 (벨라루스)

138.10. 인종차별과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중국)

138.11.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 (이집트)

138.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허위정보·사회적 낙인을 조장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볼리비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138.12.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할 것 (잠비아)

138.13. 수형자 처우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소할 것 (리비아)

노동권 보호 및 착취 근절

138.15.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권 침해 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수단)

138.16.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철폐할 것 (베트남)

139.75.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억압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활동을 임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disproportionate)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 (북한)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안전망 확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보장

138.17. 국가연금제도를 강화하고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조치를 확대할 것 (포르투갈)

138.18.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사회복지 국가를 향한 토대를 마련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138.19. 사회안전망 확대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보장 및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 (파키스탄)

138.20.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것 (아제르바이잔)

138.2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우선과제로 삼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 (카자흐스탄)

138.22. 누구나가 주거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강화할 것 (아제르바이잔)

138.23. 주거 및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를 증진할 것 (부탄)

138.24. 빈곤 감소, 특히 노인의 사회보장 및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등 노인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브라질)

138.26. 취약계층의 보건 서비스 이용을 개선할 것 (조지아)

139.99.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및 기타 분야에 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중국)

139.100. HIV 보균자에게 더 나은 지원(care)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세네갈)

안전한 임신중단 접근성 보장

138.25.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도록 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 등 여성을 위한 안전한 재생산 건강 서비스를 보장할 것 (인도)

138.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형법 및 기타 법률을 개정할 것 (에스토니아)

138.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여 임신중절을 규율하는 법을 제정할 것 (스페인)

138.29.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할 것 (뉴질랜드)

138.30.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신속히 형법을 개정할 것 (아이슬란드)

138.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 (벨기에)

139.3. 자발적 임신 중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 (프랑스)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

138.32. 모든 사람에게 무상 공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 등록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할 것 (방글라데시)

138.33. 통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에 관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 (몰디브)

138.34. 학교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사를 증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교육 접근성 격차를 줄일 것 (모리셔스)

139.101. 연령에 맞는 성교육, 특히 10대의 임신과 HIV/AIDS를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성적 지향, 성, 성 정체성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성교육을 제공할 것 (룩셈부르크)

139.103.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농촌과 도시 지역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 (카타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138.35.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제적 달성 목표인 국민총소득(GNI)의 0.7% 수준으로 확대할 것 (방글라데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노력 강화

139.47.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 법률적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 (우크라이나)

139.49.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크로아티아)

139.5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포함하도록 검토할 것 (그리스)

139.51. 평등법 제정을 향한 정부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그리스)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139.63.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의 관행을 근절할 것 (베네주엘라)

군 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

139.65. 군 내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보장하도록 군 내 성폭력 방지 및 보호 제도를 재검토할 것 (이란)

139.66. 군 내 성폭력 관련 예방 및 보호 제도를 재검토할 것 (이스라엘)

139.67. 군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139.70.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 (파라과이)

139.74. 모든 사람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의 제한 및 공권력의 사용에 대한 규칙은 국제법을 준수할 것 (베네수엘라)

양심적 병역 거부

139.81. 구금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을 폐기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 (아르헨티나)

139.83. 구금상태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을 폐기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 (룩셈부르크)

139.8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종료할 것 (우루과이)

인신매매 방지

138.14.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를 근절할 것 (레바논)

139.90. 인신매매의 위험을 퇴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강화할 것 (파키스탄)

139.91. 비정규적 이민 상황에 놓인 이주자 및 성매매 종사자 등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에 대한 신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일반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것 (페루)

139.92. 인신매매방지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접근방식을 취하는 등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카타르)

139.93.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것 (스리랑카)

139.94. 인신매매 범죄, 특히 현대적 형식의 노예 상태와 연관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근절할 것 (시리아)

139.95. 성적 착취 및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아동 범죄율 증가와 같은 모든 사회악적 관행을 근절할 것 (북한)

139.96. 인신매매 근절을 향한 노력을 지속할 것 (키르기스스탄)

139.97.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퇴치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 (조지아)

정보 인권 및 사생활 권리 보호

139.89. 보안감시 시스템 등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시스템이 사생활의 권리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 (코스타리카)

여성차별 철폐 및 성폭력 근절

138.36. 성 기반(gender-based) 범죄와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특히 여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용영역에서 여성차별을 해소할 것 (인도네시아)

138.37.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을 지속·강화할 것 (엘살바도르)

138.38. 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논쟁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크로아티아)

138.39.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일 것 (칠레)

138.40. 공공 영역, 그리고 과학·기술·연구·혁신 분야 등 민간사업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높이기 위해 여성에게 동등한 역량강화 기회를 보장할 것 (불가리아)

138.41. 여성의 경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할 것 (브루나이 다루살람)

138.42.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의 이행을 지속할 것 (베트남)

138.43.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 (터키)

138.44.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경우,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지·강화할 것 (스위스)

138.45. 유해한 성 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는 요소를 타파하고 이들에게 피해구제 접근성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기관간 연계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평등을 증진할 것 (네덜란드)

138.46. 여성차별을 유발하는 요소를 타파하고 공공·민간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성평등을 증진할 것 (말레이시아)

138.47. 공공 영역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일 것 (리투아니아)

138.48. 남녀간 임금 격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크)

138.49.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성 기반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카자흐스탄)

138.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며, 성 기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 및 절차의 시행을 지속할 것 (쿠웨이트)

138.51. 성 기반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 (레바논)

138.52. 여성에 대한 성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잠비아)

138.53. 부부강간을 형사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인간 존엄성을 준수하여 성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법률 개정에 노력을 기울일 것 (아르헨티나)

138.54.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는 등 성 기반 폭력 및 성 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브라질)

138.55. 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 장애인을 포함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기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대중인식 캠페인을 조직할 것 (에스토니아)

138.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시리아)

138.57.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 (라오스)

138.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을 타파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taskforce)을 마련할 것 (영국)

138.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기타 형태의 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게 피해구제 접근성을 보장할 것 (러시아)

139.108. 성에 기반한 차별, 폭력, 학대를 영속화하는 구조나 기준을 철폐하기 위해 인적, 재정적 자원을 투여하는 등 관련 법률과 (정책) 계획의 이행을 더욱 강화할 것 (필리핀)

139.125.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스리랑카)

139.110. 사법부, 법집행 부문, 정치 및 공공 영역, 민간 분야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우크라이나)

139.111. 소셜미디어 등에서 여성이나 여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의 확산을 근절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며 가해자의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시리아)

139.113. 차별 근절,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통해 직장과 정치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노르웨이)

139.114. 정치 및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네팔)

139.116. 국회, 도의회, 지방의회의 비례대표제 확대 등 공공,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 및 구조적 개혁을 구상하고 이행할 것 (마셜제도)

139.118.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이탈리아)

139.119.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차별에 대응할 것 (이란)

139.120. 국내외 민간기업들이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상의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할 것 (아일랜드)

139.121.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과 젠더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키프로스)

139.122.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차별, 혐오표현을 근절하고 젠더기반 고정관념을 타파하며, 건강한 성관계, 동의,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한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 (코스타리카)

139.123. 여성, 여아를 모든 형태의 폭력, 괴롭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수단)

139.124. 여성, 여아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폭력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 (중국)

139.126. 온라인 폭력 등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감시, 예방,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 (리투아니아)

아동인권 보호

138.60.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식으로 부모를 지원할 것 (말레이시아)

138.61.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 부적절한 방식의 미성년자 구금을 방지할 것 (감비아)

138.62. 소년법상 구금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아동을 성인 수감자와 함께 구금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것 (감비아)

138.63. 소년사법제도 관련 법률 및 미성년자 구금에 관한 조치를 재검토할 것 (부탄)

138.64.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 계획에 매진할 것 (에스토니아)

138.65.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제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 (사이프러스)

138.66. 아동 폭력 및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138.67.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이 아동보육시설, 교육, 보건의료, 여가, 국가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잠비아)

138.68.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138.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확장함으로써 아동 권리를 보호·증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 (스리랑카)

138.70. 교정시설의 여건, 특히 미성년자 구금시설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것 (페루)

138.71. 출산 및 양육의 부담과 비용을 경감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아동양육 시스템을 수립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 가정 문화를 조성하며, 젊은 세대가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ICPD25)'에서 채택된 부모 지원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할 것 (파나마)

138.72.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학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것 (네팔)

139.37.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의 비준(ratification)을 검토할 것 (이집트)

139.127. 강요된 자백의 사용 금지 및 법정후견인의 재판 참여 보장을 통해 아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 (감비아)

139.128. 국내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할 것 (아제르바이잔)

139.129.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응할 것 (세르비아)

139.131.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 근절, 감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몬테네그로)

139.133. 부모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수립할 것 (리투아니아)

139.134. 부모의 법적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할 것 (이라크)

139.164.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주아동 등록 제도를 개선할 것 (폴란드)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복지

138.73. 노인을 위한 복지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라오스)

138.74. 노인의 안전, 안녕, 사회적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싱가폴)

138.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종합적 전략을 수립할 것 (슬로베니아)

138.76. 노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알제리)

139.129.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을 도입할 것 (세르비아)

139.135.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요구를 고려하는 주거 정책을 도입하고 비공식 주거지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의 수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 (슬로베니아)

139.136. 노인 인권을 보장하고 노후에 서비스의 동등한 이용과 빈곤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할 것 (슬로베니아)

장애인 차별 철폐

138.77. 장애인,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이란)

138.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입법 조치와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138.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평등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 (쿠웨이트)

138.80. 장애인의 공공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확대·강화할 것 (싱가폴)

138.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 (터키)

138.82. 노인,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 (벨라루스)

138.83.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 (브루나이 다루살람)

138.84. 장애인의 탈시설화 과정을 개선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차별적 환경 및 동일 임금 등을 통해 완전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노력을 지속할 것 (불가리아)

138.85. 여성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속할 것 (인도)

139.137. 선거절차와 공공 정치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 (요르단)

139.138.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돌봄 시설의 질을 개선할 것 (뉴질랜드)

139.140.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할 것 (카타르)

성 소수자 차별 철폐

139.163. 전환 치료를 금지할 것 (아이슬란드)

이주자 및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138.87.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파키스탄)

138.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 (파라과이)

138.89. 이주노동자가 근로할 사업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

특히 사업장 변경의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개정할 것 (필리핀)

138.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및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도록 관련 조치를 강화할 것 (태국)

138.91. 사용자 및 채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관련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이해를 강화할 것 (태국)

138.92.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난민인정심사에서 거부된 이들에 대한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등 이주자 권리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마련할 것 (터키)

138.93. 여성·아동 이주자 보호(구금) 등을 포함하여, 인권에 기반한 이민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우루과이)

138.94. 이주자 및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 (우즈베키스탄)

138.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가나)

138.97. 이주자와 난민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것 (인도)

기후변화와 인권

139.39. 기후위기로부터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 대응 시스템 및 행동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 (부탄)

139.10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권 위협 요소들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 (말레이시아)

139.105.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할 것 (마샬아일랜드)

139.106. 비정부기구 및 선주민이 미래의 기후변화관련 협상에 평등하고 완전하게 참여할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바누아투)

Ⅱ. 대한민국이 참조(불수용)한 권고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139.3.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의 비준을 검토할 것 (프랑스)

139.4.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1961)에 가입할 것 (코트디부아르)

139.5.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몽고, 몬테네그로)

139.7. 유네스코 교육상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 (모리셔스)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139.8. 사형제를 폐지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 (호주)

139.9. 법률상 사형제를 폐지하도록 검토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프랑스)

139.10.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1961)에 가입할 것 (파나마)

139.11.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검토할 것 (포르투갈)

139.12. 사형제 폐지에 관한 모라토리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승인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139.13. 사형제를 폐지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조항없이 비준할 것 (아이슬란드)

139.14.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검토할 것 (우루과이)

139.15.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할 것 (코트디부아르)

139.16.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기존에 선고된 모든 사형 결정에 대하여 감형하는 조치를 취할 것 (멕시코)

139.17.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스위스, 영국)

139.18.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룩셈부르크)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139.6.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할 것 (멕시코)

139.19.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 (칠레)

139.20.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 가능성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간 검토하는 국내 절차를 추진할 것 (인도네시아)

139.21.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 (이집트)

139.22.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검토할 것 (콜롬비아)

139.23.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알제리, 방글라데시, 필리핀, 토고)

139.24.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검토할 것 (리비아, 세네갈)

139.25.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사형제 폐지에 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파라과이)

139.16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 (키르기스스탄)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139.2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 및 비준할 것 (덴마크)

139.2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몽고)

139.2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이탈리아)

139.29.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핀란드)

139.3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향한 절차를 강화할 것 (가나)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139.1. 아동권리협약 개인통보 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프랑스)

139.2. 아동권리협약 개인통보 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검토할 것 (슬로바키아)

139.132. 개인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검토할 것 (몽골)

법령 등의 개선

139.36. 국가보안법 및 기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모든 악법, 선동적 성격의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 (북한) ※ 정부는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에 대해 참조(note)가

아닌 불수용(not accept) 의사 표시

139.41. 형사범죄 선고와 관련하여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처벌의 기준에 포함하도록 형법의 개정을 검토할 것 (요르단)

139.42. 국제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거나 위법적인 일방적·강제적 조치의 시행을 종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이란)

139.43. 국제법 및 유엔헌장에 어긋나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조치,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편파적으로 바라보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조치를 폐기 및 예방할 것 (벨라루스)

노동권 보장

139.33. 노동관련 법률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 (폴란드)

139.35. 모든 노동자가 노동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모든 경제 영역에 노동 기준을 확대할 것 (동티모르)

139.98.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보장 및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인도네시아)

사형제 폐지

139.52.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의 도입을 검토할 것 (카자흐스탄)

139.53.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마샬제도)

139.54. 한국 국내법에서 사형제 관련 규정을 영구히 삭제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하는 등 사형제의 공식적 폐지를 통해 사형 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움을 확고히 할 것 (뉴질랜드)

139.55. 장기간 지속된 사형제 모라토리움에 기초하여, 사형제의 공식적 폐지를 향한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 (노르웨이)

139.56. 사형제의 법률적 폐지를 향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기존에 이루어진 사형 선고에 대하여 무기 징역으로 감형할 것 (슬로바키아)

139.57. 사형제의 법률적 폐지를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정책을 재검토할 것 (동티모르)

139.58. 사형제의 법률상 폐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우즈베키스탄)

139.59. 25년간 사실상 모라토리움 상태에 있는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 (캐나다)

139.60. 사형제를 폐지할 것 (코스타리카)

139.61.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기존에 이루어진 사형 선고에 대하여 감형 또는 사면 조치할 것 (사이프러스)

139.62. 사형제의 법률상 폐지를 검토할 것 (이탈리아)

고문 및 가혹행위 예방

139.64.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국가예방메커니즘(NPM)의 설립을 고려하는 등 고문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 (우루과이)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보호

139.69.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을 검토할 것 (멕시코)

139.71. 국가보안법(1948) 및 형법의 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러시아)

139.72. 국가보안법이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할 것 (스위스)

139.73.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민사법률로 대체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미국)

139.34.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인권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개선할 것 (동티모르)

139.48.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합리적·객관적 기준에서 현역 복무와 비교할 때 복무 기간이 비처벌적·비차별적이며, 순수히 민간 성격을 지닌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도록 관련 법률 및 관행을 재검토할 것 (코스타리카)

139.68. 사상, 신념,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조치를 마련할 것 (말라위)

139.7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하도록 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자의 재능과 기술을 고려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대체복무하도록 허용할 것 (캐나다)

139.77.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징역형을 받거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며, 국제법의 기준에 부합하는, 비처벌이며,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 (스페인)

139.7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시행할 것 (슬로바키아)

139.79.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비처벌적이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복무기간의 연장 없이, 현역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체복무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파나마)

139.80. 국가보안법 제7조가 표현 및 의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이를 사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모두 석방할 것 (독일)

139.8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사이프러스)

139.84. 대체복무제도가 비처벌적·비차별적이며, 민간의 주도로 운영되도록 할 것 (우루과이)

139.85.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할 것 (에스토니아)

139.8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며, 이때 대체복무는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며, 비처벌적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성격을 띠어야 하고, 대체복무제도의 제공이 불합리하게 지연되어서는 안됨 (호주)

139.87.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대체복무가 가능한 영역(장소)를 확대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 대체복무를 차별없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크로아티아)

139.8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비처벌적인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할 것 (폴란드)

교육권 보호

139.102. 분쟁상황에서 학교 보호를 위한 '안전한 학교 선언'을 승인할 것 (스페인)

기후변화와 인권

139.107. 모든 화석 연료의 사용을 근절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 (바누아투)

여성차별 철폐

139.11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g)항 유보 철회를 검토할 것 (파라과이)

139.11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g)항 유보를 철회할 것 (나미비아)

140.1.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에 의해 자행된 강제 노동과 성적 노예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북한)

아동 인권 보호

139.13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형사책임연령 하향 계획을 재고할 것 (필리핀)

사회보장

139.136.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OECD 평균으로 높일 것 (슬로베니아)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139.139.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중단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제도를 도입할 것 (코스타리카)

이주자 권리 보호

139.21. 이주자와 그 가족의 결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 (이집트)

성 소수자 인권 보호,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138.86.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사유로 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는 입법 체계를 마련할 것 (칠레)

139.32.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지체없이 제정할 것 (아일랜드)

139.44.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을 발전시키며, 포괄적 평등법을 통과시킬 것 (네덜란드)

139.45.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차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며, 인종을 사유로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

(러시아)

139.46. 신체적·정신적 장애, 인종, 성적 지향, 성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 종교, 사회적 조건 등을 사유로 한 차별에 대항하는 포괄적 법률의 시행을 검토할 것 (페루)

139.141.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없앨 것 (아일랜드)

139.142.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등을 근거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이스라엘)

139.143.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멕시코)

139.144.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인정할 것 (뉴질랜드)

139.145. 성 소수자와 그 밖의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노르웨이)

139.146. 모든 영역(노동, 교육, 공공서비스의 이용 등)에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국적에 따른 차별에 대응하는 포괄적 법률을 도입할 것 (스페인)

139.147. 성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영국)

139.148. 성 소수자 등 소외집단의 구성원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 (미국)

139.149. 군대 내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할 것 (미국)

139.150. 성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성별정정을 전제조건 없이 허용할 것 (호주)

139.151. 인종,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특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시행가능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벨기에)

139.152.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캐나다)

139.153. 군형법의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 (콜롬비아)

139.154.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기준의 도입, 연구계획의 수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 (코스타리카)

139.155.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덴마크)

139.156.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프랑스)

139.157. 모든 차별, 특히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 시행할 것 (독일)

139.158. 동성 군인간 성적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독일)

139.159. 합의에 의한 성인간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성부부의 입양을 합법화할 것 (아이슬란드)

139.160.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 군대 내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없앨 것 (아이슬란드)

139.161.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의 조건으로 정신과 진단, 의료적 조치, 결혼 및 출산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개인의 자발적 선언(self-declaration)을 근거로 하는 투명한 행정적 절차를 도입할 것 (아이슬란드)

139.162.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할 것 (콜롬비아)

2.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UPR 독립보고서 (2022. 7. 1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 배포일시: 2022. 7. 14. | 보도일시: 2022. 7. 14. | 02-2125-9870 | 홍보협력과장 직무대리 육성철
담당부서: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장 문은현(02-2125-9880) | 담당: 최수희 사무관(02-2125-9887)

인권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의견서 제출

-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주요 인권 현황과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2022. 7. 14.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하였다.

○ UPR은 정기적으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으며, 곧 다가올 제4차 심의는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 주요 인권 현안 및 과제에 관한 인권위의 독립적 의견을 담은 의견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의 인권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 권고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그 이행을 촉구하는 데 바탕이 된다.

○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제4차 UPR 심의와 관련하여, 평등·비차별, 자유권, 군 인권, 장애인·여성·아동 인권, 노동 인권, 이주 인권, 기업과 인권, 기후 변화와 인권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군대 내 성폭력 근절과 자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군대 내 성 소수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대중교통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 조치와 재정지원 강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해소,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낙태죄가 폐지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강구,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해결,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 기후 변화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인권위는 제4차 UPR 실무그룹 회의와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인권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제4차 UPR 관련 인권위 독립보고서. 끝.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2022. 7.

대 한 민 국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관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Ⅰ. UPR 권고에 대한 이행 평가

1. 정부는 제3차 UPR 권고 총 218개 중 121개 수용, 97개 참조 입장을 2018. 2. 밝혔으나 주요 권고는 이행상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포함) 제정은 제3차 UPR 권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2020년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차별금지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2.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비준에 관한 권고는 그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종전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0. 11. 17.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사형제도 폐지에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었다.

3.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가입 권고도 제3차 UPR 권고 중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데, 이 권고의 이행은 소폭의 진전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2021. 12. 28. 국회에 제출했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은 2021. 8. 협약 가입안을 마련해 현재 법제처에서 가입안을 심사 중이다. 또한 정부는 2021. 4.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핵심협약 3건[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 제29호(강제노동)] 비준서를 ILO에 기탁하여 2022. 4. 20.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차별 금지)에 대한 유보 철회를 2021. 12. 28. 유엔에 통보하였고, 「자유권규약」 제22조(노조결성가입 및 결사의 자유) 유보 철회도 현재 검토 중이다.

4. 자유권 보장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권고와 관련된 법률·제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도입을 위해 가칭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22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 과정 중 이 협약의 내용 반영을 위해 2020. 12. 노동관계 3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였다. 그 결과 기존 6급 이하만 대상이었던 공무원 노조 가입의 직급 제한이 삭제되어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었다.

5. 군 인권에 대한 종합적 권리구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1]이 2022. 7. 1. 위원회에 신설되어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Ⅱ. 각 부문별 인권 상황 및 우려 사항에 대한 권고

평등 및 비차별

6. 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지 14년만인 2020. 6. 30. 「평등법(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였다.[2]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는 2022. 5. 25.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국회 통과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7. (권고 제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모든 사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자유권

8.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나,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추진 일정 제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

9. (권고 제안) 사형제의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을 검토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10. 위원회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4)]에 대하여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 차례 인권침해의 시정을 권고[5)]한 바 있으나, 이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성인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협소하고 전반적 환경이 열악하다.

11. (권고 제안)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인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2.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 정당 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를 이유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6)]

13. (권고 제안)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보 인권

14.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법원, 수사기관 등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필요하다면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 통제절차가 미비하며,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내역 통보절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7)]

15. (권고 제안)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 요구 시,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사후 통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16.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의 발달과 확산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발생,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인식·합성 기술을 이용한 감시, 인공지능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권리구제 제한, 인공지능의 결정에 의한 편향과 차별 등 인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8)]

17. (권고 제안)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 및 인공지능의 결정에 따른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인권조약

18. 핵심 9개 국제인권조약 중 대한민국이 미가입한 조약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강제실종방지협약」이며, 미가입한 선택의정서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개인 진정)」 등 총 5개다.[9)] 정부는 미가입 조약의 가입 및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서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비준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 (권고 제안)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비준, 유보 조항의 철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국제인권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가 국내에서 온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진정에 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 절차에 대한 근거법령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21. (권고 제안) 국제인권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권고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또한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결정이 국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2. 1. 18. 개정되어, 교통사업자가 시내버스를 새 차량으로 교체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구매해야 하나, 시외버스는 여기에서 제외되었다. 2022. 5. 1.부터 신축, 증축, 개축되는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소매점 등 공중이용시설은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하나, 그 이전 설치된 시설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10)]

23. (권고 제안)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 및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4. 2016년 5월 (구)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요건 및 절차가 강화되었으나,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심의 치료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11)]

25. (권고 제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가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치료·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6. 정부가 2021년 확정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관련 근거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려마저 미흡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전략이 미비하다.

27. (권고 제안)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이 로드맵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전략을 포함시켜야 한다.

군인권

2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1. 시행되어, 2021. 6. 기준 3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교정시설에서 복무 중이다. 그런데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2배 길고, 일과시간 이후에도 교정시설 내 생활실에서 합숙 거주해야 하며, 복무 영역도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다.[12)]

29. (권고 제안) 대체복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복무 영역, 형태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0. 군 내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여군들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전 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공군 부사관에 대한 성폭행 등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들은 피해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31. (권고 제안) 최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을 비롯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군 내 성폭력 보호시스템의 작동 여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제반 상황 등을 확인하고, 제보자 색출, 불이익, 은폐, 회유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2. 군 사망사건은 지난 6년(2016~2021년)간 연평균 81건 발생했으며, 이중 자살사고는 연평균 58건으로 전체 군 사망사건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13)]

33. (권고 제안) 군 내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특히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4. 헌법재판소는「군형법」제92조의6(추행) 관련 위헌성에 대해 2002, 2011, 2016년 세 차례 합헌 결정을 하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 4건(2017년 3건, 2020년 1건)이 진행 중인바, 정부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14)] 한편, 2022. 4. 21. 대법원은 동성인 군인 간 성관계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군형법」제92조의6(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35. (권고 제안)「군형법」제92조의6은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군형법」제92조의6을 폐지하여야 한다.

노동 인권

36.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 확대 등을 규정한「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부터 시행되었으나, 노동 현장을

비롯한 생활 곳곳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같은 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2. 1. 27.부터 시행 중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 적용이 제외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의 약 63%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15)]

37. (권고 제안)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장치로써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38. 위원회는 2020. 12.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했으나 정부는 불수용하였다. 위원회는 2021. 11.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다.

39. (권고 제안) 정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하고,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여성 인권

40.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서, 국회에 2020. 12. 31.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였다.[16)] 그러나 2020. 12. 31.까지 낙태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죄는 현재 자동 폐지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임신중절수술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지만, 후속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 중단 여성의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

41. (권고 제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가 자동 폐지된 상황에서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해 임신중단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임신중단약물의 허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일 양국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피해자 구제와 진실규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17)]

43. (권고 제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치유를 위해,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4. 대한민국은 2021~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적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등 젠더 갈등이 증폭되었다. 특히, 성평등 이슈가 정치화돼 여성혐오를 조장하고, 젊은 남성 사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젠더 갈등이 보다 심화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18)]

45. (권고 제안) 여성에 대한 혐오 및 차별금지, 성평등 증진 및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 인권

46.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19)]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21. 12. 23. 합헌 결정(2020헌마395) 이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심화, 협상력 약화라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20)] 한편,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 및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행위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21)]

47. (권고 제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사유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8.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1994년 이후 2020년 4월까지 난민신청자 68,761명 중 난민인정자는 1,052명으로 난민인정률은 1.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22)] 한편,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인정 심사 불인정 결정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49. (권고 제안)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받도록 난민인정심사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난민인정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독립적 기구에 의한 구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동 인권

50.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23)]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2018헌바524) 하였다.[24)] 이와 관련,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입을 2차 피해와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1. (권고 제안)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관련, 향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52. 정부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기반의 인권경영 정책을 국내 민간기업에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인권실사(Due Diligence)에 관한 사항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25] 한편, 인권경영정보 공시(비재무정보공시) 제도 관련, 정부는 2조원 이상 매출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 세부 이행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53. (권고 제안) 대한민국 민간기업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실사(Due Diligence)에 관한 구체적 실사의무화법 제정 검토 및 인권경영정보(비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기후 변화와 인권

54.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대비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나,[26] 현행 법제에서 기후 변화 대책 수립 및 영향 조사, 기후 변화 감시예측 기관은 기상청이 유일하며, 재해·재난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은 분산되어 있다.

55. (권고 제안)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를 위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및 건설노동자, 농민 등 취약계층 인권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한 구체적 행동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 주)

1) 군인권보호관은 독립성이 강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2022. 1. 개정되어, 2022.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위원회가 2006년 차별금지법 시안을 만들어 정부에 입법 추진을 권고한 이후, 국회에서는 2007~2013년에 걸쳐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한 7건의 차별금지법안 발의가 시도되었으나 국회를 모두 통과하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평등법(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했으며, 2021. 6. 21.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이후 2021. 11. 10.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위원회 성명을 발표했으며, 2022. 5. 8. 위원장 성명을 통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는 등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3) 위원회는 2005년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장에 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2009. 7.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제출, 2018. 9.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2020. 10. 10.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위원장 성명을 통해 사형제 폐지 촉구, 2021. 2.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사형 폐지를 위한 권고, 의견표명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4)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과밀수용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2013헌마142) 하였다. 아울러, 부산고등법원은 2017. 8. 31.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의 수용행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과밀수용을 이유로 처음으로 수용자에게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는 판결(2014나50975)을 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그동안 과밀수용을 시급히 개선하라는 정책권고를 여러 차례 하였으며, 최근에는 매 진정사건마다 과밀수용이 인정되면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5) 위원회는 2022. 3. 28. 법무부장관에게 전국 교도소의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2021. 12. 23.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도,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6) 위원회는 2019. 2. 25.「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 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소관 법률 조항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참고로, 현행「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7)「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2022. 1. 6.「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근거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 12. 24. 발표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020년 548만4,917건(상반기 292만2,382건, 하반기 256만2,535건), 2021년 상반기 255만9,439건에 달하고 있다(전화번호 수 기준). 이는 대략적으로 국민 10명 당 1명 꼴로 제공된 셈이다. 수사기관 등이 한번 요청할 때마다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인바, 2021년 상반기에만

요청 문서 1건당 검찰 8.8건, 경찰 4.8건, 국가정보원 9.0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인공지능 기술을 인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용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사생활 보호나 평화로운 집회, 표현의 자유 등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2022. 4. 11. 인공지능(AI)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무총리에게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범정부적인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20. 4. 2. 김경진 국회의원이 2019. 11. 21.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인공지능에서의 인권 및 인간존엄성 존중 원칙,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원칙에 관한 규정과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표명한 바 있다.

9) 위원회는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2018. 9.),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에 관한 연구 및 결과 보고회」(2018. 11.),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의견표명」(2019. 2.),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촉구 콘퍼런스」(2019. 11.),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쟁점 간담회」(2021. 10. 29.),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 쟁점 간담회」(2021. 11. 24.) 등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정부에 가입 권고 및 의견표명, 가입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토론회·간담회 개최, 해당 조약기구에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촉구를 위한 활동을 시행 중이다.

10) 위원회는 지하철역 승강기 및 경사로 설치권고(2011. 9.), 장애인이 항공기 이용 시 필요한 물적·인적 서비스 제공하도록 정책권고(2016. 10.), 장애인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에 대한 접근권 보장 권고(2016. 11.),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권고(2017. 8.),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권고(2018. 1.) 등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물 접근권 제고를 위한 시정권고, 정책권고, 의견표명 등을 시행 중이다.

11) 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절차조력인 제공 관련 정책권고(2022. 4.),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위기쉼터 마련 의견표명(2022. 2.), 「정신건강복지법」 상 동의입원제도 개선 의견표명(2021. 6.),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작성 및 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정책권고(2021. 4.),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식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20. 12.),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2019. 8)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를 하였다.

12) 위원회는 2005. 12.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를 권고한 이후, 2019. 1. 3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한 점에 대해, 교정 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공익분야로 복무영역을 확대하고,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체복무 시행 이후 제도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향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국방부장관에게 하였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대체역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복무기간 18~21개월)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하여 36개월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13)

〈군 사망사고 중 자살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전체 군 사망사건(A)	81	76	86	86	55	103	81
군 자살사고(B)	54	52	56	62	42	83	58
사망 중 자살 비율(B/A)	66.7	68.4	65.1	72.1	76.4	80.6	71.7

* 출처: 국방부

14) 위원회는 지난 2010년 「군형법」 제92조 상 추행죄 조항은 “헌법에 정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군인 동성애자들의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고(2008헌가21 사건 관련), 2016. 7. 제3차('18~'2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서는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폐지를 명시하였으며, 2020. 7. 6. 법무부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폐지 입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15) 2020년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16) 위원회는 2020. 11. 30.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낙태 비범죄화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7) 위원회는 2012. 11.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유엔 인권조약기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속적 권고를 하고 있으며, 2017. 5. 30.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38명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2015년 한·일 양국 간 합의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합의를 수정(revise the agreement)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18) 2021년말 기준, 위원회에 접수된 남성 역차별 관련 집단 진정은 전체 성차별 진정 건수의 60% 가량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9)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 위원회는 2011. 12. 사업장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사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권고를 하였고, 2019. 12.「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장 변경제한 개선, 사업장 변경금지 원칙 폐지 등 정부의 이주민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 방향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진 과제를 관련 부처에 권고하였다. 참고로, 정부는 2021. 4.「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하여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등에 대해 사업장 변경을 확대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입국 특례 제도의 경우 신청권이 사업주에게만 있어 사업주의 배타적 결정에 의해서만 재입국 취업이 가능하고, 요건으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노동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는 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해야 한다.

21) 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 10.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과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22)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대한민국의 난민인정률은 1.3%로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을 제외한 19개국)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이었다.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24)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현행법은 피고인에게 이 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하는 효과적 방법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핵심 진술증거에 대한 충분한 탄핵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위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 이전에는 성폭력 재판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지 않아도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제출하고 조사 동석자가 사실확인을 하면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25) 위원회는 2014. 9. 25.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권고 후 4년이 지난 2018. 8. 9. 모든 공기업·공공기관(State Owned Enterprises, SOEs)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제도화 관련 권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1,580여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SOEs에서 실사(Due Diligence, 인권영향평가 포함)를 실시하는 등 기업과 인권 정책을 내재화하고 있다.

26) 위원회가 최초로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2021년 실시한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80.4%가 “기후 위기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93.7%가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2.1%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ritten Submission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42nd UPR Working Group Session for the review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July 202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in November 2001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is an independen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which is accredited 'A' status by the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is written submission is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made in the 3rd cycle of Universal Periodic Review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the 4th UPR cycle.

Contact details:
Web: http://www.humanrights.go.kr
Email: shchoi@nhrc.go.kr
Address: Narakium Jeo-dong Building, 340 Samil-daero, Jung-gu, Seoul, Korea 04551
Phone: +82 (0)2 2125-9887
Fax: +82 (0)2 2125-0918

Written Submission for the 42nd UPR Sess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HRCK)

Ⅰ. The Implementation of Previous UPR Recommendations

1. The Government announced in February 2018 that it will accept 121 and note 97 out of 218 recommendations from the 3rd UPR cycle. However, progress has not been made in implementing key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four equality legislation bills are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a large number of previous UPR recommendations were put forward on legislating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other grounds.

2. The previous UPR recommendations also emphasized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and the accession to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However, the Government maintains its previous stance that abolishing capital punishment would require the consideration of many factors including public opinion and criminal justice. Nevertheless, the Government took a step forward with casting a vote in favor of a moratorium on the use of death penalty at the 75th UN General Assembly in November 2020, recognizing Korea's de facto abolitionist status and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countries supporting the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3. During the 3rd UPR cycle, multiple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sig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re

has been some progress. The Government proposed to sig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21.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s currently reviewing the draft proposal of August 2021 to sig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n April 2021, the Government deposited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t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for three ILO conventions - *No. 87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No. 98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and *No. 29 Forced Labor Convention*. These conventions came into effect in Korea in April 2022. The Government also notified the UN in December 2021 that it will withdraw the reservation to Article 25 (e) of the CRPD related to the access to health and life insurance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Government is also considering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Article 22 of the ICCPR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4. Some developments have been made in laws and policies in response to the UPR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rights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has been introduced since January 2020, based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Assignment and Performance of Alternative Service*. In 2022, the Government is set to make a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bill to ensure birth registration to all children born in the territory of the ROK regardless of the nationality of their pare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mended three labor laws -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 in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ILO Convention on freedom of association.

Consequently, the scope of public officials who can join labor unions has been extended to public officials in Class V or higher. The amendments have also allowed fire officers and retired public officials to enter unions.

5. On 1 July 2022, Human Rights Protector for Military was established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n order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access to remed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military.[1]

Ⅱ. Issues and Recommendations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6. The NHRCK proposed a draft of *Equality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0 for prompt legislation, 14 years after its first recommendation to the then Prime Minister in 2006 calling for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2] Four anti-discrimination bills are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public hearing to discuss the bills was held on 25 May 2022. However, the legislation of the Act is kept delayed.

7. **Recommendation:** Initiate immediately the legislative process to enact the *Equality Act*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other grounds in all spheres of life.

Civil and Political Rights

8. Although Korea has *de facto* abolished death penalty, the Government persistently views that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would require the consideration of many factors an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timeline for abolition.[3]

9. **Recommendation:** Consider abolishing the capital punishment and introducing alternatives to death penalty, and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on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10. The NHRCK conducted on-site and ex-officio investigations on overcrowding[4]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ade recommendations[5] for improvement more than 10 times in the past. However, the overcrowding still persists. The NHRCK inquiry found that personal living spa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is so small that inmates must be careful not to bump into each other even in their sleep.

11. **Recommendation:** Take measures to reduce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which is inhumane and degrading treatment.

12. The *State/Local Public Officials Act*, the *Political Parties Act*,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ohibit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from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including political expression, political party membership, and campaigning for election, on the basis that such activities might undermine political neutrality.[6]

13. **Recommendation:** Revise the Acts above and relevant laws, not to excessively restrict the political freedom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Privacy and Information Rights

14. Under Article 83(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courts and investigative agencies may reques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to provide communications data without a warrant,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rial or investigation. However, the scope and extent of request are too broad, and a proper system to control pre-and-post procedures does not exist. Procedures to notify users of the us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are not in place.[7]

15. **Recommendation:** Introduce control systems and procedures that prevent investigative agencies from arbitrarily using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83(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16. With the development of big data-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human rights concerns are escalating, such as invasion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surveillance using AI-based technologies, and bias and discrimination resulted from decisions made by AI systems.[8]

17. **Recommendation:** Take measures to prevent big data-based AI systems from causing human rights violation and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18. Korea has not acceded to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five Optional Protocols including those on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and the individual complaints under ICESCR.[9] The Government views it needs

to carefully consider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consistency with domestic laws and potential social impacts before the accession.

19. **Recommendation**: Take necessary measures to accede to and ratif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bove and to withdraw reservations from the treaties.

20. The ratified international treaties have the same effect as domestic laws under the Constitution. However, recommendations from human rights treaty bodies are not fully implemented in the country. Particularly, the decisions of human rights treaty bodies on individual complaints are not often followed due to the absence of laws enabling the implementation of such decisions.

21. **Recommendation**: Take necessary measures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legislate law to implement the decision of treaty bodies on individual complaints.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2. Amendment was made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in January 2022, in order for transport business entities to purchase low-floor buses when replacing existing buses with new vehicles. However, intercity buses are excluded from this legal obligation. Public facilities, including restaurants and retail stores with a floor area of 50 square meters or more, shall be equipped with amenities for disabled people when they are newly built, expanded, or renovated from 1 May 2022. However, the existing facilities are an exception, which makes it hard for disabled people to access.[10]

23. **Recommendation**: Strengthen legislative measures and financial support to enhance the ac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public facilities.

24. The former *Mental Health Act* was fully amended 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May 2016, which introduced stricter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mentally ill persons. However, the practice of hospitalization still persists.[11]

25. **Recommendation:** Minimize the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mentally ill persons, and establish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and treatment systems so that mental health patients can be treated within their communities as much as possible.

26. The *Road Map for Community-based De-facility Support Measure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in 2021, is considered impractical and ineffective due to the absence of laws enabling this plan. It also lacks strategies to tackl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27. **Recommendation**: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Road Map for Community-based De-facility Support Measures,* and incorporate strategies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into this road map.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28. About 300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conscientious objectors) serve their duty in correctional facilities as of June 2021, with the *Act on the*

Assignment and Performance of the Alternative Service enforced since January 2020. The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are required to serve for 36 months, nearly double the service period in the military; to serve only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o stay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even after work hours.[12]

29. **Recommendation**: Establish plans to improve the period, area and duty of alternative service to protect the rights of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30. With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military increasing, the cases of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against female soldiers are being continuously reported. The incidents of sexual assault in the military, including recent violence against a female Air Force officer, illustrate that the military system to protect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does not function properly.

31. **Recommendation**: Review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mechanisms on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considering a sexual assault survivor's suicide recently, and take measures to prevent wrongdoings such as retaliating sexual violence reporters, concealing incidents or placating the victims.

32. The average number of annual death case in the military was 81 in 2016-2021. Suicide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accounting for 72% of all military deaths.[13]

33. **Recommendation**: Intensify the effort to prevent suicide in the military, paying attention to identifying the root causes of suicide and th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eventive strategy.

34.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92-6 (Indecency Act)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as constitutional, three times in 2002, 2011, and 2016. Currently, four related cases - 3 cases in 2017 and 1 case in 2020 - are under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Government is willing to comply with the Court's decision.[14] Meanwhile,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military convictions of two gay soldiers on 21 April 2022, reasoning that if same-sex sexual acts took place off base, while they were off duty and by mutual consent, the *Military Criminal Act* does not apply. It further provided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acts between the soldiers to infringe directly and specifically on military discipline and healthy life in the military community.

35. **Recommendation**: Repeal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violates rights to equality,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privacy of gay soldiers in the military.

Labor Rights

36.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as enforced from January 2020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create a safe working environment by expanding the responsibility of original contractors. However,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occur repeatedly.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entered into force from January 2022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workers and citizens from industrial accidents. However, it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es with fewer than five employees and becomes effective from January 2024 for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According to 2020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bout 63% of work-related deaths occurred at workplaces with fewer than five workers or 50 employees.[15]

37. **Recommendation**: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safeguard the lives and safety of workers and citizens effectively,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rough stricter law enforcement when industrial accidents occur.

38. The NHRCK recommended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for indefinite-term contractors employed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December 2020, which was not accepted by the Government. With a concern for platform workers being often excluded from labor protection, the NHRCK issued its opinion on the bill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Platform Workers in November 2021, stating that platform workers should be considered employees protected under labor laws.

39. **Recommendation**: Reduce the gaps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those in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nd guarantee the labor rights of people in new forms of work including platform workers.

Rights of Women

40. On 11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penalizing a pregnant woman and a doctor who conducted abortion is unconstitutional and therefore the relevant provision in the *Criminal Act* should be revised accordingly by 31 December 2020.[16] However, the criminal provision was not amended until the designated date, and thus it was repealed automatically. The lack of follow-up measures on legislation may undermine the right to health of women who have abortions.

41. **Recommendation**: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vide the access to safe abortion, including insurance coverage of abortion and medication abortion,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bove.

42. The *2015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has not received support from the public as well as the victims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raised concerns that the agreement lacked seeking truth and redressing victims.[17]

43. **Recommendation**: Take active measures to ensure the rights to justice and remedies for the victims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44.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in 2021-2022, the Korean society witnessed the escalation of gender conflict, including hatred and violent expression against women, and controversy over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politicization of gender equality exacerbates hatred against women and anti-feminist sentiments among young men, deepening gender conflict.[18]

45. **Recommendation**: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to eradicate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o tackle gender conflict.

Rights of Migrants

46.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25(1)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19] restricting the grounds for migrant workers to change workplaces is no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December 2021. It is concerned that this decision may exacerbate foreign workers' dependency on employers and weaken their bargaining power.[20] On the other hand, detainees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during deportation process are occasionally at risk of human rights abuses such as ill treatment and solitary confinement.[21]

47. **Recommendation**: Reduce excessive restrictions for migrant workers to change workplaces,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detainee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48. Korea ratified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1992 and enforced the *Refugee Act* since 2013. Among 68,761 asylum-seekers from 1994 to April 2020, only 1,052 received refugee status, indicating very low acceptance rate of 1.5%.[22] Furthermore, there is no appeal process for those rejected refugee status.

49. **Recommendation**: Increase the fairnes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to guarantee the rights of refugee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Refugee Act*, and establish the appeal and remedial procedures in an independent body for those rejected refugee status.

Rights of Children

50. On 23 December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30(6)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which prescribes that a video recording of a statement made by a sexual crime victim under the age of 19 during an investigative interview process may be admitted as evidence, is unconstitutional, viewing that the current law violates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trial.[24] It is concerned that victimization and further damage can be inflicted on the under-aged victim during testifying in court, and criminal reporting of sexual violence by juvenile victims can be reduced.

51. **Recommendation**: Take additional measures to prevent victimization of and further damage to under-aged sexual crime victims, in response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bove.

Business and Human Rights

52. The Government has not developed any initiatives to integrate the *UN Guiding Principles i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to business practices of private sector and to promote corporate human rights due diligence.[25] The Government announced it would adopt a system by 2030 under which companies with sales of KRW 2 trillion or more should disclose human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However, this strategic initiative lacks implementation plans.

53. **Recommendation**: Legislate laws to obligate the exercise of corporate 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introduce a system for disclosure of human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54. Long-term and integrated plans and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induced disasters.[26] However, currentl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s the only authority to monitor and predict climate change, asses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prepare response plans. Responsibilities to respond to emergencies and disasters are scattered over multiple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55. **Recommendation**: Establish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on climate risk and make action plans to protect the rights of people vulnerable to climate risk, including construction workers and farmers.

UPR Written Submission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uly 2022

Endnote

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was amended in January 2022 to establish the Human Rights Protector for Military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will independently perform tasks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from 1 July 2022.

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commended the Government to promote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2006, with proposing a draft model of anti-discrimination act. While seven bills for equality legislation were proposed by lawmakers from 2007 to 2013, any of them was not legisl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20, the Commission prepared a draft model of the *Equality Act* and submitted 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 a statement calling for prompt legislation of the Act. The Commission released statements for the legislation of the Act again, respectively on 21 June 2021 and 10 November 2021. The Commission continues its effort to legislate the *Equality Act*, releasing another statement to promote the prompt enactment on 8 May 2022.

3) In 2005, the Commission expressed its opinion to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at "capital punishment should be abolished as it infringes upon intrinsic elements of the right to life." Since then, the Commission has continued its effor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Republic of Korea in various ways, including submitting its opinion on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 July 2009; recommending the accession to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the Prime Minister,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er of Justice in September 2018; releasing a statement to call for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on the occasion of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in 10 October 2020; and submitting an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appeal relating to the death penalty in February 2021, stating that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essence of the right to life and thus it should be abolished.

4) Concerning the issue of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e Constitutional Court, on 29 December 2016, ruled that if the accommodation area per pers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overly small to cause interference with meeting the basic needs of a human being, it is considered not only as an excessive use of penal power but also a violation of human value and dignity (Case Code: 2013Hun-Ma142). Similarly, the Busan High Court viewed that the period of imprisonment failing to satisfy the minimum standard of accommodation area ($2m^2$ per an inmate) harms the human dignity and worth of prison inmates and thus it decided that the State should compensate inmates partially, for the first time ever on 31 August 2017 (Case Code: 2014Na50975). The Commission has made policy recommendations several times to address the issue of overcrowding in prisons and detention facilities. Recently, the Commission made a move to acknowledge the overcrowding as human rights violation and demand the Minister of Justice to take appropriate actions to resolve it every time the overcrowding is found in individual complaint cases filed to the Commission.

5) The Commission recommended on 28 March 2022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should take measures immediately on the overcrowded imprisonment of female inmates. In addition, the Commission made a recommendation for the Minister of Justice to take necessary measures to reduce the overcrowding expeditiously, reasoning that the overcrowding is considered not only as an excessive use of penal power but also a violation of human value and dignity if the accommodation area per pers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overly small to cause interference with meeting the basic needs of human being.

6) On 25 February 2019, the Commission made recommendations to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the Minister of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the Chairperson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o amend the relevant laws and decrees, not to excessively restrict the political freedom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The Commission viewed that, considering the Constitu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e legal practices of other States and the legal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n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it constitutes a human rights violation to prohibit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from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making political expression, joining a political party and participating in election campaigns, under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other relevant laws. Currently, the Article 4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stipulates that labor unions of public officials and their members shall not engage in any political activities; the Article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provides that the unions of teachers shall not engage in any political activities; and the Article 65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prohibits public officials from engaging in any political activities.

7) The Article 83(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tates that a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may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and data such as nam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ddresses, and phone numbers of users, etc. from courts, prosecutors, investigative or intelligence agencies,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rial or investigation. Based on this provision,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recently conducted extensive inquiries of personal communication records. The Commission issued a statement, on 6 January 2022, expressing concerns over these incidents and urging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and systems. According to the public release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n 24 December 2021, a total of 5,484,917 communications data was provided b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to investigative authorities in 2020, and 2,559,439 communications data in the first half of 2021. This figure of data, calculated based on phone numbers, indicates that about one in ten people "offered"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the authorities. It is also concerned that it is openly practiced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request communications data of multiple people together for a single case. In the first half of 2021,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requested communications data for 9.0 persons per request, followed 8.8 persons per request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4.8 persons per request by the police, and 4.7 persons per request by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8) Since Artificial Intelligence (AI) can bring negative impact on a wide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effects of AI on human rights issues, including privacy protection, peaceful protects and the freedom of speech, should be analyzed thoroughly. In this regard, the Commission made a guideline which civil societ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follow in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 in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eveloping and utilizing AI, and it recommended the Prime Minister, on 11 April 2022, to make necessary adjustments and integrat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in order to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based on the Commission's guideline.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bill for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Business proposed on 21 November 2019 by Assemblymen Kim Kyeong-jin, the Commission expressed its opinion to the National Assembly (Committee of the Science, ICT, Future Plann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on 2 April 2020 that the proposed bill must include provisions to respect human rights and dignity, to prevent discrimination caused by AI, and to specify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setting up basic policy plans.

9) The Commission has urged the Government to sig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hat Korea has not acceded yet in various ways such as issuing its opinions, conducting research and inquiries, holding forums and discussions, and submitting documents to the treaty bodies. Those activities include recommending the ratification of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n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eptember 2018); holding a public forum to discuss the research findings on the accession to the *Third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ovember 2018); expressing an opinion for the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ebruary 2019); hosting a conference to promote the accession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November 2019); and organizing discussion sessions to accede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9 October 2021)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24 November 2021).

10) The Commission presented several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to enhance the ac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facilities. Those include recommendations or opinions on installing elevators and ramps in subway stations (September 2011); providing physical and human services when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airlines (October 2016); ensuring accessibility to passenger ships in a safe and convenient way (November 2016); installing lift facilities for wheelchair-users in express buses and intercity buses (August 2017); and amending laws and regulations to enhance accessibility to small-scaled public facilities including restaurants, retail stores and pharmacies (January 2018).

11) The Commission put forward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to ensure human rights for disabled people including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Those include recommendations or opinions on providing assistants who advise mentally ill persons in the process of hospitalization to mental health institutions (April 2022); establishing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services including "emergency support shelters" (February 2022); improv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involuntary admission to mental health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June 2021); advising new policies to the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based on the Commission's *Human Rights Report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2021* (April 2021); proposing strategies for reducing social stigma, discrimination and prejudices on people with mental illness (December 2020); and establishing the *Road Map for Community-based De-facility Support Measures* (August 2019).

12) In December 2005, the Commission made recommendation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o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Korea. The Commission also presented its opinion to the Minister of Defense, on 31 January 2019, on the legislative bill on the Assignment and Performance of the Alternative Service which required the service period of 36 months and restricted the service areas to correctional facilities. It stated that the alternative service areas should be expanded to public and social service beyond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service period should be adjusted not to exceed 1.5 times of military service period, based on the reviews of social benefits and side effects of alternative service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response, the Ministry of Defense explained that the alternative service period of 36 months was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 service period of the active service (18 - 21 months), other types of alternatives to military service such as public health doctors (34 - 36 months) as well as concerns over abusing alternative service for the purpose of evad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13)

〈Status of Suicide in the Military〉

(Unit: case, %)

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vg.
Total fatal accidents (A)	81	76	86	86	55	103	81
Suicide (B)	54	52	56	62	42	83	58
Suicide rates (B/A)	66.7	68.4	65.1	72.1	76.4	80.6	71.7

* Source: Ministry of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14) In 2010, the Commission submitted its opin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rticle 92 (Indecency Act)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prohibits soldiers from engaging in same-sex sexual acts, stating "the Article 92 violates the right to equality,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and privacy of personal life of gay soldiers in the military, failing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 no penalty without a law." (Case Code: 2008Hun-Ga21) In July 2016, the Commission also recommended the Government to include repealing of Article 92 (Indecency Act)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s one of key agendas to protect the rights of sexual minorities in the 3r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18 - 2022 (Human Rights NAP). In addition, the Commission put forth its opin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on 6 July 2020 that the draft version of the 5th state report on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hould include the abolition of Article 92 (Indecency Act)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15) A total of 2,062 cases of work-related deaths (5.6 cases per day on average) occurred in 2020.

16) The Commission presented its opinion to the Speaker of National Assembly, on 30 November 2020, on the bills of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proposed by the Government. The Commission expressed that the abortion should be decriminalized, considering that criminalizing and punishing abortion infringes on the rights to life, health and self-determination and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17) In November 2012, the Commission strongly urged the Government of Japan to acknowledge and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victims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omfort Women'), offer formal apology, and compensate the victims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s from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Also, the Commission requested the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diplomatic measures in an active and effective manner, in order to help recover the victims' rights and dignity. The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ve constantly made recommendations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30 May 2017,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pointed out that the *2015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as not enough to uncover truth and vindicate the rights and dignity of the victims, while noting 38 wartim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were alive. The Committee also recommended to revise the *2015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as to restore the dignity and honor of the victims.

18) As of the end of 2021, the complaints filed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argue adverse effect discrimination against men accounted for 60 percent of total complaints on sex discrimination. Such trend is in steady increase.

19) Article 25 (Permission for Change of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 a foreign worker (excluding a foreign worker under Article 12(1)) may file an application for change of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with the head of an employment security offi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 If his/her employer intends to terminate his/her employment contract during the contract period or intends to refuse renewal of his/her employment contract after its expiration, on justifiable grounds.
2. Where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gives public notice as he/she deems, under a social norm, that the foreign worker is unable to continue to work in the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on

a ground not attributable to him/her such as temporary shutdown, closure of business, cancellation of the employment permit under Article 19(1), limitation on the employment under Article 20(1), provision of a dormitory in violation of Article 22-2, or his/her employer's vio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r unfair treatment.

3. Where any other cause or ev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ccurs.

20) In order to protect migrant workers from human rights abuses at workplace, the Commission recommended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n a way to allow for migrant workers a wider range of reasons to change workplaces, in December 2011. The Commission developed the *2nd Guidelines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s* in December 2019 which put forward human rights policies and tasks for the Government to carry out, such as easing the regulations that prohibit or restrict the change of workplace. In April 2021, the Government stated that it will revise the *list of reasons allowing the change of workplace* so that migrant workers can change workplace for reasons of employers' abusive treatment to migrant workers or violation of working conditions or others not caused by migrant workers. However, the *Special Permit for Re-entry to Korea and Employment* provides employers with the exclusive right to request the employment of the migrant worker returning to Korea, which means foreign workers cannot apply for an employment permit after re-entry to Korea without employers' permission. In addition, migrant workers should work at the same workplace for certain period. In cases of migrant workers changing the workplace on the ground not attributable to them, the period of the employment contract with new employers should exceed one year.

21) In October 2021, the Commission made recommendation to the Minister of Justice to improve human rights standards and practice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in order to prevent the repeated occurrence of human rights abuses on foreigners and migrants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The recommendation included avoiding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detention officers on detainees; taking measures to minimize the physical pain and the harm on human dignity when using protective equipment on detainees in exceptional cases; and ensuring procedural due process such as offering an opportunity for explanation and testimony prior to enforcing 'special safe guarding' (solitary confinement, etc.) on detainees.

22) According to the UNHCR document, the refugee acceptance rate of the Republic of Korea between 2010 and 2020 is 1.5 %, indicat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ranks near the bottom (the 18th lowest) out of Group of 20 Countries (19 states and the EU).

23) Article 30 (Taking and Keeping of Video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1) Where the victim of a sexual crime in under the age of 19 or lacks the ability to discern things or make decisions due to any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the statements made by the victim and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shall be recorded and kept by using a video recording device, such as a videotape recorder.

(6) The statements made by a victim in a video recording made under paragraph (1) may be admitted as evidence only when they are duly authenticated by a statement of the victim himself/herself, and a person in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the victim who was present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or an intermediary on a preparatory hearing date or a hearing date.

24)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rticle 30 (6)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is unconstitutional. The Court reasoned that the statement made by a victim in a video recording could often be used as key evidence due to the nature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the current law, nonetheless, does not guarantee the right to cross-examine, the defendant's right to question the evidence brought against him/her in court. Thereby, the defendant's right to protect himself/herself could be seriously limited, which leads to the conviction of a defendant without having sufficient opportunity to question the statement made by a victim and brought against him/her. Before this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video-recorded statements made by a victim of a sexual crime in under the age of 19 may be admitted as evidence in the court, without physical attendance of the victim in the court, when the video recording was made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and a person in a relationship of trust with the victim who was present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25) On 25 September 2014, the Commission introduced *Human Rights-based Business Management Guidelines and Checklists* for the use of business entities. Four years later, on 9 August 2018, the Commission recommended all state-owned enterprises (SOEs) in Korea to institutionalize and implement the *UN's Guiding Principles in Business and Human Rights*. By far, approximately 1,580 SOEs, while integrating the human rights principles into their business policies, have exercised corporate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clud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26) The Commission conducted an inquiry on the theme of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for the first time in 2021 - *Inquiry on the Public Awareness o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Climate Policies*. According to the inquiry, 80.4 percent of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are interested in the issue of climate crisis," and 93.7 percent of respondents agreed that "the climate crisis is serious." Just 52.1 percent of those survey said that "they are aware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human rights."

3. 제4차 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22. 11.,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대한민국 국가보고서[1)]

2022. 11.

1)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권 - 국제인권규범 - 정보 및 자료]

목 차

Ⅰ. **서론**

Ⅱ. **보고서 작성방법 및 준비 과정**

Ⅲ. **제3차 UPR 권고사항 이행 결과**

1. **이행한 권고**
   a.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이행
   b. 국내 제도의 변화
   c. 시민적·정치적 권리
   d.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e. 여성
   f. 아동
   g. 장애인
   h. 이주민과 난민
2. **이행 중인 권고**
   a.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이행
   b. 국내 제도의 변화
   c. 시민적·정치적 권리
   d.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e. 여성
   f. 장애인
   g. 이주민과 난민
3. **이행하지 않은 권고**
   a.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이행
   b. 국내 제도의 변화

Ⅳ. **자발적 공약의 이행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가적 노력**

Ⅰ. 서론

대한민국 정부는 (이하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16/21에 따라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동 보고서는 지난 2017년 11월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 이후 권고들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와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한 입법, 사법, 행정 및 기타 모든 적절한 조치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동 보고서 제출 이전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대한 이행현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2022년 4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으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Ⅱ. 보고서 작성방법 및 준비 과정

대한민국 법무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 17/119에 기반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작성 지침에서 권장한 바와 같이 권고의 이행현황을 작성하면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참고하였고, 관련 목표를 지난 심의 권고와 함께 기재하여 그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인권 보호와 SDG 달성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12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시민사회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여 일부는 국가보고서에 반영하였다.

Ⅲ. 제3차 UPR 권고사항 이행 결과

1. 이행한 권고

a.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이행

대한민국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조약상의 의무를 다하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대한민국은 모든 주제별 특별절차에 대해 상시초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별보고관[1]의 국가방문 동안 건설적인 상호대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는 OHCHR 서울사무소와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권고 130.7.~130.9.)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e호 유보 철회

2008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금지한 「상법」 제732조와의 상충을 우려하여 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제e호의 적용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2014년 3월 동 조항을 개정하여 의사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2021년 12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제e호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권고 132.12.)

기업과 인권

정부는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면서, 기업과 인권 분야를 다루는 별도의 장을 편성하여 관련 정책과제를 담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또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국가가 이를 장려할 의무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을 2021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2021년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하였고, 2021년에는 기업들이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적 기준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권고 130.26., SDG12.6)

국제개발협력

정부는 우리 개발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1) 2018년 5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2019년 7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2017년 12월, 2018 7월, 2019년 1월과 6월, 2022년 2월 및 6월, 8~9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2022년 6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2021~2025년)에 ODA 정책 수립 및 사업 기획 시 젠더 및 인권에 대한 고려를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인권기반 접근법에 기초한 개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인권분야 중기전략(2021~2025년),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0~2023년)에 따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 중이다. 또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무상협력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인권을 내재화하였다. 나아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KOICA 제2기 인권경영 이행계획(2021~2023년) 등에 기초해 사업수행기관에 의한 현지주민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권고 132.69.)

b. 국내 제도의 변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부는 인권보장의 제도적 실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2018~2022년). 그 과정에서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였고 관계 부처와 수시로 협력하였다. 정부는 현재 새로운 인권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권고 130.12.~130.1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회 각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권위원 임기만료와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인권위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고, 금고 이상 형 선고 외에 신분이 보장되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인권위는 조직의 독립성과 투명하고 참여적인 위원선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고 130.10.~130.11., SDG16.a)

군인권 증진

2014년 선임병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故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오랜 논의를

거쳐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담당하는 군인권보호관과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군 내 자살예방을 위하여 식별·관리·분리의 단계별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운영하고, 복무 중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군 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군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2022년 국방부와 각 군에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군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증원하였다. 또 가·피해자 분리규정을 신설하고 사건처리절차를 정립하고 2차 피해 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 2022년부터 매년 군 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익명성 보장과 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모바일 기반 앱을 개발하고 있다. 또 근본적인 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급별 직무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성인지 교육과정을 개발 및 시행하고 있다.

인권교육

교육부는 2018년 교육과정 학습주제에 인권교육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인권교육 관련 학습자료 개발, 다양한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학교 자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부터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협업하여 학교구성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추진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2017~2018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17개 광역시도 교육감과 공동선언을 하였고, 2020년 대학인권센터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공무원 인권교육, 언론인 인권교육 등 공공기관, 사회 등 각 분야별 교육대상자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인권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권고 130.65., SDG4.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c. 시민적·정치적 권리

인신매매 근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정의하고 있으며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식별·보호·지원의 강화,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하여 정부는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처별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의 개발 및 활용, 인신매매 사례 판정,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생계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는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 (권고 130.44.~130.47., 132.112., SDG8.7, 16.2, 16.3)

가정폭력 방지

정부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정의를 확대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등을 운영하여 상담과 보호, 의료 및 법률 지원,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 2020년도에는 가정폭력 상담소 인력을 증원하고 직업훈련비 지원 등 취업지원 시범사업 추진, 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 및 주거 안전을 강화하였다. 피해자 지원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있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매년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권고 130.27.~130.35., SDG5.2, 16.3)

2)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2021년 428,911건의 상담을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2021년 입소자를 대상으로 172,385건의 심리·치료, 수사, 의료·법률 연계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2021년에는 8,996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진료건수 13,870건)하고, 11,010건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 및 상담을 지원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2021년 313,868건의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긴급피난처를 통해 5,433명을 임시보호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와 관련하여 제3차 심의의 불수용 입장을 변경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동 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를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2020년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22년 6월 기준 886명이 교정시설에서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은 2019년 2월을 마지막으로 석방이 완료되었다. (권고 132.94.~132.106., SDG16.1)

사생활권의 보장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인터넷 회선의 패킷 감청으로 광범위한 통신 감청이 가능하게 했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동 법은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고,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으로 개정되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후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논의 중이다.

d.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소외계층을 위한 조치

정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직계혈족 등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였다.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하는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 2017년부터 국가의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지원센터 등 인프라 확충,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019년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등 국가의 돌봄책임을 강화하였다. (권고 130.23.~130.2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주거의 보장

정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취약거처 거주자 방문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제도를 안내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여부를 상담하는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의 공백으로 적절한 주거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또 정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연평균 4만호 공급하였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SDG11.1)

노인복지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노인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받고 사례를 조사하며 상담·법률·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2021년 34개소에서 37개소로 확충하였다. 또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여 2020년 약 5만명이 이수하였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화재나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모니터링, 대응조치,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까지 댁내장비를 최신장비로 교체하여 30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권고 130.55.~130.62.)

한부모가족 지원

정부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9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하였다. 또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만 25~34세 이하 한부모에게는 월 5~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하여 2021년 4월부터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권고 130.48.~130.49. SDG5.1, 8.5)

노동기본권 강화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며, 2019년 10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방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0월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의결하였다. 이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2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2022년 6월 기준 15개 직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은 2022년 1월 퀵·대리기사 등 2개 직종을 추가하여 14개 직종에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21년 9월에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 조성, 일하는 환경 개선, 일자리 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권고 130.51., SDG8.8)

건강한 노동환경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2019년 7월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및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후 「근로기준법」을 추가 개정하여(2021년 10월 시행) 사용자(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와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도입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SDG8.5, 8.8)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조치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규직 채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2017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고용형태공시제도를 확대·강화하였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이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3] 정부는 전체 근로감독에 비정규직 차별을 필수 점검 항목으로 포함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다. 2010년부터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을 운영하여 전국 사업장에 차별 진단 및 개선 방안을 제공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 등 담당자에게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용구조개선지원단을 구성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고용구조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권고 130.52.~130.53., SDG8.5, 8.8)

비용 걱정 없는 교육

정부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없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 받도록 하였다.[4]또 공공부조제도로서 가구 소득이 중위값의 50% 이하인 가정의 아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무상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 9월 교육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항목별로 나누어 지급하던 교육급여를 통합하여 수혜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하였다. (권고 130.63.~130.64., SDG4.1, 4.2)

e. 여성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정부는 여성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 여성폭력이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동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동법에 따라 2020년 2월 제1차

3) 이로 인해 근속기간 1년 6개월 초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016년 6월 16.8%에서 2019년 6월 26.0%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규직 전환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1년 6월 전년 동월대비 정규직 전환 인원이 12% 증가하였다. 한편, 300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중 소속 외 근로자(파견, 용역, 도급 계약) 비중은 2021년 17.4%로 2020년 18.3%보다 감소하였다.

4) 대한민국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고교 진학률 99.7%로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2020년에는 2, 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되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범정부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회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였다.[5] (권고 130.18, 130.23.~130.24., 130.30., 130.33., 130.35., 130.71., SDG5.1, 5.2, 16.1, 16.3)

스토킹범죄 근절

정부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하여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동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고 130.30., 130.33., 130.35., 130.71., SDG5.1, 5.2, 16.3)

디지털성범죄 근절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2018년 4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24시간 상담,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지역 단위 상담소를 운영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21년 7월 시행)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지원 요청 대상자를 본인, 직계친족, 형제·자매에서 대리인까지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초·중·고 학령별 콘텐츠을 제작(2021년)하고 교육 플랫폼을 개설(2022년)하여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5)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 「직장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다.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성적으로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물 등 제작·반포,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시청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2020년 6월 시행)하고 불법촬영물 관련 법정형을 상향(2020년 5월 시행)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즉시 삭제의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였다. (SDG5.2, 16.1)

성폭력피해자 지원

정부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성폭력피해 상담, 법률구조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을 하고 있다. 또 해바라기센터[6]를 운영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권고 130.27.)

젠더주류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여러 다른 법령에 반영되었다. 2021년 기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은 40%를 초과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2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내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 젠더주류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20년 5월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통계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언론·미디어 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7] (권고 130.17., 130.19.~130.21.)

고용상 성평등 촉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고 성별 임금차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

6)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해바라기 센터"라는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7) 대중매체 성차별 사례 심의요청 건수는 2017년 119건, 2018년 268건, 2019년 323건, 2020년 579건이다. 성평등 미디어 교육 대상은 201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단에서 2018년 청소년, 2020년 방송·언론인까지 확대하였다.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8] 정부는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해 남녀 근로자 및 관리자 현황 등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운영하고 있고, 대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 전체 공공기관 및 전체 지방공사·공단까지 포함하였다. 2017년부터는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를 시행하였다.[9] 또 남녀근로자 임금격차 현황 및 원인 분석 제출 대상을 AA 대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부진사업장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다.[10]

정부는 사회 각 분야 청년여성이 여성리더와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진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여성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규 발굴하고 육성을 지원하여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11] 또 2018년부터 여성의 경력개발과 직장적응, 기업의 문화개선을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2022년 6월 시행)하여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업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백서를 발간하며,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권고 130.17.~130.21., 130.48., 130.50., 130.68.~130.70., SDG5.5, 8.5)

여성 대표성 증진

정부는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여 관리하였고, 그 결과 2021년 기준 고위공무원 10%, 본부 과장급 공무원 24.4.%, 공공기관 임원 22.5%를 여성으로 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 내 성별

8) 2021년 868개소에 집중감독을 실시하였고, 2022년 1,000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9) 2018년 42개소, 2019년 50개소, 2020년 51개소, 2021년 30개소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공표하였다.
10)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통계 기준 2015년 37.2%, 2016년 36.7%, 2017년 34.6%, 2018년 34.1%, 2019년 32.5%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21년 AA 분석 결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6년에는 10.22%였으나 2017년 20.39%에 이른 후 2018년 20.56%, 2019년 19.76%, 2020년 20.92%, 2021년 21.30% 수준이다.
1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 새일센터는 2016년 150개, 2017년 155개, 2018년 157개에서 2021년 159개까지 확충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균형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과의 자율협약, 연구조사,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장법인의 여성임원 비율이 2019년 4.0%에서 2021년 5.2.%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국회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그 후보자 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성 후보자의 추천 비율에 따라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권고 130.66.~130.70., 132.113., SDG5.5., 8.5)

일·가정 양립

근로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보험기금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남성배우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급여 지원)의 상한액을 인상하였다.[12] 그 외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실시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였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최초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였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육아휴직 기간과 합하여 2년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하였으며,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정부는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심사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13]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여성의 보육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있다. (권고 130.66., SDG5.5)

f. 아동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포용국가아동정책(2019년) 및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년)을 수립하였다.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12) 2017년 7월 첫째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에서 2018년부터는 모든 자녀 200만원, 2019년부터는 모든 자녀 250만원으로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상향하였다.
13)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2008년 14개에서 2021년 4,918개로 확대되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아동의 보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발생단계부터 보호조치 후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개입·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민간에서 하던 아동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시키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함으로써 정책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권고130.23., 130.24.)

아동에 대한 성폭력 근절

정부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20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며, 강간 등 중대 성범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법정형을 상향하고,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강화하였다. (권고 130.76., SDG5.2, 16.2)

아동학대 대응

정부는 2020년 4월「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일시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피해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만 6세 미만 아동 대상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분리 시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형 보호체계를 우선하였다. 분리된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치료인력이 배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였고[14],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 대상 상담·치료, 교육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여[15] 학대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지원팀을 설치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7월「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하여

14)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19년 73개소에서 2021년 98개소까지 확대하였다.
15)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19년 67개소에서 2021년 77개소까지 확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16] 보건복지부는 매년 법정의무교육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부모 대상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아동에 대한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였다. (권고 130.73.~130.76., SDG5.2, 16.2)

아동복지

정부는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만7세 이하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4월 기준 27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아동 양육가구 부담 경감에 기여하였다. 또 2019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1월부터는 신규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특히 장애아동을 위하여 돌봄서비스 지원인원 및 돌봄시간을 확대하고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17] (권고 130.23., 130.24., 130.74.)

g. 장애인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

정부는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 사업 등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중앙·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건립 및 지정 사업,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 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고 130.77.~130.78., SDG3.8)

16) 2022년 4월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2022년 하반기 3개 권역 6개소를 개소할 예정이고, 전국에 권역별로 2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7) 지원인원 및 연간 돌봄시간을 2021년 4,005명, 720시간에서 2022년에는 8005명, 84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이전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하였으나, 2022년부터 본인부담금 설계를 통해 소득기준 초과 가정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장애인학대 예방

정부는 장애인학대 예방,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후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였다. 2022년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개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차별, 인권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2022년 하반기에는 1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특수치료 제한, 가혹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동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력이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방문조사,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권리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고 130.79.~130.80., SDG 16.1)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부는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7년 월 최대 20만원에서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였다.[18] 정부는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및 급여량을 결정해왔던 장애등급제를 2019년 7월 폐지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권고 130.61., 130.78.)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법무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6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정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하였고, 2021년부터 장애인차별시정심의회 개최를 연 1회에서 분기별 개최로 확대하였다.

18)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자는 2021년 12월 기준 276,000명이다.

h. 이주민과 난민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3차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시행 중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Together Day)'로 지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하여 유공자 포상, 각종 문화행사 개최, 재한외국인 미담사례집 발간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국내에 정착한 이민자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하여 초기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권고 130.25.)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착 초기 단계부터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콜센터를 통해 13개 언어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가정 문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를 통해 자녀양육·사회진출 등 미래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복합적인 수요에 맞춘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생활지원 방문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하여 심리상담 및 진로 지도, 기초학습지원 등을 하고 있다.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고용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교육훈련,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다. (권고 132.49.)

문화다양성 존중과 차별방지를 위한 조치

정부는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주민 포함 소수문화 주체와 지역민 간 상호문화교류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과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유네스코에 제2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1년에는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1~2024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청소년·공직자·교육자 등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외국 국적 근로자를 대상으로 HIV 검사를 의무화한 법무부고시를 개정하여 채용신체검사서에서 HIV 검사 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HIV 검사를 전면 폐지하였다. (권고 130.22, 130.81., 130.85., SDG10.3)

2. 이행 중인 권고

a.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이행

국제협약의 비준

정부는 그동안 비준하지 않았던 국제인권협약을 가입 및 비준하기 위해 국내 법령을 정비하는 노력을 하였다. 정부는 2020년 12월 유엔 자유권규약 제22조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국내법인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동조합법」을 개정하였고[19], 2021년 4월 ILO 핵심협약 제29호, 제87호, 제98호의 비준을 완료하였다. 제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준 추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유권규약 제22조 적용 유보를 철회할 필요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권고 130.1.~130.6., 132.19., 132.20. SDG16.10, 8.7, 8.8)

정부는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될 당시 자발적 공약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입법위원회'를 운영하여 협약을 국내에서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2022년 7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권고 130.6., 132.1.~132.3., 132.19.)

정부는 제3차 심의시 불수용 입장을 밝혔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안은 2021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으로

19) 노동조합법은 기업별 노동조합까지 실업자,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였고, 공무원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가입의 직급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 교원노동조합법은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다.

개인진정 제도가 도입되면 국제절차를 통한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고 130.6., 132.12., 132.19.)

b. 국내 제도의 변화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추진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2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고 130.15.~130.16.)

c. 시민적·정치적 권리

군형법 제92조의6 관련 조치

대법원은 2022년 4월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행위 등을 처벌하는「군형법」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행위 등이 근무시간 외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 및 군수사기관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군사법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권고 132.44., 132.45., 132.65.~132.68., SDG10.3)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정부는 2017년 11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집회 참가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평화적으로 집회가 개최되도록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형 대화 경찰제도'를 도입하였고,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경찰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집회의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경찰 부상자 수와 집회현장의 불법행위는 감소하였다.[20] 또한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강화

20) 집회시위 횟수는 2018년 68,315회, 2019년 95,266회, 2020년 77,453회, 2021년 86,552회로 증가 추세이나 경찰부상자 수는 2018년 84명, 2019년 76명, 2020년 31명, 2021년 40명으로 감소하고

하기 위해 2020년 6월 경찰관에 대한 인권교육 이수를 제도화하였고, 2020년 9월 집회 시위에 관한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시행하고 있다.[21] 또 타인의 집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집회 신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시 사전통지하도록 하여 다른 이들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권고 130.38.~130.41., SDG16.1)

d.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기초의료보장 강화

정부는 기초의료보장을 위하여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하여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의료 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수급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였고,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고 130.63., SDG3.8)

노인복지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되, 그 적용 대상을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다. 2022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대비 2.5% 인상하여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인구 빈곤갭 및 소득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2] 또한 만65세 이상(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있다. 집회현장 불법행위 또한 감소하였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인원은 2016년 3,425명, 2017년 1,276명, 2018년 488명, 2019년 1,220명, 2020년 1,060명, 2021년 1,211명으로 감소 추세이다. 대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집회시위가 평화적'이라는 답변이 2016년 52%에서 2017년 73.9%, 2019년 74.8%, 2019년 84.8%로 상승 추세이다.

21) 집회시위 인권영향평가는 모니터링단이 집회시위 현장 상황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집회 관리 정책 및 기조를 수정, 보완하는 제도이다.

22)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추가로 매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공공형,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23] (권고 130.55.~130.62. SDG1.2, 10.4)

e. 여성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할 권리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른 조치로 법무부는 낙태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형법」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지원 및 절차를 규정하는「모자보건법」개정안을 2020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해 2021년 8월 건강보험으로 의료인 교육·상담수가를 신설하여 임신한 여성이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 수술과정, 수술 전·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권고 132.114~132.115., SDG5.6)

f.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개선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의무자 없이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인지원 사업을 2017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2021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권고 130.54., SDG10.2, 10.4)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23) 노인일자리 사업량 양적 확대를 위하여 기존 인프라 외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및 기타 비영리조직도 진입 가능하도록 발굴하고 수행기관화 교육 지원을 통해 수행기관 다변화 및 확대를 추진 중이다. 그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2018년 510,000개, 2019년 640,000개, 2020년 740,000개, 2021년 820,000개, 2022년 845,000개로 확대하였다.

2021년까지 약 1.2조원을 지원하여 2021년 말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이 30.6%에 달하였다. 저상버스 도입률을 더 제고하기 위해 2022년 1월 동 법을 개정하여 2023년 1월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g. 이주민과 난민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정부는 제3차 심의에서 이주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이었으나 수용하기로 입장을 변경하고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6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발의되었고, 동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은 아동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부모 등이 그 출생등록 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아동의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고 132.118.~132.124., SDG 10.3, 16.9)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 근절

정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외국인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포함하였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는 차별적, 혐오적 방송내용과 정보에 대한 심의 강화 정책을 포함하였다. 정부는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조롱·모독을 금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 시 감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 상으로 유포되는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조장, 조롱·모독 등의 표현을 심의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부록1, 2 참조) (권고 130.25., 132.46., 132.47., 132.49.~132.55., SDG10.3)

학령기 이주아동의 교육 보장과 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출입국사실 증명이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이 어려운 경우 거주

사실만 확인되어도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고, 학력증빙이 곤란한 경우 학력심의를 통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미등록 아동이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강제퇴거의 우려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취학 중인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단속을 자제하고,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고 있고,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그에 더해 정부는 학계,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건부 구제대책을 마련하였다. 종전에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게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 영유아기에 입국한 아동이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와 영유아기가 지나서 입국한 아동이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였다. (권고 132.126., 132.129., 132.130.)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폭력방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하여 매년 약 3천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왔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 고용허가 취소,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리고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받도록 하였다.[24] 외국인근로자가 언어 문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40개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와 콜센터를 통해 통역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49개 고용센터에서 152명의 통역원이 고용허가 방문 민원, 사업장 방문, 진정사건 출석조사, 사업장 실태 조사 등의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고 130.81.~130.84., SDG 8.8)

고용허가제 개선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이 취업하지 않는 사업장의 인력부족을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고용허가 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조건으로 국내 입국과 체류 허가를 받고

24)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003개 사업장 점검 결과 5,416개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고, 노동관계법 위반 총 18,900건에 대해 시정지시 17,471건, 사법처리 27건, 과태료 부과 484건, 행정처분 237건, 관계기관 통보 681건의 조치를 하였다.

있어 원사업장 근로가 원칙이나, 근로계약 해지·종료,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 이동제한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8차례에 걸쳐 사업장 변경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변경 사유를 확대하였다. 2021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으로 받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산업재해예방, 보건관리, 인권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취업교육 시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하였다. 산업재해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농어업 개인 사업장은 2023년부터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시에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고용허가 신청 시 주거시설에 대한 시각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였으며, 그러한 숙소에 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을 내국인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장 점검 시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금지, 출산 전후 휴가 보장,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권고 132.127.~132.128., SDG 8.8)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위한 조치

정부는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관련 수사나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법률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적용 대상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검찰청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인 경우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

하기 위하여 2020년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고 130.72. SDG5.2., 16.3.)

난민인정심사의 개선

정부는 2013년 「난민법」의 시행 이후 급증한 난민신청에 전문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심사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심사 대기기간 장기화를 방지하였고,[25]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3 참조) 한편, 난민전담 공무원의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고,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사업을 도입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을 수료하고 인증시험을 통과한 통역인이 심사과정에서 전문적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난민면접 과정에서 녹음·녹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였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선입견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과 자주 접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난민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였다. 현재, 난민신청자가 면접 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 심사 결과 통지 단계에서도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취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 이행하지 않은 권고

a. 국제인권매커니즘의 이행

국제협약의 비준

국내 법체계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아직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입장을 검토 중이다.[26] 다만 정부는 201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25) 난민심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2013년 「난민법」 첫 시행 당시 전담인력이 18명이었으나 2018년 39명, 2021명 90명까지 증원하였다.

26) 동 협약 상의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 보호 및 촉진 의무(제44조), 취업을 위하여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할 당사국의 의무(제52조제4항), 모든 이주노동자 자녀의 출생등록 및 국적부여(제29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정규화 조치 노력(제69조제1항) 등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주민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GCM, Global Compact for Migration)의 채택에 참여하였다. (권고 131.1., 132.13.~132.15., 132.125.)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내법 충돌 가능성,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해외 사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동 의정서는 유엔 고문방지소위원회에 구금시설에 대한 정보와 모든 구금장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군사 기밀보호, 각종 직무상 기밀누설 금지 등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즉시 비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국내법 충돌 가능성,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이다. (권고 132.7.~132.8.)

대한민국은 헌법 제31조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 교육차별철폐협약 비준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권고 131.2.)

b. 국내 제도의 변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한민국은 헌법 제11조에 따라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연령 등 개별적 차별금지 법률의 제정을 통해 차별철폐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왔다. 2007년부터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사회적 논쟁으로 인하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철회 또는 폐기되었다. 제21대 국회에는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2022년 5월 법안심사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국회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고 132.26.~132.45., 132,57,~132.62., 132.64., SDG10.3)

사형제 폐지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약 25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11월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27] 및 2021년 10월 제48차 인권이사회 사형제 문제 결의[28] 채택 시 처음으로 찬성 표결하였다. 위 찬성 표결은 우리 정부가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

27)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A/RES/75/183) 참조
28)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 사형제 문제 결의(A/HRC/RES/48/9) 참조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만, 사형제 폐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유엔 총회 결의를 포함한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국회 발의된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고 132.70.~132.89., 132.4.~132.6.)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여부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지 여부,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사안이다. 정부는 국회 발의된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고 132.107., 132.108.)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은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되고 있어 동 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다.[29] (권고 132.25., 132.90., 132.109.~132.111. SDG16.1, 16.3)

Ⅳ. 자발적 공약의 이행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가적 노력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국(2016~2018년 임기, 2020~2022년 임기)으로서 인권이사회 및 유엔 총회 3위원회 내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인권 논의의 저변 확장을 위해 '신기술과 인권',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인권 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OHCHR에 대한 재정기여를 지속함으로써 유엔 및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녀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고, 심화된 여성의 고용

29)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2017년 7명, 2018년 4명, 2019년 1명, 2020년 2명, 2021년 11명이다.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 아동의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온라인 학습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정보 공백이 없도록 코로나19 관련 정부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였다.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통·번역 지원과 비자 확인 없는 코로나 검사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부록4 참조)

부 록

〈부록 1〉 방송심의의결 내역(2017.11.~2022.5.)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5	계(단위: 건)
의결내역	0	3 (권고1, 의견 제시2)	7 (권고4, 의견 제시3)	2 (권고1, 의견 제시1)	2 (권고1, 의견 제시1)	0	14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위반

〈부록 2〉 통신심의 차별·비하 정보 시정요구 내역(2017.11.~2022.5.)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5	계(단위: 건)
심의 건수	1,356	2,638	1,886	1,580	1,369	519	9,348
시정 요구 (삭제, 접속차단)	1,166	2,352	1,406	473	308	267	5,972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3호 바목(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위반

〈부록 3〉 연도별 난민신청 및 심사종결·대기 현황

구분	'94~'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난민신청	9,539	5,711	7,541	9,942	16,173	15,452	6,684	2,341
심사종결(1차)	7,416	4,522	7,061	6,416	6,601	10,013	14,032	9,676
심사대기(1차)	2,123	3,312	3,792	7,318	16,890	22,329	14,981	7,646

〈부록 4〉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가적 노력

자녀돌봄 지원

지난 2020년부터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가정, 마을) 초등돌봄에도 공백이 없도록 여러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 협력적으로 운영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마을돌봄기관은 긴급돌봄 제도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0년 1월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손가정까지 확대하고,

유연한 활용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신설하여 가족의 질병, 노령, 사고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도 연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원, 휴교 등으로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하였는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여성고용회복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심화된 여성고용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8개 부처 합동으로 여성일자리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은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78만 여 개 창출하는 등 당장 시급한 지원뿐 아니라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근본적인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양과 질 양면에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학습권 보장

2020년 4월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습공백을 최소화하였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등교를 확대하여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고자하였으며, 2022년 5월부터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지원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 당국의 브리핑 내용에 대해 수어통역을 지원하여 농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였다. 또 정부는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대비 및 미디어 변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확대, 디지털기기·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에게 방역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콜센터에서 13개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지침, 안내자료 등을 통·번역하여 지원하였다. 또 법무부는 코로나19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의료기관에서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 백신접종을 완료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시행하였다. 2020년 5월부터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 중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 환자 등에 대해 보호일시해제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호조치를 하는 강제퇴거명령 대신 스스로 출국할 수 있는 출국명령을 활성화하여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0년 12월부터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였고, 2021년 8월 장기보호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3차례에 걸쳐 접종하였다. 2022년 3월에는 보호외국인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하여 보호외국인 확진자 발생 시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SDG3.8.)

예술인 지원

정부는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창작활동이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였다.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1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Nation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urth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Ⅰ. Introduc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hereby submits the National Report for the Fourth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in accordance with the Human Rights Council (HRC) Resolution 16/21.

This report contains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ccepted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cycles and all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aken for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previous Third UPR Cycle in November 2017.

In April 2022, the Government voluntarily submitted the Third Cycle Mid-term Report contain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all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Third UPR Cycle to the HRC. The Report was publicly released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Justice (MOJ).

Ⅱ. Methodology and Process for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The MOJ drafted the report following the reporting guidelines of the OHCHR based on the Human Rights Council decision 17/119. As recommended in the guidelines, the Ministry referred to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preparing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recommendations and specified the relevant goals and targets along with the previous recommendation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This will strengthen the consistency and efficiency of national policies and accounta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and achieve SDGs.

The Government drafted this report in consultation with 12 relevant ministries and institutions, while holding discussions to gather public opinion. Moreover, the MOJ requested the opin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 on the report. The recommendations of civil society and the NHRC were reviewed and partly incorporated in the report.

Ⅲ.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rom the Third Cycle

1. Recommendations Implemented

a.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fulfill the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o comply with the human rights mechanisms. The Government has extended its standing invitation to all thematic special procedures of the UN HRC and held a constructive dialogue during the country visits of the Special Rapporteurs.[1]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its cooperation with the OHCHR Seoul Office, despite the difficulti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since 2020, and has continued its cooperation and support via non-face-to-face methods.(Recommendations 130.7-130.9)

1)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in May 2018;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 in July 2019;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December 2017, July 2018, January and June 2019, February, June and August to September 2022;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in June 2022.

Withdrawal of Reservations to Article 25(e) of the CRPD

At the time of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in December 2008, due to the concern regarding its conflict with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Act* prohibiting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from subscribing to life insurance, the application of Article 25(e) of the CRPD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providing life insurance was reserved. However, the given provision was amended in March 2014 to allow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possess mental capacity to enter into life insurance contract. Thus, the reservation to Article 25(e) of the CRPD was withdrawn in December 2021.(Recommendations 132.12.)

Business and Human Rights

When establishing the 2018-2022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in 2018, the Government drafted a separate chapter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o include relevant policy tasks and track the annual implementation status. Also, in 2021, the Government presented a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ramework Act on Human Rights Policies* containing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the state's duty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The Government held forums in 2020 and 2021 to facilitate discussions and published guidelines for companies to better understand and implemen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Recommendation 130.26; SDG12.6)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implement development cooperation based on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he Government's third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21-2025) stipulates that gender and human rights should be considered in formulating ODA policie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d designing projects. Also,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s developing projects to promote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under the Mid-Term Strategy for Human Rights (2021-2025) and the Human Rights-based Development Cooperation Implementation Plan (2020-2023). The Government takes human rights into account over the course of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grant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y implemen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Furthermore, to improve accountability, the Government has taken necessary measures on implementing agencies in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locals, based on the second KOICA Human Rights-based Management Plan (2021-2023).(Recommendation 132.69)

b. Changes in National Framework

National Action Pla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third NAP (2018-2022) to seek the institutional practice of ensuring human rights. In due process, the Government ensured the participation of the NHRC, academics and civil society by holding public hearings, collecting opinions and closely cooperating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Th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ourth NAP to fulfill new demands for human rights issu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will ensur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Recommendations130.12.-130.1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stipulat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receive recommendations for candidates or opinions from the society and nominate or appoint commissioners. To collect opinions, the NHRC posts matters concerning the expiration of the terms of the commissioners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 recommendations for commissioners online and distributes press releases. The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ers are guaranteed through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their remarks or decisions delivered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f made without purpose or negligence, and the commissioners cannot be removed unless they are sentenced to imprisonment. NHRC plans to make amendments to ensure organizational independence and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procedure in the election of the commissioners.(Recommendations 130.10.-130.11.; SDG 16.a)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After the late Private Yoon who had died from the abuse of other comrades in 2014, the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were newly inserted in the *Framework Act on Military Status and Service* in December 2015. After a long discussion, in 2022, the NHRC established the officer position and the committee responsible for investigation, corrective measur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concerning human rights violation and discrimination in the military. The Government is operating a comprehensive system to prevent suicide through the stages of identification, management and separation, and by providing mental counseling and treatment for soldiers in difficulties during service. The Government organized a private-public-military joint committee to prevent sexual abuse in the military in 2021 and drafted recommendation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abuse in the military and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In 2022,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litary established organiz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sexual violence to deal with relevant cases, and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the number of sexual grievance counselors in the military was increased. Also, through a newly inserted provision on perpetrator-victim separation, the Government streamlined the procedures and established the guidelines on dealing with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collateral damage. The full-scale investigation on the actual status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is being conducted every year since 2022, and mobile applications for anonymity and integrated case management are under development. For the fundamental improvement of the military culture, the Government has been developing and operating various programs and gender-sensitive education courses reflecting the job characteristics of military ranks.

Human Rights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included human rights education as a subject of school curriculum in 2018. Accordingly, the Ministry has developed instruction materials and operated various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capacity-building in human rights education since 2019. In 2020, the *Enforcement Decree 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amended to allow schools to establish their own rules on school life based on the self-governing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n human rights. Since 2021, the Ministry and 17 Offices of Education have cooperated to develop and distribut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to school members and prepare for the capacity-building training of teachers.

The NHRC monitored the textbook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in 2017-2018 and stated a joint declaration with the superintendents of the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raise awareness on human rights and strengthen human rights education. The NHRC has also facilitated human rights education in universities by organizing the council of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in 2020. In addition, it has made efforts to spread human rights awareness across the society by providing education according to targeted groups in each field such as society and public institutions e.g. human rights training for government officials, journalists and by developing various content.(Recommendation 130.65.; SDG 4.7)

c. Civil and Political Rights

Eradicating Human Traffick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etc.* has been enacted and will be enforced from January 2023. The Act defines the concepts concerning human trafficking and the group of crimes in line with international norms, while stipulating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wide response system; strengthening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victims; and promoting the general public's awareness-raising; etc. Under the Act, the Government is able to systematically seek policies b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plan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and reviewing the progress of each ministry. Also, the Government plans to develop and use the identification indicators of victims, determine cases, provide medical, legal and livelihood support for identified victims, etc. At present, financial support (e.g., rescue funds; medical, livelihood, tuition, funeral expenses; etc.), legal counseling and litigation and psychological support are being provided.(Recommendations 130.44.-130.47.,132.112.; SDG 8.7, 16.2, 16.3)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and enact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from January 2021, in order to extend the definition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to impose criminal punishment upon violation of the restraining order. The Government is providing various services for victims including psychological, legal, and medical services through counseling centers, shelters, emergency hotlines, etc.[2] In 2020,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number of workers at

2) Domestic violence counseling centers supported 428,911 counseling cases in 2021, and shelter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provided psychological treatment, investigation and connection with and support for medical and legal services to 172,385 victims in 2021. In 2021, they subsidized medical expenses for 8,996 persons (13,870 treatment cases) and supported free legal aid and counseling for 11,010 cases. Female Emergency Hotline 1366 provided 313,868 counseling cases in 2021 and temporarily protected 5,433 victims at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counseling centers, provided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expenses—such as by funding vocational training—and expanded public rental housing, resulting in the strengthening of victims' stable independence and housing safety. The victim support system is promoted both online and offline. National institutes, local governments, schools, etc., are operating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training program every year.(Recommendations 130.27-.130.35.; SDG 5.2; 16.3)

Conscientious Objectors and Alternative Services

From January 2020,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Assignment and Performance of the Alternative Service* a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which was not supported during the third cycle. This is a follow-up measure of the decision deliv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June 2018, stating that Article 5 of the *Military Service Act* is unconstitutional due to the lack of the stipulation of alternative service. The new Act provides regulations on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ich entails serving 36 months in correctional facilities. From October 2022, they are called up for service, and 886 persons are performing their duti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s of June 2022. In the meantime, all persons imprisoned for conscientious objection have been released by February 2019.(Recommendations 132.94.-132.106.; SDG 16.1)

Right to Privacy

In August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which allowed to intercept a wide range of communications through the packet interception of internet lines,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the Act was amended to newly insert a supplementary requirement upon request for the provision of

emergency shelters.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to the base station and to prepare the court's control procedure for packet interception. The amendment o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s further discussed to allow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communications data to investigative agencies and to subsequently notify telecommunications subscribers.

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easures for Vulnerable Groups

The Government made efforts to address social inequality and lay the foundation for an "inclusive welfare state" by continuously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The Government abolished the standard for the person obligated to support for basic livelihood security, under which those with a direct family member, etc., earning a certain level of income are ineligible for livelihood benefits, in a phased approach over four years from 2017 to 2021. Since 2018, the Government has sought policies to resolve polarization by expanding child allowances, raising basic pension benefits and pension benefi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reating more jobs for older persons and operating a pilot project on a Korean-style accident and sickness allowances. Since 2017, the state's responsibility system for dementia patients has been operated through strengthening the national care for dementia patients, expanding infrastructure including support centers, reducing medical and examination costs and creating a dementia-friendly environment.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care has also been strengthened by expanding public daycare centers and abolishing the disability classification system in 2019.(Recommendations 130.23.-130.24.)

Guarantee of Housing Rights

The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ensure the right to housing. The Government provided guidance about the housing welfare system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including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benefits when conducting visit surveys involving those residing in inadequate housing and administering housing welfare counseling services including providing consultation on whether to move to public rental houses, preventing people from being deprived of an appropriate living environment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In addition, from 2018 to 2021, the Government has provided 140,000 public rental houses and 40,000 publicly supported private rental houses on average, prioritize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es to vulnerable groups and subsidized relocation costs.(SDG 11.1)

Welfare for Older Persons

In order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older persons, the Government expanded the number of local senior protection agencies from 34 to 37 in 2021 and has provided tailored care services since January 2020. Also, to prevent abuse, promotion and training were carried out, with approximately 50,000 people completing the course as of 2020. In addition, emergency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including emergency situation monitoring, response measures and follow-up responses are being promptly provided to emergency situations like fires or accidents involving older persons living alon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romote these services, the Government plans to replace in-house equipment with the latest equipment for 300,000 households by 2023.(Recommendations 130.55.-130.62.)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In 2019, the Government raised the age of children eligible for single-parent childcare subsidies from less than 14 years old to less than 18 years old to expand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Also, single parents who received livelihood subsidies may be given childcare subsidies and single parents aged between 25 and 34 are given additional childcare subsidies of KRW 50,000-100,000 per month.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was

enforced in April 2021 to enable foreigners who raise a child of Korean nationality, regardless of their marital status, to be eligible for the support designed for single-parent families. Also, the *Act on Enforcing and Supporting Child Support Payment* was amended and enforced in July 2021 to impose administrative disposition, criminal punishment, etc., including the suspension of driver's license or the prohibition of departure of non-custodial parents who intentionally do not perform the obligation for child-rearing expenses,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of child support payment. In addition, the Government expanded the period for temporary urgent support for child-rearing expenses from a maximum of 9 months to 12 months, strengthening the support for low-income single parents raising children.(Recommendations 130.48-130.49.; SDG 5.1, 8.5)

Strengthening Fundamental Labor Rights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and promoted the measures to eradicate unfair labor conducts since June 2017 to strengthen fundamental labor rights.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has convened since October 2019 to discuss the ways to improve the labor representative system as well as the practices and issues of the labor union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of special types of employers. As a result, the Government decided to regulate the appointment procedures, method, status and guarantee of activities of labor representatives. Later on,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mployee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reflecting such content was presented, which is to take effect in December 2022.Th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scope of social insurance coverage, such as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for workers including special types of workers and platform workers. As of June 2022,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applied to 15 occupations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will be further expanded. In January 2022, employment insurance has been applied to 14 occupations by adding two additional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occupations, such as delivery persons and drivers. Meanwhile, in September 2021, in order to protect workers of various types of employment, such as persons of special employment and platform workers, protection measures are to be prepared and in progress, by creating transparent and fair workplaces,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expanding the job safety net.(Recommendation 130.51.; SDG 8.8).

Healthy Work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prepared and promoted measures to protect employees from harassment at the workplace since July 2018. As part of such efforts, the *Labor Standards Act* was amended (enacted in July 2019) to define and prohibit harassment at the workplace and to impose an obligation on the employer to investigate and take measures regarding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in the case of harassment. Also, unfair treatment towards victimized employees was prohibited, and measures to prevent workplace harassment and countermeasures were described. In addition, the *Labor Standards Act* was additionally amended (enacted in October 2021) to adopt restrictive regulations such as imposing fines in the cases where an employer (including employees who are relatives of the employer) harassed anyone at the workplace or failed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conduct investigation and take measures in the case of harassment. It also newly inserted the provision on confidentiality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to prevent secondary damage.(SDG 8.5., 8.8)

Measures for Non-Regular Workers

The Government continuously made efforts to address abuse and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To create the culture of hiring regular workers, the Government mitigated the requirements for subsidies for regular worker conversion, extended the period for tax benefits for those converting to regular workers in 2017 and expanded and strengthened the

employment form publication system. It also revised the guidelines on stable employment and the protection of working conditions of fixed-term employees to induce private companies to voluntarily improve their employment structure.[3] The Government includes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as a mandatory category in labor inspections and takes corrective actions. Since 2010, the Workplace Support Group has been operating a project to provide diagnosis on discrimination status, make improvements in measures at worksites across the country, and provide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human resource personnel. In 2021, a group of relevant experts was organized to provide diagnosis on employment structure and consult workplaces on employing non-regular workers.(Recommendations 130.52.-130.53.; SDG8.5, 8.8)

Affordable Education

Since 2021, the Government ensures all students to b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for education without the burden of educational costs until high school.[4] For children from families with 50 percent or lower of the median income, the Government runs public assistance programs such as education subsidy that can be used with autonomy and also provides education expenses including tuition fees in the case of private schools. The Ministry of Education drew up the basic plan of education subsidies in September 2020, making it more convenient for beneficiaries by integrating

3) Due to this, the ratio of fixed-term employees who worked for longer than one and a half year and converted to regular workers was in an increasing trend from 16.8% in June 2016 to 26.0% in June 2019. However, the conversion ratio slightly decreased due to COVID-19 in 2020, but the conversion rate increased by 12% in June 2021 on a yearly basis. In the meantime, the ratio of employees dispatched or under a service contract or subcontract among all employees of the companies with at least 300 employees was 17.4%, decreased from 18.3% in 2020.

4) In the Republic of Korea, entering high school is commonplace with 99.7% of the school entrance rate between 2005 and 2021. Free high school education was expanded from the third grade of high school in the second semester in 2019, the second and third grades in 2020 to all grades in 202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supporting subsidies that had been divided into categories.(Recommendations 130.63.-130.64.; SDG 4.1, 4.2)

e. Women

Plans at the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second Gender Equality Basic Plan (2018-2022)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addition, as violence against women occurs in various forms such as stalking, the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was enacted and implemented since December 2019,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promote policies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The Act clarif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s well as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nd the first Basic Plan of Policies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2020-2024) was prepared and implemented.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an-governmental council in February 2018 to establish measures at the national level and to strengthen inter-ministerial cooperation.[5](Recommendations 130.18, 130.23.-130.24., 130.30., 130.33., 130.35., 130.71.; SDG 5.1, 5.2, 16.1, 16.3)

Eradicating Stalking Crimes

The Government enacted and enforc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etc.* to prevent crimes by defining and punishing stalking as a crime since October 2021. The Act defines stalking as an act that causes anxiety or fear by approaching or contacting the victim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and

5) The Status of Policies to Eradicate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n the Public Sector and Countermeasures, the Measures to Eradicate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n the Workplace and the Culture and Art Industry, the Measures to Eradicate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in the Education Sector and the Measures to Eradicate Irregularities Including (Sexual) Violence in the Sports Sector were established.

against the victim's will, and the Act enables punishment against continuous or repeated stalking by imprisonment, etc. Also, protective procedures, such as emergency and interim measures, are prepared to protect victims from the initial stage of crime and to prevent stalking from extending to violent crimes. The Government prepares to enact the *Act on Prevention of Stalking and Victim Protection, etc.* to strengthen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Recommendations 130.30., 130.33., 130.35.; 130.71.; SDG 5.1, 5.2, 16.3)

Eradicating Digital Sex Crimes

In order to respond to digital sex crimes, the Government has prepared and implemented measures jointly with relevant ministrie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opened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enter in April 2018 to support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providing comprehensive services such as support for the deletion of illegally filmed videos, 24-hour counseling and connection with legal and medical support. In addition, since 2021, it provides tailored healing and recovery programs to the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by operating regional-level counseling centers. Meanwhile,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s Protection Act* was amended (enforced in July 2021) to expand the eligibility of those who can request the deletion of illegally filmed videos circulating online from victims themselves to their lineal relatives, siblings, and representatives. Regarding sexual exploitation video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 legal ground for preemptive support for deletion thereof, even without the request of the victim, was made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hild and adolescent victims. In addition, for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content for each grade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produced in 2021 and an education platform was opened in 2022 to provide related content free of charge. The MOJ amende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to insert the provision on punishment against the acts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deepfake" video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etc., which have sexually edited the body of a specific person, etc., and possessing and watching illegally filmed sexual videos (enacted in June 2020), while the statutory punishment related to illegally filmed videos was strengthened (enacted in May 2020). From 2020,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reinforced the obligation of internet business operators to delete digital sex crime videos and prevent their distribution by imposing the obligations on internet business operators of a certain size to immediately delete illegally filmed videos, etc., and to tak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to prevent the distribution thereof.(SDG 5.2, 16.1)

Support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By operating counseling centers and protection facilities, the Government provides counseling and protection, requests necessary cooperation and support to legal aid institutes, and provides shelter and meal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rough one-stop centers[6], the Government provides 24/7 counseling, medical services and investigation support for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ex trafficking.(Recommendation 130.27.)

Gender Mainstreaming and Spreading the Culture of Gender Equality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stipulates that in the cas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ganize committees, any particular gender shall not exceed 60 percent of the number of members commissioned. This provision has been incorporated in several other laws and regulations. The average proportion of female members of government committees exceeds 40 percent as of 2021. In February 2021, the MOGEF made efforts to make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by establishing a specialized evaluation committee within the Gender Responsive Budget and Settlement Council to strengthen preliminary deliberation. In May 2020, the Government amended

6) One-stop centers named “Sunflower Centers” are available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to designate "Gender Equality Salary Day" and provide a legal basis for publicizing relevant statistics. In addition, it conducted mass media monitoring and developed customized gender equality training content for media, media workers and public officials.[7] (Recommendations 130.17., 130.19.-130.21.)

Promoting Gender Equality at Work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stipulates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work and has a provision to impose punishment upon gender discrimination in wages. The Government conducts intensive supervision of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to support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and work-family balance every year, including equal pay for equal work.[8] To counter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the Government operates the Affirmative Action (AA) which requires business operators to submit the status of male and female workers and managers every year to induce them to voluntarily fulfill the female employment standards, and the target business operators have been continuously expanded to include workplaces with 500 workers or more (including workplaces with 300 workers or more in the group of corporations subject to disclosure), all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public corporations. From 2017, the list of business operators who failed to fulfill were announced.[9] The entire business operators subject to AA should submit the status of gender wage gap and the cause analysis, and support services for poor workplaces are strengthened.[10] (Recommendations 130.17.-130.21.;130.48.;

---

7) The number of requests to deliberate gender discrimination cases in mass media was 119 in 2017, 268 in 2018, 323 in 2019 and 579 in 2020. The trainees of gender equal media training were expanded from the monitoring group of the KCSC in 2017 to adolescents in 2018 and journalists and broadcasters in 2020.

8) Intensive supervision was conducted for 868 workplaces in 2021, and will be conducted for 1,000 in 2022.

9) The Government has disclosed the lists of business operators who failed to implement it with 42 workplaces in 2018, 50 in 2019, 51 in 2020 and 30 in 202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30.68.-130.70.;SDG5.5;8.5)

The Government has operated a mentoring program for young women to help them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explore career paths with female leaders and receive support for social advancement and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women-friendly jobs by finding and supporting future social enterprises in the field of women, family and adolescents. To prevent career interruption of women,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employment support institution for women.[11] Since 2018, career interruption prevention service has been provided to support career development for women and their adaptation to the workplace 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culture. As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was amended to the *Act on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and Prevention of Career Interruption* (enforced in June 2022) to strengthen support for prevention of career interruption by expanding the target and scope of the policies, newly inserting the provision defining "the prevention of career interruption" and expanding the scope of projects. By publishing the status investigation of the economic activities of women and the white paper and collecting and providing employment and recruiting information, the Government laid the foundation for support for female employment.(Recommendation130.50.)

Increasing Female Representation

As a result of establishing and managing a plan to enhance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2018-2022), the Government achieved

10) The gender wage gap in Korea is showing a decreasing trend with 37.2% in 2015, 36.7% in 2016, 34.6% in 2017, 34.1% in 2018 and 32.5% in 2019 according to the OECD Statistics. The analysis result of the AA in 2021 shows that the ratio of female managers stood at 10.22% in 2006, but reached 20.39% in 2017, 20.56% in 2018, 19.76% in 2019, 20.92% in 2020 and 21.30% in 2021.

11) The number of Saeil Centers which is the employment support institution for women whose career is interrupted was increased from 150 in 2016 to 155 in 2017, 157 in 2018 and 159 in 2021.

10% of executives, 24.4% of directors, and 22.5% of executives in public institutions as of 2021. In the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gender-balanced and inclusive growth partnership project to improve gender balance within the company, providing voluntary agreements, research, and consultation to support the enhancement of gender equality. As a result, the ratio of female executives in listed corporations increased from 4.0% in 2019 to 5.2% in 2021. To enhance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when a political party recommends a candidate fo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female candidates should account for at least 50%. Women should be recommended for every odd number in the list of candidates. Subsidies for a political party are decided based on the ratio of the recommended female candidates. In April 2018, the act was amended so that when the recommendation ratio and rank for female candidates are not fulfilled,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andidates shall not be accepted.(Recommendations130.66.-130.70.;132.113.;SDG5.5.;8.5)

Work-family Balance

Workers can take up to one year of parental leave to raise children aged eight or under or in the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or under,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Funds pays for the parental leave. To induce more male workers to take parental leave, the upper limit of the father's parental leave bonus (salary support) was increased.[12] The Employment Insurance Funds provide support for maternity leave for themselves, maternity leave for spouses, reduction in working hours during childrearing, etc. Maternity leave for spouses was increased from five days (three days of paid leave) to ten paid days, and the benefits system for maternity leave for spouses was

12) The upper limit amount of parental leave bonuses has been increased from KRW 1.5 million for the first child and KRW 2 million for the second and the following child in July 2017, KRW 2 million for every child in 2018 to KRW 2.5 million for every child in 2019.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established to support pay for the first five days for the companies subject to preferential support. The period for reducing working hours during childrearing was expanded to two years, including the period for parental leave, and the pay was increased. The pay for maternity leave has also been increased in stages. The Government has operated the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system."[13] to certify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es operating an exemplary system supporting childbirth, childrearing, flexible working hours, etc. The State supports business operators installing and operating a workplace childcare center to expand such facilities, preventing career interruption due to the burden of childcare and promoting work-family balance.(Recommendations130.66.;SDG5.5)

f. Children

Plans at the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prepared the National Inclusive Children Policy (2019) and the second Basic Children Policy Plan (2020) to ensure the rights of children and expand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children. The child policies were promoted by introducing child allowance and expanding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To strengthen the children's right to be protected,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system to intervene and decide the stage of protection occurrence and post-management after protection measures are taken. Also, in 2019,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was established as an institute comprehensively responsible for the support for children and general policies as formerly done by the private sector, and infrastructure for policies was expand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rotection agencies and shelters for abused children.(Recommendations 130.23.;130.24.)

13) The number of certified companies increased from 14 in 2018 to 4,918 in 2021

Eradication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To eradicate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 Government amended the relevant laws in 2020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o the crime of sexual intercourse with or molestation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13, increase the age limit for sexual acts deemed as rape against minors from 13 to 16, punish preparations and conspiracies of serious sexual crimes, such as rape, and increase the statutory punishment of indecent acts by compulsion against a person under the age of 13.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was revised to define children and youth involved in commercial sex acts as "victims"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The Government has also strengthened its response to digital sex crimes by increasing punishment on sexual exploitation video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ewly inserting the provision to punish online grooming, and introducing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undisclosed identity and disguised investigations.(Recommendations130.76.;SDG5.2;16.2)

Response to Child Abuse

The Government amended the *Child Welfare Act* in April 2020 to make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child abuse in all local governments, receive child abuse reports, conduct on-site investigations, seek emergency protection, etc. In addition, the immediate separ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March 2021 to ensure the safety of children as a top priority and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child abuse. Also, the protection project by foster parents for children at risk was established for abused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to be protected in a family-like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the family-type protection system, such as protection by relatives and foster care, was prioritized in case of protection. The Government expanded the shelters for abused children[14] with treatment

14) The number of shelters for abused children increased from 73 in 2019 to 98 in 202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personnel to protect separated children and the child protection agencies[15] responsible for counseling, treatment, education, and case management for abus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strengthening support for the recovery of abused children. In addition, a psychological support team has been established within the child protection agencies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psychological treatment of abused children. Medical institutions designated by each local government provide medical diagnosis and specialized treatment for abused children.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WA) in July 2021 was amended to provide the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helters for abus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temporary protection of abused children with disabilities.[16]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provides statutory and mandatory training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the public sector every year for those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and produces and distributes training videos for parents. The Government deleted the provision on the right to disciplinary actions in the *Civil Act,* which stipulates that persons with parental authority can take necessary disciplinary actions to educate their children, to raise public awareness that violence against children is unacceptable.(Recommendations 130.73.-130.76.;SDG5.2;16.2)

Child Welfare

The Government introduced a child allowance in September 2018 so that all children aged seven or under can receive a child allowance regardless of their parents' wealth or income. As of April 2022, 2.73 million children have received child allowances, and 87.3% of beneficiaries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and that it was helpful in raising children, contributing to

15) The number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increased from 67 in 2019 to 77 in 2021.
16) In April 2022, local governments were selected to install and operate shelters for abus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Six shelters in three regions will be launched in the second half of 2022 to open two shelters in each region across the country.

reducing the burden on households raising children. Also, in January 2019, the *Child Welfare Act* was amended to provide the ground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ogether Care Center, which provides after-school care servic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ade it mandatory for newly approved housing complexes with 500 or more households to establish the Together Care Center from January 2021. In particula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number of care service supporters and hours of care have been increased, and the income condition for support has been alleviated.[17] (Recommendations130.23.;130.24.;130.74.)

g. Persons with Disabilities

Ensuring Access to Medical C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Government is promoting health management projec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uch as a health doctor pilot project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 project to designate a disability-friendly medical check-up institution, based on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was enforced in December 2017. The Government also has made efforts to expand the delivery system for health manage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operation of central and regional health and medical cente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stablishment and designation of public rehabilitation medical institutions for children, support for medic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ional rehabilitation hospitals, etc.(Recommendation 130.77.-130.78.;SDG3.8)

17) The number of supporters and annual care hours have been expanded from 4,005 and 720 hours in 2021 to 8,005 and 840 hours in 2022. Previously, the services were provided to households with 120% or lower of standard median income without out-of-pocket expenses. Still, with the design for out-of-pocket expenses, households with more than the standard median income can receive such services from 202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Prevention of Abus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Government amended the DWA to prevent abus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rovide post-management for abused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has also established institutes for advoca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2017. As of 2022, the Government is systematically responding to abuse,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19 institutes for advoca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e other institute will be established in 2022.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of Mental Patients* stipulates the limitation on forced hospitalization and special treatment and prohibition of cruel acts for hospitalized mental patients, and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psychological medical institutes thereunder have been regularly conducted. Also, human rights training was provided to the operators and workers of mental health promotion facilities. The NHRC seeks remedies to protec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siding in facilities from unfair treatment, including violence or abuse through investigations by visiting facilities or examinations of the filed complaints.(Recommendations130.79.;130.80.;SDG 16.1)

Income Guarante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hase-out of the Disability Classification System

The Government raised the basic pension benefi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are provided to the bottom 70% of the severely disabled in terms of income, from a maximum of KRW 200,000 in 2017 to KRW 300,000 in 2021.[18] In July 2019, the Government abolished the disability classification system, which classified the disability status into six stages based on medical standards, and determined whether to provide services into six classifications based thereon. The system was reform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18) The number of people eligible for KRW 300,000 basic pension benefits for the disabled was 276,000 as of December 2021.

receive necessary welfare services and support given the needs and environmen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a comprehensive survey.(Recommendations130.61;130.78)

Corrective Order on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2008, the MOJ has formed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Correction Deliberation Committee to check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by the NHRC and review whether to impose a corrective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orrective order and reinvigorate the system, the requirements on corrective orders were eased by amending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in June 2021. The committee was held quarterly from yearly starting in 2021.

h. Migrants and Refugees

Plans at the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basic foreign policy plans every five year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s currently implementing the third Basic Plan (2018-2022). The policy goal includes promoting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The Government designated May 20 as "Together Day" and has held ceremonies to reward people of merit, hold various cultural events, and publish storybooks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n addition, the MOJ formed a group of advisors composed of immigrants who have settled in Korea since 2020 for the Korean public and foreigners living in Korea to communicate and understand each other and to support migrants' social adjustment. Also, the MOJ has provided training courses for participants to understand different cultures.(Recommendation130.2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Support for Marriage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o ensure the stable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e Government is promoting various policies, such as establishing a multicultural family policy basic plan and operating 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ba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Korean language training, etc., are provided from the early stage of settlement. Call centers support marriage immigrants to integrate into Korea and provide counseling for family problems in 13 languages. The Government also supports planning for the future, including raising children and entering society with the "support package for marriage immigrant settlement by stage" and connects support services with multicultural families given their complex demands through case management. Also, to support childrearing and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visit services to support the living of children and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are being provided,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career guidance, and basic learning support are provided for school-ag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Women's Saeil Centers across the nation provide employment support services, vocational training, and internships to facilitate the employment of marriage migrant women and to make them financially independent.(Recommendation132.49.)

Measures to Respect Cultural Diversity

To create a society that respects cultural diversity, the Government endeavors to support cultural exchanges between cultural minorities, including migrants and local residents, conduct cultural diversity training and surveys, celebrate the week of cultural diversity, etc., based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Especially in 2018, the Government submitted the second Periodic Re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and in 2021,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first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2021-2024). In accordance with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Government conducts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r youth, public officials, and educators to prevent so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spect cultural diversity. The Government amended the Public Notice of the MOJ, which originally required foreign workers to go through HIV testing. It completely abolished the requirement by deleting the HIV testing item from the employment physical checkup document.(Recommendations130.81.; 130.85.;SDG10.3)

2. Recommendations under Implementation

a.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revis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o join and ratify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that had not been ratified. In December 2020, the Government amende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to ensure the right to organiz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such as Article 22 of the U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the core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19] and ratified No. 29, 87 and 98 of the core ILO conventions. The Government did not include convention No. 105, considering the Korean penalty system and the situation of a divided country. Accordingly, there has been a need to withdraw the reservation

19)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llows the unemployed and laid-off to join the unions of each compan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Officials' Unions* abolished the restriction of joining the unions by rank and allows firefighting, education, and retired public officials to join the unions.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achers' Unions* allows retired teachers to join the union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2 of the ICCPR, which is currently under review.(Recommendations130.1.-130.6.;132.19.;132.20.;SDG16.10;8.7;8.8)

The Government voluntarily pledged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CPPED) when elected as a member of the UN HRC in 2019. From November 2020 to September 2021, the MOJ operated committees to review necessary measure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at the domestic level. In July 2022, the Government submitted a bill to join the CPP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currently waiting for the National Assembly's approval.(Recommendations 130.6.;132.1.-132.3.-132.19.)

The Government decided to prepare for the accession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RPD, which was formerly noted at the third cycle review. The bill for accession to the Optional Protoco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2021, and the procedures for obtaining approval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in progress. If the individual communication procedure is introduced upon the accession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RPD, it is expected to ensure individual rights through international procedures.(Recommendation 130.6.;132.12.;132.19.)

b. Changes in Domestic Institutions

Promotion of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Human Rights Policy*

Th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Human Rights Policy* to prepare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promotion system of the NAP, which is a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to promote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human rights policies. The MOJ and the NHRC jointly prepared and submitted the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21 and will support the legislative discussion for the enactment of the Act.(Recommendations130.15.-130.16.)

c. Civil and Political Rights

Measures on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In April 2022, the Supreme Court made an acquittal in the case of an indictment for violating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punishes sexual acts between soldiers of the same sex, etc. The Court mentioned that it is challenging to apply the provision to th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sexual acts, etc., which were made under the voluntary agreement in a private space out of working hours, directly and specifically infringed the sound life and discipline in the military. Accordingly, the military courts and investigators will operate the military jurisdiction system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commendations 132.44.;132.45.;132.65.-132.68.;SDG10.3)

Guarantee of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In November 2017, the Government prepared the "Measures to Ensur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Based on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the maximum extent. Since October 2018,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Korean-Model of Police Dialogue System," which serves as a facilitator for an assembly to be held peacefully through dialogue and communication with the assembly participants, and has made efforts to improve police expertise by expanding related training courses, etc. With these efforts, the number of rallies increased from 2018 to 2021. Still, the number of injuries by the police and illegal acts at the assembly sites decreased.[20] In addition, to strengthen the

20) The number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s increasing with 68,315 in 2018, 95,266 in 2019, 77,453 in 2020, and 86,552 in 2021, but the number of injured police officers decreased from 84 in 2018, 76 in 2019, 31 in 2020 and 40 in 2021. The number of illegal acts at the scene of assemblies also decreased, and the number of those indicted for violat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decreased to 3,425 in 2016, 1,276 in 2017, 488 in 2018, 1,220 in 2019, 1,060 in 2020, and 1,211 in 2021. According to the general public opinion poll, the rate of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assemblies and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law enforcement, the Government institutionalized the completion of human rights training for police officers in June 2020, and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for the overall police activities regard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s been adopted and implemented in September 2020.[21] As the number of cases of false reports to obstruct others' assemblies is increasing, prior notifications are required if assemblies are not held as reported in order to ensure opportunities for others.(Recommendations130.38.-130.41.:SDG16.1)

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uarantee of Basic Medical Services

To ensure basic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has operated the medical benefits system as a public assistance system that helps low-income people resolve their medical problems. The Government supports the total amount of medical expenses for the vulnerable except the personal expenses of the beneficiary of medical benefits. In July 2020, the second Comprehensive Basic Plan for Medical Benefits (2021-2023) was established to gradually expand recipients by lowering the standard of dependents and improving access of the vulnerable to medical services by reducing personal expenses, putting the upper limit thereof, and supporting disaster medical expenses. (Recommendation130.63.:SDG3.8)

Welfare of Older Persons

As the basic pension system was introduced in 2014 to ensure old-age income and support stability, the Government provides a pension to the

---

demonstrations are being held peacefully" has increased from 52% in 2016, 73.9% in 2017, and 74.8% in 2019 to 84.8% in 2019.

21)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s a system where a monitoring group fills in the checklist of the situation of the assembly scenes to revise and complement the policies and stance relating to assembly management based on post-evaluation.

bottom 70% of the elderly above 65. The Government has expanded the basic pension from KRW 200,000 to 300,000 and the eligibility of recipients from the bottom 20%, in terms of income, in 2019 to the bottom 70% in 2021. The Government also has made efforts to reduce the poverty rate of older persons and narrow the gap in poverty and income of older persons by increasing the base pension amount of the basic pension by 2.5% in 2022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22] Also, the number of jobs for older persons aged 65 or older (at least 60 years old for some type)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23]

e. Women

Right to Abortion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rime of abortion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In response, the MOJ submitted a bill to amend the *Criminal Act* to expand the requirements for abortion. The MOHW submitted a bill to ame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o stipulate support and procedures for safe artificial abor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November 2020. Both ministries will support the discussion on the legislation of the relevant bills. In August 2021, the MOHW newly established a budget for training and consultation of medical workers to protect women's health related to artificial abortion, helping pregnant women receive counseling and training from medical experts through health insurance on the procedure of artificial abortion and precautions before and

22) The Government has adjusted the wage level every year considering the inflation rate and further evaluated the appropriateness of wages by appropriateness evaluation every five years.

23) For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number of projects for older persons' jobs, the Government has allowed regional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social cooperativ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o join the projects and tried to diversify and expand the institutions to seek such projects by supporting training for such institutions. Accordingly, the number of jobs for the older persons increased from 510,000 in 2018, 640,000 in 2019, 740,000 in 2020, 820,000 in 2021 to 845,000 in 202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fter the procedure.(Recommendations132.114-132.115.l;SDG5.6)

f. Persons with Disabilities

Improving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nd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Since January 2021, the Government has provided support for mental patients to receive timely and appropriate treatment through the treatment cost support project for the mentally ill. Since June 2017, a public guardianship support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to support mental patients suffering from a lack of decision-making ability without a guardian among residents of the mental care facilities to return to society and stand on their own feet. With the amendment to the DWA in December 2021, the provision on the restrict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DWA to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was deleted so that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re allowed to use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Recommendation 130.54.;SDG10.2;10.4)

Guarantee of Mobility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Government continues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low-floor buses to ensure the right to move in public transport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of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transport business entities that operate low-floor buses for regular route passengers. From 2004 to 2021, it supported about KRW 1.2 trillion; by the end of 2021, the introduction rate of low-floor buses for city buses was 30.6% across the country. The given Act was amended in January 2022 to increase the introduction rate of low-floor buses and is to be enforced in January 2023 to require the introduction of low-floor buses when route buses are replaced or scrapped.

g. Migrants and Refugees

Introduction of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At the third cycle review, the Government did not support the recommendation to introduce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for migrant children but changed its position to support it and is preparing to introduce it. In June 2022, the bill of the *Act on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 Children* was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under which in cases where a child, who is not granted Korean nationality, is born in Korea, the parents, etc., may register the birth of the child and apply for the peruse and issue of the certificate to prove the child's birth and identity.(Recommendations 132.118.-132.124.;SDG 10.3, 16.9)

Eradication of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against Foreigners and Migrants

The Government included the agenda to prevent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in the policy task of the third Master Plan for Immigration Policy (2018-2022), and the third NAP (2018-2022) also included policies to strengthen monitoring and deliberation on discriminatory and derogatory content and information. The Government has obligated broadcasters subject to caution and warning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 due to their violations of the *Regulations on Broadcasting Deliberation* which prohibits the aggravation of prejudice or mockery and insult against a specific race, to inform the viewers of the fact. Also, th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a system where if a broadcaster becomes subject to a restrictive measure, their points are deducted from the annual broadcast evaluation. The KCSC deliberates expressions of prejudice, mockery, insult, etc., against a specific race being distributed on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and requests them to correct the expressions under the *Regulations on Deliberation Regar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e Annex 1 and 2) (Recommendations130.25.;132.46.;132.47.;132.49.-132.55.;SDG10.3)

Guaranteeing Education and Granting Status of Residence for School-age Migrant Children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right to compulsory education for all children, including foreign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status of residence. If it is challenging to prove immigration or alien registration, compulsory education is still guaranteed when residency is proven. For academic background, an academic examination is taken to enter the public education system.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unregistered children taking education cours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not granted the status of residence and have to live in fear of deportation. The Government refrains from strictly controlling migrant children attending school until they complete the courses, delays the execution of forced deportation, and does not issue a protective order for children under 14.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epared conditional relief measures by collecting opinions from academia and field experts. Previously, the status of residence was granted only to children born in Korea, who stayed in Korea for at least 15 years, and enrolled in middle or high school or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Korea. But the eligibility for the status of residence, temporarily between 2022 and 2025, was significantly expanded by granting the status of residence to children who were born or entered Korea when they were under the age of six, stayed for at least six years, and were enrolled i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in Korea or graduated from high school, or other children who entered when they were aged six or older, stayed for at least seven years and were enrolled in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in Korea or graduated from high school in Korea. Their parents are temporarily permitted to stay in Korea until their children graduate from high school or become an adult.(Recommendations132.126.;132.129.;132.130.)

Protection of Labor Rights of Foreign Workers

To preven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foreign workers and protect

their working conditions,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guidance and inspections for about 3,000 workplaces every year.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sures, revocation, and restriction of employment permits were imposed on workplaces in violation thereof. They were subject to disadvantageous measures when new foreign workers are assigned.[24] To prevent foreign workers from failing to receive help due to language problems, interpretation and counseling services are provided through 40 foreign worker support centers and call centers, 49 employment centers, and 152 interpreters are providing interpretation support services during the foreign workers' visits to institutions for employment permits, visits to their workplaces, attendance surveys for the complainants, and investigations on workplace conditions.(Recommendations130.81.-130.84.;SDG 8.8)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a system that supports the shortage of manpower in workplaces where Koreans are not employed. As foreign workers are granted permission to enter and stay in Korea on condition that they work at the permitted workplace with the relevant employment permit, in principle, they must work at the original workplace but are allowed to change the workplace for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 worker, such as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late payment of wages, or violation of working conditions. However, by accepting the recommendation that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 could lead to human rights violations, the workplace change system has been improved eight times to expand the reasons for change. As a result, they are allowed to change workplaces no matter how many times they change in cases where

24)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of over 10,003 business places between 2018 and 2021, 5,416 were found to violate labor-related acts. For 18,900 violation cases of the labor-related acts, 17,471 corrective orders, 27 judicial actions, 484 fines, 237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681 notifications were imposed.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they cannot continue work for reasons not attributable to them, such as suspension or closure of the business operation, revocation of employment permits, violation of working conditions, and unfair treatment. From 2021, employers obtaining employment permits for foreign workers for the first time are required to receive training on labor-related law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health managemen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n addition, the training hours for labor-related laws, including occupational safety, were increased from 12 to 15 hours for employment training for foreign workers with employment permits after entering Korea. Workplaces punished pursuant to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for the death of foreign workers have been restricted from employing foreigner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foreign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starting in 2022. From 2023, individual agricultural and fisheries with less than five workers not subject to the mandatory subscrip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may hire foreigners only when they purchas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or agricultural workers' and fishermen's safety insurance. Workplaces must submit visual data about residential facilities when applying for an employment permit from 2021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If the facility is an illegal temporary building,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shall not be permitted. Foreign workers living in such illegal facilities are allowed to change their workplaces. By applying the labor relations acts to female foreign workers employed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t is monitored if they are not dismissed due to pregnancy or childbirth,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re guaranteed, and benefits for maternity leave were paid during workplace inspections.(Recommendations132.127.-132.128.;SDG 8.8)

Measures for Foreign Victims of Crime

The Government has granted "other" status of residence (G-1) from 2013 to foreign victims of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and human trafficking, to ensure a stable stay until the right remedy procedures, such as investigations

and lawsuits, are completed. Legal aid is provided to victims of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free of charge. When the *Act on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is enforced, legal support for female foreign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will be strengthened.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CVA) does not discriminate against the applicable targets by dividing them into Koreans and foreigners. Still, if a foreigner is a crime victim or bereaved, he or she can be eligible for relief payments only if there is a mutual guarantee from his or her own country. Also, the prosecutors provide financial support, including medical expenses, living expenses, etc., for crime victims who are foreigners with a legal status of res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To expand the scope of relief funds support, the MOJ has submitted a bill for the amendment to the CVA to provide relief money to marriage immigrants regardless of mutual guarantees and further plans to support the discussions for the legislation.(Recommendation 130.72.;SDG5.2.;16.3.)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In response to soaring applications arising out of the enforcement of the *Refugee Act* in 2013,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secured officers dedicated to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for efficient response with expertise, thereby successfully preventing long wait times[25] and offering prompt protection to refugee claimants. (See Annex 3) Meanwhile,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RSD officers, the Ministry made it mandatory for the officers to complete related training and education and has invited outside experts, such as the UNHCR, to bring a diverse set of courses. In addition, the launch of the Refugee-Dedicated Interpreter Certification ensures that certified interpreters who have completed the training and passed the test of an outside institution offer interpretation based on

25) As a result of persistent efforts to add more RSD officers, the figure climbed to 90 in 2021 from 39 in 2018 and 18 in 2013, the year of enforcing the *Refugee Act*.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enhanced understanding and skills as to RSD during a case review. Audio or video-recording of refugee interviews began in earnest, better ensuring the procedural rights of refugee claimants while efforts to change negative public perception toward those seeking asylum continue by, for instance, starting refugee awareness education for local government employees who serve the public on the frontline. Currently, the Government is preparing for the amendment to the *Refugee Act* for applicants to receiv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not only during interviews but also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and getting notification of the review results, and to allow those with humanitarian grounds to obtain a work permit earlier.

3. Recommendations Unimplemented

a.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Treaties

The Government is still considering its position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of their Families because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environment must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26] However, the Government joined in the adoption of the Global Compact for Migra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December 2018, which was based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s, their non-discriminatory access to the labor market and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migrants.(Recommendations131.1.;132.13.-132.15.;132.125.)

The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26) The obligation to protect and promote family reunification of migrant workers(Article 44), the obligation of the state party to set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who entered Korea for employment to engage in self-employment(Article 52, paragraph 4), birth registration and nationality of children of all migrant workers(Article 29), efforts to regulariz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ticle 69(1))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of their Families are in conflict with the current *Immigration Act, Nationality Act, Foreign Workers' Employment Act*, etc.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and Punishment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over potential conflicts with domestic laws,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overseas cases. As the Protocol ensures the UN Sub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Torture to access the information on detention facilities and all places of detention, it is difficult to immediately ratify the Protocol due to the potential conflicts with domestic laws, such as the protection of secrets of the military and confidentiality. The Government is currently reviewing the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nsidering the potential conflicts with domestic laws and the necessity to amend the laws.(Recommendations132.7.-132.8.)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in education by ensuring free education until high school pursuant to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The ratification of the 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will be continuously considered.(Recommendation131.2.)

b. Changes in Domestic Institutions

Enactment of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under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It has continued to make legislative effort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individual laws on disabilities and ages, etc. The bills on the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everal times since 2007 but failed to be discu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social controversies over the reasons for anti-discrimination, etc., and ended up being withdrawn or denunciated. Four bills were presen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the public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review was held in May 2022. The Government will support the legislative discussion of related bills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Recommendation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32.26.-132.45.;132.57.-132.62.;132.64.;SDG10.3)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d as a *de facto* abolitionist state, has not executed the death penalty for about 25 years since December 1997. The Government voted for the 75th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use of Moratorium on Death Penalty in November 2020[27] and the 48th HRC resolution on the Question of the Death Penalty in October 2021[28] for the first time. The above votes were to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However,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s a serious matter related to the foundation of the punitive authority of the state. It requires careful review with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public opinion, its function in criminal justice,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cluding resolutions of the UN General Assembly. The Government will support the legislative discussion of related bills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Recommendation 132.70.-132.89.;132.4.-132.6.)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In February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rime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provided in the *Criminal Act* is constitutional. Decriminalizing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is a matter that must be carefully reviewed in careful consideration not only of freedom of expression but also of whether there is a gap in the protection of victims, whether there is a system for punitive damages, a strong civil sanction, etc. The Government will support the legislative discussion of related bills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Recommendations132.107.;132.108.)

---

27) See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A/RES/75/183)

28) See the UN HRC resolution on the Question of the Death Penalty(A/HRC/RES/48/9)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Based on the court precedents,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applied to the necessary and minimum extent only when there is a specific and obvious risk that may practically endanger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or democratic order to prevent unfair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by the application thereof.[29](Recommendations132.25.;132.90.;132.109.-132.111.; SDG16.1;16.3)

IV. Implementation of Voluntary Commitments and National Efforts in the Context of COVID-19

As a member of the UN HRC (2016-2018 term, 2020-2022 term), the Government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discussions on human rights within the HRC and the Third Committee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led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s on 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and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to expand the basis of human rights discussion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actively participate in discussions at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and make financial contributions to the OHCHR to contribute to the UN and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The Government made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vulnerable groups in the context of COVID-19. Various policies were implemented to prevent a discontinuity in childcare, and measures were established to resolve deepened female employment crisis. Also, online learning connected with the social distancing phases was provided to protect the safety of children and ensure their rights to learn.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was supported for the government briefings on COVID-19 for

29) Accordingly, the number of persons prosecuted for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was seven in 2017, four in 2018, one in 2019, two in 2020, and 11 in 202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ll people with disabilities to access relevant information. To ensure migrants' rights to health, the Government conducted policies including COVID-19-related interpretation support and COVID-19 testing without checking visas. (See Annex 4).

Annex

〈Annex-1〉 Details of Broadcasting Deliberation and Resolution (November 2017-May 2022)

Category	2017	2018	2019	2020	2021	May 2022	Total (case)
Results of resolution	0	3 (1 recommendation; 2 opinions)	7 (4 recommendations; 3 opinions)	2 (1 recommendation; 1 opinion)	2 (1 recommendation; 1 opinion)	0	14

* Violation of Article 31 of the *Regulations on Broadcasting Deliberation*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nex-2〉 Details of Request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and Derogatory Information in Communications Deliberation (November 2017-May 2022)

Category	2017	2018	2019	2020	2021	May 2022	Total (case)
Number of deliberation cases	1,356	2,638	1,886	1,580	1,369	519	9,348
Requests for correction (deletion, blocking of access)	1,166	2,352	1,406	473	308	267	5,972

* Violation of Article 8, subparagraph 3, item f of the Regulations on Deliberation Regar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tent containing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religion, disability, age, social status, orientation, race, region, job, etc. or encouraging such discrimination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nex-3〉 Number of Refugee Applications (Filed, Screened, and Pending)

(Case level: F=First instance cases)

Category	1994-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Filed	9,539	5,711	7,541	9,942	16,173	15,452	6,684	2,341
Screened (F1)	7,416	4,522	7,061	6,416	6,601	10,013	14,032	9,676
Pending (F1)	2,123	3,312	3,792	7,318	16,890	22,329	14,981	7,646

〈Annex-4〉 National Efforts in the Context of COVID-19

Child Care Support

Due to the unexpected spread of COVID-19 since 2020, various ministries have jointly planned and operated programs to prevent discontinuity in childcare inside and outside elementary schools, including homes and villages. Village care institutions operated by the MOHW and the MOGEF minimized the discontinuity in care, even in the context of COVID-19, through an emergency care system. Also, the MOGEF has expanded childcare services, an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supported parental leave. In January 2020, the Government expanded the eligibility of family care leave from parents, spouses, children and parents of spouses to include custodial grandparents. People are allowed to take a maximum of 10 days of leave a year for not only diseases, aging, and accidents of families but also child-rearing.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an urgent need for care due to the closures of daycare centers and schools caused by the spread of COVID-19.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workers who need to care for their children to take family care leaves without financial burden under the “emergency support project to support family care costs caused by COVID-19.”

Support for Recovery of Female Employment

Eight government ministries have jointly established measures to quickly overcome the female employment crisis, which has deepened mainly in the face-to-face service industry due to COVID-19. The measures provide urgent support, such as creating 780,000 jobs for wome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pand jobs for femal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trengthen employment and startup support services for female workers' return to the labor market, support childcare and employment maintenance, and narrow the gender wage gap. With such measures,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recover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emale employment.

Guarantee of Right to Education

In April 2020, in a situation where face-to-face classes were difficult to hold due to COVID-19, the Government decided to gradually begin online classes to protect the safety of students and minimize their learning gaps. Since then, in connection with the social distancing phases,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support the expansion of school attendance and the normaliza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As a result, through the school's efforts to fully restore their daily lives, all students have returned to school since May 2022 to guarantee their right to learn.

Sup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February 2020, the Government has provide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for the briefings of the COVID-19 quarantine authorities to ensure the deaf people's right to know and raise public awareness of sign language.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the budget for the production of progra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help them watch broadcasts (closed captions, screen commentary, and Korean sign language). In October 2021,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Media Support Policy for the Underprivileged (2021-2025) to reduce the digital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divide from media chang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and has sought policies expanding mandatory broadcasting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mproving access to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etc.

Support for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o provide COVID-19 information to multicultural families suffering from language problems, call centers provided COVID-19-related guidelines and information in 13 languages. The MOJ has also allowed foreigners to be tested for COVID-19 from the early stages, free of charge, at medical institutions without checking their visas. In this case, they were exempted from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enforcement or deportation. In addition,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incentive grant system under which foreigners without visas who have completed domestic vaccination and voluntarily left the Republic of Korea are exempted from fines, and their entry restrictions are deferred. From May 2020, a temporary release has been implemented for older persons and patients vulnerable to COVID-19 among foreigners detained in foreign detention facilities. The Government made efforts to alleviate overcrowding of detention facilities by activating departure orders that allow people to leave the country on their own instead of forced deportation orders by introducing the "departure order implementation deposit system" starting in January 2021. From December 2020, preemptive PCR diagnostic tests were conducted for foreigners under detention to deter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detention centers. In August 2021, the Government vaccinated long-term foreign detainees and inoculated them three times. In March 2022, the Government designated residential treatment centers for detained foreigners to help them receive appropriate medical support when positive COVID-19 cases are found.(SDG3.8.)

Support for Artists

Through the "COVID-19 temporary support for artists" in the first half of 2022, the Government supported low-income and vulnerable artists who are suffering from fewer opportunities to perform their creative activities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By providing KRW 100 billion in support to approximately 70,000 people,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the stabilization of the livelihood of artists and continuance of their artistic activities.

4. 제4차 UPR 이해관계자 요약보고서 (2022. 11., OHCH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United Nations A/HRC/WG.6/42/KOR/3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4 November 2022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uncil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Forty-second session
23 January–3 February 2023

Summary of stakeholders' submissions on the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 Background

1. The present report was prepar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s 5/1 and 16/21,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eriodicity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the outcome of the previous review.[1] It is a summary of 27 stakeholders' submissions[2] fo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presented in a summarized manner owing to word-limit constraints. A separate section is provided for the contribution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hat is accredited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II. Information provid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ccredited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NHRCK) recommended the ratification of ICRMW[3], ICPPED[4], ICCPR-OP2[5], OP-CAT[6], OP-ICESCR, OP-CRC-IC[7] and OP-CRPD.[8]

3. NHRCK stated that recommendations from human rights treaty bodies, particularly decisions of those bodies on individual complaints had not been fully implemented.[9]

4. Four anti-discrimination bills have been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NHRCK recommended enacting the proposed Equality Act,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other grounds in all spheres of life.[10]

5.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in 2021–2022, the Korean society witnessed the escalation of gender conflict, including hatred and violent expression against women, and controversy over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11]

6. NHRCK recommended that the authorities consider abolishing the capital punishment and introducing alternatives to death penalty.[12]

7. NHRCK recommended that the authorities review the protection and prevention mechanisms on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and prevent retaliation against those who

* The present document is being issued without formal editing.

reported sexual violence, and prevent suicide in the military, paying attention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root causes of suicide.[13]

8. NHRCK recommended reducing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14]

9. NHRCK recommended ensuring the rights to justice and remedies for victims of sexual slavery by the military of a foreign country (comfort women).[15]

10. NHRCK recommended preventing big data-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causing human rights violation and discrimination.[16]

11. Under Article 83(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courts and investigative agencies might reques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to provide communications data without a warrant, in order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r trial. However, the scope and extent of requests were broad, and a proper system of a control over such procedures did not exist. NHRCK recommended introducing control systems and procedures to prevent an arbitrary use of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by investigative agencies.[17]

12. The domestic legislation prohibited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from engaging in political activities, including the expression of political views, membership of political parties, and campaigning in elections. NHRCK recommended revising relevant laws to eliminate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political freedom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18]

13. NHRCK recommended reducing gaps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nd guaranteeing the labour rights to employees in new forms of employment, including platform workers. It recommended expanding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safeguard the lives and safety of workers and citizens effectively,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rough its stricter enforcement when industrial accidents occur.[19]

14. NHRCK recommended establishing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for climate risks and developing action plans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vulnerable to climate risks.[20]

15. NHRCK recommended the provision of access to safe abortion, including insurance coverage of abortion.[21]

16. NHRCK recommended strengthening legislative measures and financial support to enhance the ac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facilities.[22] It recommended minimizing the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es, and establishing community-based system for mental health and treatment.[23]

17. NHRCK recommended reducing excessive restrictions on migrant workers to change their workplace, and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24]

18. Noting a low refugee recognition rate and the absence of an appeal process for rejected applications for refugee status, NHRCK recommended increasing the fairnes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to guarantee the rights of refugee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Refugee Act, and establishing appeals procedures by an independent body for rejected applications.[25]

III. Information provided by other stakeholders

A. Scope of international obligations[26] and cooperation with human rights mechanisms

19. It was recommended that the authorities ratify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27], the Convention No. 105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28], and the Amendment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29]

20. JS14 recommended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s on the Article 22 of the ICCPR.[30]

21. ICAN called upon the State to sign and ratify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3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B. 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and policy measures

22. JS7 stated that the authorities should expand human resources and budge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evise the Act on the Commission to establish an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 in order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the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 should be respected.[32]

C.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1.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taking into account applicabl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23. JS2, JS6 and JS7 noted the failure of adopting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since 2007.[33] AI recommended enacting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among others,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expression and sex characteristics.[34]

24. HRW reported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LGBT persons,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35], and older persons as well as against racial or ethnic minorities.[36] Access to justice of those groups were limited.[37]

25. JS6 reported on exclusion of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living with HIV/AIDS at medical institutions. Cases of refusal to examine and treat them owing to concern for HIV infection have continued to occur.[38] Discrimination against and violations of the rights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in detention facilities had occurred. HIV-positive inmates were reportedly kept in solitary confinement and their seropositive status were disclosed by prison officers.[39] JS6 recommended preventing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ealth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living with HIV/AIDS, especially those in detention facilities. JS6 recommended abolishing the criminalization of potential HIV transmission by repealing Article 19 of Preven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t.[40]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nd freedom from torture

26. AI stated that death sentences continued to be imposed although no executions had been carried out since 1997.[41] JS13 and JS8 noted a brief submitted by the Government in 2021 to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a death-penalty case, arguing for the retention of the death penalty.[42] AI recommended commuting all death sentences without delay to terms of imprisonment and adopting legislative measures to fully abolish the death penalty.[43]

27. JS3 noted that the State's defense policy included nuclear deterrence undertaken in cooperation with a foreign country and provided for the possibility of a use of nuclear weapons in retaliation against a nuclear attack and the first use against an adversary in an armed conflict.[44] JS3 recommended that the authorities announce a policy to relinquish its reliance on the first-use of nuclear weapons and propose regional negotiations for a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in order to phase out reliance on nuclear deterrence without reducing national or regional security.[45]

28. Reporting on cases of violence and death in the military, JS8 sta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full investigation of such cases, punish perpetrators and responsible officers, and provide adequate assistance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46]

29. JS8 sta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define torture and cruel and inhumane treatment or punishment as a crime, exclude the application of statutes of limitations for such crimes, and provide psychological support to the victims and ensure their right to reparation.[47]

30. JUBILEE noted reports that many defectors from the neighbouring country suffered from social stigma, mistreatment, and discrimination.[48] JS13 stated that they were at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prolonged administrative detention and torture, and forced repatriation to their country, and were not afforded the due process, including the right to an attorney and to be brought before a judge to assess the legality of the detention.[49]

Administration of justice, including impunity, and the rule of law

31. JS8 sta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solitary confinement remains an exceptional measure of last resort and applied for a duration that does not exceed 15 days.[50]

32. JS4 reported on unresolved cases of victims of sexual slavery by a military of a foreign country prior to an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omfort-women), including the Government's failure to fulfil the victims' right to justice and reparation.[51] AI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refrain from allowing the invocation of procedural hurdles hampering efforts of comfort-women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to obtain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through justice procedures and work with the foreign country and other affected countries to ensure that effective systems are put in place to implement reparation measures for survivors, taking into account their views and needs.[52]

33. JS13 noted unresolved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including since the Korean War and decades-long authoritarian rule, as well as abduction of civilians and internment of prisoners of war by the neighbouring country.[53] Similarly, KPRC and NKHR reported on cases of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54] NKHR observed that numerous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 have remained in detention in the neighbouring country and that approximately 90,000 prisoners of war have been enslaved in various mining zones.[55] KPRC noted a lack of adequate efforts of the Government to investigate the cases of enforced disappearances by the neighbouring country.[56] NKHR observed that the Government neither asked for repatriation of its citizens, nor had used the term "abductees" during negotiations with the neighbouring country to avoid confrontation. NKHR explained that victims' family members have had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lready revealed because of government restrictions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ased on national security or privacy. The Government has classified the victims of abduction and their families as separated families, not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57]

34. NKHR stated that the Government must adopt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and national program to provide full and effective reparation, encompassing measures of compensation, rehabilitation, restitution and satisfaction. NKHR recommended establishing a specialized crime unit and an independent unit with a centralized information system to provide access to truth, accountability and reparation to its citizens.[58]

Fundamental freedoms

35. IFOR and CPTI not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2018 that the failure to offer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to conscientious objectors was unconstitutional. Likewise, the Supreme Court held that moral and religious beliefs were valid reasons to object to military service.[59] IFOR, CPTI, JS1 and AI reported on the adoption of legislation on alternative service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December 2019.[60]

36. AI stated that the legislation, however, still violated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or belief because it imposed unreasonable and excessive burdens on conscientious objectors. It stipulated a disproportionate length of the alternative service – 36 months, compared to 21 or 18 months for military service, and provided that military authorities shall administer the alternative service.[61] CPTI reported that the procedures for assignment to alternative service were to be suspended in a time of general mobilisation.[62]

37. IFOR stated that the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was performed in prisons or other correctional facilities.[63] JS1 explained that because alternative service was restricted to correctional facilities, only 1,600 of the approximately 3,200 applicants could be accommodated by 2023.[64] IFOR highlighted that the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performed in prisons and correctional facilities might not be compatible with conscience reasons of certain individuals objecting military service and that certain conscientious objectors still faced

imprisonment.[65] JS1 concluded that the State had not yet provided a genuinely non-punitive civilian alternative service, mee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66]

38. AI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make provis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carry out an appropriate alternative and non-puni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and of a comparable length to military service with any additional length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67] IFOR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place the assessment of applica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 status under the full control of civilian authorities, and release all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prison, cease the prosecution, imprisonment and criminalization of all conscientious objectors, and provide effective remedy, including adequate reparations, to all conscientious objectors who have suffered violations of human rights.[68]

39. HRW stated that the Government continued to use criminal defamation laws and sweeping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laws to restrict speech.[69] HRW recommended that the State revoke all criminal defamation laws and ensure its civil defamation and criminal incitement laws are written and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provide protections for freedom of expression.[70]

40. AI recommended that the authorities repeal, review or amend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particular its Article 7, so that it complie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 This law should not be used to harass, intimidate, arrest or prosecute those who are law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71]

41. JS14 stated that the Government did not br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Criminal Code in compliance with article 21 of the ICCPR during the reporting period.[72] AI recommended amend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o bring it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73]

42. JS7 reported that the Government has imposed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74] JS14 noted the adop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at conferred powers to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put a broad ban on public assemblies and impose disproportionate criminal sanctions for violations without a check-and-balance mechanism.[75] AI reported that after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bans on assembli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were arbitrary and disproportionate.[76]

43. AI recommended ensuring that measures that restrict the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for reasons such as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tandards.[77] JS7 stated that Article 49(1) of the Infection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can be imposed only through clear grounds and appropriate procedures.[78]

44. JS14 and JS9 stated that public officials, school teachers and employees in public institutions and cooperatives were banned from freely joining a political party or political organization, and from freely expressing political opinions with punitive sanctions under several laws.[79] JS14 recommended ensuring the right to freely associate and free expression of political opinions of public officials who are not employed in state administration, teachers, and employees in public institutes and cooperatives by repealing the laws that restrict access to those rights.[80]

Right to privacy

45. HRW recommended that the authorities better define the offenses subject to surveillance b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nd limit the scope of the work of the NIS, linking it closely to countering serious external security threats.[81]

46. JS7 stated that the authorities should provide adequate safeguards to ensure the right to privacy during infectious disease situations and improve the infectious disease-related legislation that infringes the right to privacy.[82]

Prohibition of all forms of slavery, including trafficking in persons

47. JS10 stated that the legal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was narrow. Thus, perpetrators of crimes falling under the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in the Palermo Protocol had not been prosecuted and punished. The legislation did not provide for adequate punishment for the crime of human trafficking. Investigative agencies and immigration officials had not been able to identify effectively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victims have been detained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res and forcibly deported instead of receiving protection.[83]

48. JS14 noted that several provisions in domestic laws provided for imprisonment with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for various offences. JS14 recommended that the State review and amend those legal provisions imposing imprisonment with labour in conformity with ILO Convention No.105, in consultation with trade unions.[84]

Right to work and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49. JS12 stated that the Labour Standards Act did not apply to more than 60 percent of workplaces as its key provisions, including on payments for overtime work and paid annual leave, covered only business or workplaces with five and more regular employees.[85] JS14 recommended repealing Articles 11 and 18(3) of the Labour Standards Act to ensure all workers, regardless of form of employment, are entitled to the same labour protection.[86]

50. JS14 stated that a narrow definition of employee in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excluded the growing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and other forms of disguised employment. The size of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has amounted to 61.65 percent of the total workforce in 2021.[87] JS14 recommended repealing Article 2(1), Article 23(1), Articles 12 (1)–(3) of the Act, and amending the Act in conformity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ILO. The Government should consult trade unions on regularization policies to close the gaps in the employment conditions and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non-regular and regular workers.[88]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51. JS10 state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supply of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so vulnerable groups can afford to pay housing rent, and revis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enants.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housing strategies to end homelessness and reduce informal settlements and substandard houses that do not meet minimum housing standards. The state housing policy should include migrant workers and youths among its targets.[89]

Right to health

52. JS12 noted that the rate of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 was 65.3 percent, which was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80 percent. JS12 recommende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coverage.[90]

53. JS7 stated that during COVID-19 pandemic, health inequities deepened because needs of social minorities,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migrant workers, and homeless people had not been considered. Mass infections had occurred in institutions where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ed. Measures of testing and treatment for people living in inadequate housing or homeless people had been insufficient. Financial support did not cover migrant workers and homeless people.[91]

54. JS2 stat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2019, that the criminalisation of abortion by the Criminal Code was unconstitutional and called on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anti-abortion provisions by 31 December 2020. As the National Assembly failed to adopt bills revising the anti-abortion provisions, Article 269 Paragraph 1 and Article 270 Paragraph 1 of the Criminal Code became null and void in January 2021.[92] HRW noted that due to the legislature's failure to act to implement the court ruling, there remained little clarity on how, when, or where an abortion can be obtained.[93]

55. AI recommended reforming the Criminal Act and ensuring universal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94] JS2 recommended that the authorities design and implement policie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nd programmes with adequate budget to provide safe, accessible, and quality abortion services to all women.[95] HRW recommended providing information abou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cluding abortion, to the public.[96]

Right to education

56. HRW stated that children with Korean citizenship have a right to nine years of compulsory education. It observed, however, that access to education was discriminatory. Although migrant children might have the right to attend school, they did not benefit from compulsory educati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faced difficulties obtaining an education.[97] HRW recommended ensuring all children have a right to free and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and access to education on a non-discriminatory basis.[98]

57. HRW noted that in schools, LGBT children and young people experienced isolation and mistreatment including bullying and harassment, a lack of confidential mental health support, and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dentity.[99] JS6 recommended ensuring that LGBTI youth are free from discrimination and bullying in schools.[100]

58. HRW recommended conducting a major reform of the sexuality education curriculum to remove gender stereotypes, provide scientific information about healthy sexuality and include inclusive teaching about consent, gender-based violence and healthy relationships.[101] It recommended redesigning the national sexuality education curriculum to include materials about sexual orientations and gender identities and objective information on prevention and treatment for HIV and othe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102]

Development, the environment, and business and human rights

59. JS11 stated there was no strategy to implement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103]

60. AI stated that the emissions reduction target of the State was far below the minimum required level to keep the global temperature rise below 1.5°C. The reduction plan was still evaluated as highly insufficient.[104] JS11 stated that the Government continued to build coal power plants at home and abroad.[105]

61. JS12 reported on an absence of laws that mandate companies to conduct compulsor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in their supply chains. The government should enact laws to mak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mandatory for Korean companies, including government-funded overseas development project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mprehensive measures to respond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by Korean companies operating overseas.[106]

2. Rights of specific persons or groups

Women

62. JS2 stated that women and girls continued to experience structural and systemic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which have been rooted in the patriarchal social norms of the society.[107] JS2 and AI recommended promoting gender equality, including by eliminating the driver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uch as harmful gender stereotypes.[108]

63. JS2 stated that women experienced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 political domains. In the Parliament, women hold just 57 seats (19 percent) out of 300, which is more women in Parliament than ever before.[109]

64. JS11 and JS2 reported on exis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recruitment.[110] JS11 and HRW noted that the State has had a high gender pay gap with a 31.5 percent difference between the genders in 2020.[111]

65. JS2 recommended reducing gender inequality, including by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political and public life, and in the private sector, ending the gender pay gap and increasing equity in caregiving.[112]

66. HRW stated that violence, sexual harassment and online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remained widespread.[113] Similarly, JS2 noted a rise in gender-based

violence and cyber-crimes against women and girls, including sexual violence, harassment and bullying on digital platforms such as Telegram and on social media.[114]

67. JS2 stat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d adopted a law, which came into force in 2021 and subjected online platforms to criminal punishment if they did not stop the circulation of digital content involving sexual crimes on their platforms.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government-led support system for the victims. However, it was not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he support centres remained understaffed or did not have the trained staff to provide the required support to victims. Victims of cyber-sex crimes were reportedly not able to receive effective redress due to flaws in the prosecution processes, and inadequate punishments for cases that resulted in convictions.[115]

68. JUBILEE encouraged the authorities to create stricter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and to hold abusers accountable through the justice system.[116]

69. JS2 and JS11 recommended eliminating cyber sexual violence through online platforms.[117] JS2 recommended providing sufficient funding to support services for all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118] AI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recognize the transnational nature of online gender-based violence and encourag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intermediaries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all forms of online discrimination and violence.[119]

70. JS2 recommended revising the legal definition of rape to include absence of cons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120]

71. Noting gaps in legislation to punish sexual harassment, HRW recommended that the State ratify and make reforms in alignment with the ILO Convention on Violence and Harassment (No. 190), including comprehensive measures to promote prevention, monitoring, and remedies to ensure work free from violence and harassment.[121]

Children

72. ECLJ noted that the age of consent has been 13. Therefore, if a child over the age of 13 claims having a sexual activity with an adult in a consensual situation there were no clear regulations, and the punishment was up to judges' discretion.[122]

73. Noting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s of child abuse, JS11 sta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ystem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and for the prevention of recurrence of child abuse, and a child-rights based support system.[123] JUBILEE urged the authorities to exercise due diligence in investigating reports of reasonable suspicion of child abuse submitted by day-care and school workers, and medical professionals.[124]

74. JS5 and JS11 stated that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required parents with Korean citizenship to report the birth of their child. However, there were no monitoring mechanism to check the parents' compliance with their birth registration obligations.[125]

75. JS11 stated that parents with foreign nationality had to register the birth of their children through the embassies of their countries.[126] JS5 explained that refugees,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refugee status applicants found it difficult or impossible to report their children's birth to a state agency of their home country.[127] JS5 stated that in 2022, the Government proposed a bill to mandate all healthcare providers to notify births of children to a state institution. However, under the bill,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did not apply to children of undocumented migrant parents without alien registration numbers or medical benefits management numbers.[128]

76. JS5 and JS11 recommended introducing a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to guarantee that every child bor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officially registered, regardless of their parents' nationality, race, religion, or legal or social status.[129] Additionally, JS11 sta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its birth registration system to allow children born to unwed parents to be registered without difficulties.[130]

Older persons

77. JS12 sta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ecure sufficient budget for the care of older persons, considering inter alia an increase in cases of abuse against them.[131]

78. JS12 reported on a high poverty rate among older persons.[132]

Persons with disabilities

79. JS10 reported that the average w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whom the minimum wage did not apply was only 20 percent of the minimum wage in 2020, and 11 percent of the national average wage. Most of those paid under the minimum wage were working in 'sheltered workshops' that separated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he rest of the society.[133]

80. JS10 noted that the number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institutions has decreased from 31,406 in 2014 to 29,086 in 2020. The budget for institutions was about 300 times the budget for deinstitutionalization.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perienced difficulties living in the community. The type and amount of services were too narrow to suppor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y. As a result, many families still wanted their family memb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enter the institutions.[134]

81. JS10 sta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laws and syste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t mee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secure adequate budget for their implementation.[135]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82. AI stated that LGBTI persons continued to face legal, social and economic barriers, which increased their social exclusion and isolation.[136]

83. Noting cases of hate crimes against LGBTI persons, JS6 recommended preventing and investigating homo/transphobic hate speech and hate crimes.[137]

84. JS7 stated that transgender people could apply for legal gender recognition according to Supreme Court rules, not a law, and that the rules included strict requirements for legal recognition.[138] AI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top conditioning legal gender recognition for transgender individuals upon unreasonable and discriminatory requirements such as undertaking psychiatric diagnosis, seeking medical treatment, the prohibition to marry or having children, and that the recognition is made through swift and accessible administrative procedures based on individual self-declaration.[139]

85. JS6 recommended ensuring the bodily integrity of intersex persons, especially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by prohibiting unnecessary medical interventions carried out without their free and fully informed consent.[140]

86. AI stated that the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continued to be used to punish consensual sexual activity between men with up to two years in prison. As a result of the criminalization of sex between men in the military, LGBTI soldiers experienced discrimination, intimidation, violence and isolation.[141] JS6, JS8, AI and HRW recommended repealing Article 92(6) of the Act, which prohibited and punished consensual same-sex sexual conduct in the military.[142] HRW recommended dropping all cases against soldiers charged for consensual same-sex activity.[143]

87. JS6 reported on discrimination against same-sex couples in the enjoyment of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JS6 stated that same-sex couples could not enjoy the same rights guaranteed for married opposite-sex couples.[144] JS7 explained that de-facto couples of the opposite sex could receive the same social security benefits as legally married couples, but same-sex couples could not.[145] JS6 recommended ensuring that same-sex couples are not discriminated in the realisation of their economic and social rights and benefits, and legalizing same-sex marriage.[146]

Migrants, refugees and asylum-seekers

88. JS10 stated that the Government limited the number of times and reasons migrant workers can change a workplace and that many migrants were forced to work at workplaces despite non-payment of wages or verbal abuse.[147] JS14 noted that the 2019 revision of article 25 of the Foreign Workers Act had not removed the limit to the number of workplace change

allowable to migrant workers.[148] JS14 recommended amending the Act to ensure that migrant workers are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free choice of employment.[149]

89. JS10 reported on the poor condition of dormitories for migrant workers. Illegal temporary buildings such as greenhouse, containers, prefabricated panels, and temporary buildings within the workplace were still being provided as dormitories.[150]

90. JS10 noted that the visa for foreign spouses who married Korean citizens depended on whether they were maintaining a family with their spouse or raising children, and in case of divorce whether they could prove the divorce was due the spouse's fault. Therefore, JS10 concluded that the stay of marriage-migrant women in the country depended on their Korean spouse's will to support.[151]

91. JS10 stated that there was neither limit on the period of detention in the Immigration detention centre nor external independent body monitoring legality of the decision on detention. Some refugee applicants were detai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detention centres were overcrowded.[152]

92. JS10 noted a low level of refugee recognition rate. Refugee applicants were not provided with interpretation at the stage of filing an application. Legal assistance guaranteed under the Refugee Act was not provided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Due to the delay in the determination process, refugee applicants had to wait in an uncertain situation for a long time.[153]

93. AI recommended that the authorities stop arbitrary denial of and detention during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154]

94. AI recommended ensuring that all asylum-seekers have access to a fair, individualized and effective asylum procedure, and establishing mechanisms to ensure due process at its international borders so that all asylum-seekers are trea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cluding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155]

Stateless persons

95. JS5 reported on the absence of stateless determination procedure, legal provisions regarding definition, recognition and reduction of statelessness, and reliable data on the number of the stateless persons.[156]

96. JS5 stated that the children of refugees born in the country could not automatically acquire the nationality. Many of those children have been at a risk of being stateless.[157]

97. JS5 recommended developing and introducing an effective statelessness determination procedure and ensuring the right to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of the stateless persons.[158]

Notes

[1] See A/HRC/37/11 and the addendum A/HRC/37/11/Add. 1, and A/HRC/37/2.

[2] The stakeholders listed below have contributed information for this summary; the full texts of all original submissions are available at: www.ohchr.org (one asterisk denotes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with A status).

Civil society

Individual submissions:

	Conscience and Peace Tax International (Switzerland);
AI	Amnesty International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GNK	Center for Global Nonkilling (Switzerland);
ECLJ	European Centre for Law and Justice (France);
HRW	Human Rights Watch (Switzerland);
ICA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Switzerland);
IFOR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Netherlands);
IRICH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ontroversial Histories (Japan);
JSHT	Japan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Japan);
JUBILEE	Jubilee Campaign (United States of America);
KPRC	Korean Peninsula Research Club (Republic of Korea);
NKHR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epublic of Korea);

Joint submissions:

JS1	**Joint submission 1 submitted by:** Joint Submission by the Asia-Pacific Association of Jehovah's Witnesses (Japan) and the European Association of Jehovah's Witnesses (Germany);
JS2	**Joint submission 2 submitted by:**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Thailand), and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and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Republic of Korea);
JS3	**Joint submission 3 submitted by:** Basel Peace Office (Switzerland), Abolition 2000 Working Group on Nuclear-Risk Reduc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Aotearoa Lawyers for Peace (New Zealand), Pax Christi Korea, World Future Council (Germany) and Youth Fusion;
JS4	**Joint submission 4 submitted by:** Comfort Women Action for Redress and Education, and Daegu Citizen's Forum for Halmuni (Republic of Korea);
JS5	**Joint submission 5 submitted by:** Duroo – 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Dr. Chulhyo Kim and Nationality For All (Republic of Korea);
JS6	**Joint submission 6 submitted by:**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 Minority Discrimination coalition of 43 NGOs (Republic of Korea);
JS7	**Joint submission 7 submitted by:** Coalition of 461 NGOs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ncludes South Korean NGOs Coalition for Law Enforcement Watch,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Hope and Law', National Action to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Act,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 Watch, KTNC Watch, Join Action for Setting Right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Refugee Rights Center, Green Korea United,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upporters Health And Right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 Duroo – Association for Public Interest Law, National Solidarity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Rainbow Action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 Open Net,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Migrants Trade Union,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South Korean NGO Task Force to monitor government human rights policy,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 committee for Labor Rights, World Without War, Korean Network for the Right to Housing,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South Korean Coalition for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ing Dong, Solidarity for Child Rights Movement Jieum, Youth Housing Rights Network, South Korean Human Rights Network in Response to the COVID-19,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Korea Cyber Sexual Violence Response Center,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n Womenlink,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WeFriends,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and Korean Disability Forum;

JS8 **Joint submission 8 submitted by:** Coalition of 461 NGOs (Republic of Korea),

JS9 **Joint submission 9 submitted by:** Coalition of 461 NGOs (Republic of Korea);

JS10 **Joint submission 10 submitted by:** Coalition of 461 NGOs (Republic of Korea);

JS11 **Joint submission 11 submitted by:** Coalition of 461 NGOs (Republic of Korea);

JS12 **Joint submission 12 submitted by:** Coalition of 461 NGOs (Republic of Korea);

JS13 **Joint submission 13 submitted by:**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and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epublic of Korea);

JS14 **Joint submission 14 submitted by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Belgium), and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Republic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NHRCK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3] See also JUBILEE, para. 4.
[4] See also CGNK, p. 7; JS7, p. 4; JS13, pp. 6–7; JUBILEE, para. 4 and NKHR, p. 6.
[5] See also CGNK, p. 6; JS7, p. 4; JS8, p. 5; AI, para. 46 and JUBILEE, para. 4.
[6] See also JUBILEE, 4; JS8, p. 5 and JS7, p. 4.
[7] See also JS7, p. 4.
[8] NHRCK, para. 19.
[9] NHRCK, para. 20.
[10] NHRCK, paras. 6–7.
[11] NHRCK, para. 44. See also JS11, para. 61 and JS2, paras. 17–18.
[12] NHRCK, para. 9, See also para. 2.
[13] NHRCK, paras. 31 and 33.
[14] NHRCK, para. 11. See also JS8, p. 6.
[15] NHRCK, para. 43.
[16] NHRCK, para. 17.
[17] NHRCK, para. 14–15.
[18] NHRCK, paras. 12–13.
[19] NHRCK, paras. 37 and 39.
[20] NHRCK, para. 55.
[21] NHRCK, para. 41.
[22] NHRCK, para. 23.
[23] NHRCK, para. 25.
[24] NHRCK, para. 47.
[25] NHRCK, paras. 48 and 49.

[26] *The following abbreviations are used in UPR documents:*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P-ICESCR	Optional Protocol to ICESCR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OP 2	Second Optional Protocol to ICCPR,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P-CAT	Optional Protocol to CAT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P-CRC-IC	Optional Protocol to CRC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ICRM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P-CRPD	Optional Protocol to CRPD
ICPPE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27] JS5, Section VII, para. 22.
[28] JS14, pp. 5 and 11.
[29] JS13, p. 13.
[30] JS14, pp. 5 and 11. See also JS7, p. 4.
[31] ICAN, p. 1.
[32] JS7, p. 5.
[33] JS2, para. 8; JS6, para. 3 and JS7, p. 10.
[34] AI, para. 26. See also JS2, para. 20; JS7, p. 10; JS6, p. 21 and HRW, para. 16.
[35] See also JS10, para. 46.
[36] See also JSHT, p. 5.
[37] HRW, para. 2. See also JS7, pp. 10 and 11.
[38] JS6, Section IX, paras. 41–45.
[39] JS6, Section IX, paras. 45 and 46.
[40] JS6, p. 22.
[41] AI, para. 23. See also JS13, p. 4 and JS8, p. 5.
[42] JS13, p. 3 and JS8, p. 5. See also NHRCK, paras. 2 and 8.
[43] AI, para. 45. See also CGNK, p. 6 and JS8, p. 5.
[44] JS3, p. 5.
[45] JS3, p. 8.
[46] JS8, pp. 8–10.
[47] JS8, p. 6.
[48] JUBILEE, para. 29.
[49] JS13, pp. 7–11. See also JS5, Section VI, para. 8.
[50] JS8, p. 7.
[51] JS4, p. 2. See also JS9, paras. 19 and 20; and IRICH, section 2.
[52] AI, paras. 37 and 38. See also JS4, pp. 6 and 11; and JS9, para. 20.
[53] JS13, pp. 7 and 17.
[54] KPRC, paras. 1–2 and NKHR, p. 2.
[55] NKHR, p. 2.
[56] KPRC, para. 3. See also NKHR, pp. 3 and 5.
[57] NKHR, p. 4. See also KPRC, paras. 19–22.
[58] NKHR, p. 6.
[59] IFOR, para. 3 and CPTI, para. 8. See also JS1, para. 8 and 9.
[60] IFOR, para. 4; CPTI, para. 9; JS1, para. 10; and AI, para. 5.
[61] AI, para. 6. See also NHRCK, para. 28; CPTI, paras. 15–20; IFOR, paras. 9 and 19; JS12, para. 31; JS1, paras. 15–19 and JUBILEE, para. 8.
[62] CPTI, para. 21. See also JS1, para. 25.
[63] IFOR, para. 11. See also NHRCK, para. 28 and JS1, para. 15.
[64] JS1, para. 24.
[65] IFOR, para. 4. See also JUBILEE, para. 8.
[66] JS1, para. 48. See also JS12, para. 31.
[67] AI, para. 27. See also See also NHRCK, para. 29; CPTI, para. 31; JS1, para. 49; IFOR, para. 23 and JS12, para. 31.
[68] IFOR, para. 23. See also AI, paras. 28–30; CPTI, para. 31 and JS1, para. 49.

[69] HRW, para. 2. See also HRW, paras. 21–24; JS12, paras. 32 and 33; AI, para. 20 and JS9, para. 27.
[70] HRW, para. 25. See also JS9, para. 27.
[71] AI, para. 41. See also HRW, para. 25 and JS12, para. 32.
[72] JS14, p. 5.
[73] AI, para. 40, See also JS9, para. 26 and JS14, pp. 6 and 11.
[74] JS7, p. 9.
[75] JS14, p. 5. See also JS7, pp. 7–9.
[76] AI, para. 17.
[77] AI, para. 39. See also JS14, p. 6.
[78] JS7, p. 9. See also JS14, p. 6.
[79] JS14, pp. 6–7 and JS9, para. 29.
[80] JS14, p. 11. See also JS9, para. 29.
[81] HRW, para. 25. See also JS9, para. 25.
[82] JS7, pp. 8–9.
[83] JS10, para. 50.
[84] JS14, pp. 4, 5 and 11.
[85] JS12, para. 34. See also JS14, p. 9.
[86] JS14, p. 11. See also JS12, para. 34.
[87] JS14, p. 7. See also JS12, para. 35.
[88] JS14, pp. 9 and 11. See also JS12, para. 35.
[89] JS10, para. 45.
[90] JS12, para. 40.
[91] JS7, pp. 6–7. See also JS10, para. 53.
[92] JS2, para. 14. See also NHRCK, paras. 40–41 and ECLJ, para. 5.
[93] HRW, para. 6. See also AI, para. 8; ECLJ, para. 5 and JS2, paras. 4 and 15.
[94] AI, para. 31. See also HRW, para. 7.
[95] JS2, para. 28. See also HRW, para. 7.
[96] HRW, para. 7.
[97] HRW, para. 8.
[98] HRW, para. 12.
[99] HRW, para. 14. See also JS6, paras. 4 and 21.
[100] JS6, p. 21.
[101] HRW, para. 7.
[102] HRW, para. 16. See also JS6, p. 21.
[103] JS11, p. 10.
[104] AI, para. 25. See also JS11, p. 11.
[105] JS11, p. 11.
[106] JS12, para. 38. See also NHRCK, para. 53.
[107] JS2, paras. 2 and 6. See also JS11, para. 61.
[108] JS2, para. 32 and AI, para. 34.
[109] JS2, para. 7.
[110] JS11, para. 63 and JS2, para. 6.
[111] HRW, para. 3 and JS11, para. 62. See also JS2, para. 6.
[112] JS2, para. 21. See also HRW, para. 7.
[113] HRW, para. 3.
[114] JS2, para. 9. See also JS11, para. 64.
[115] JS2, para. 13.
[116] JUBILEE, para. 21.
[117] JS2, para. 22. and JS11, para. 64.
[118] JS2, para. 23.
[119] AI, para. 35.
[120] JS2, para. 27.
[121] HRW, paras. 5 and 7. See also JS2, para. 24.
[122] ECLJ, para. 24.
[123] JS11, para. 58.
[124] JUBILEE, para. 27.
[125] JS5, Section VI, para. 1 and JS11, para. 56.
[126] JS11, para. 56. See also JS5, Section VI, para. 3.
[127] JS5, Section VI, para. 3. See also JS11, para. 56.
[128] JS5, Section VI, para. 2. See also JS11, para. 56.
[129] JS5, Section VII, para. 22 and JS11, para. 56.
[130] JS11, para. 6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31 JS12, para. 42.
132 JS12 para. 43. See also HRW, para. 17.
133 JS10, para. 47.
134 JS10, para. 46.
135 JS10, para. 46.
136 AI, para. 4. See also JS7, p. 10 and JS6, paras. 11 and 12.
137 JS6, paras. 4 and 21, and p. 21.
138 JS7, p. 11. See also AI, para. 9 and JS6, paras. 30 and 31.
139 AI, para. 33. See also JS6, p. 21 and JS7, p. 11.
140 JS6, pp. 21–22.
141 AI, para. 10. See also HRW, para. 15; JS7, p. 10; JS8, pp. 10–12; and JS6, paras. 5–7 and 13–15.
142 JS6, p. 21; JS8, p. 12; AI, para. 32 and HRW, para. 16. See also NHRCK, para. 35.
143 HRW, para. 16.
144 JS6, paras. 37 and 38. See also JS7, p. 11.
145 JS7, p. 11.
146 JS6, p. 22. See also JS7, p. 11.
147 JS10, para. 48. See also JS14, p. 10.
148 JS14, p. 10. See also JS7, p. 11.
149 JS14, p. 11. See also JS10, para. 48.
150 JS10, para. 48.
151 JS10, para. 52.
152 JS10, paras. 49 and 53.
153 JS10, para. 51.
154 AI, para. 42.
155 AI, paras. 43–44. See also JS10, para. 48.
156 JS5, Section IV, paras. 19 and 23 and Section V, paras. 25 and 26.
157 JS5, Section V, para. 29.
158 JS5, Section VII, para. 22.

5. 국가인권위원회 UPR INFO 사전세션 참석 발언문(2022. 11. 30.)

STATEMENT

The 42nd UPR Pre-session on the Republic of Korea
30 November 2022
Deliver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is an independent statutory body established in 2001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untry.

For the 4th cycle of UPR, the NHRCK submitted its report to the UN in July 2022 which proposes 25 recommendations for Korea.

In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NHRCK has chosen three issues to address in the UPR Pre-session:

- First, the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Act
- Second,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military
- Lastly, the rights of migrants and foreigners in vulnerable situations

1. The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Act (Equality Act)

Recognizing the absence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Korea, multiple States put forward recommendations on creating anti-discrimination law in the previous UPR review. However, the recommendations have not been fulfilled.

In Korea, the issue of anti-discrimination law often faces strong opposition from some religious or conservative groups denying equal rights of sexual minorities (LGBTQI+).

The NHRCK has called for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regulations since 2006, and it proposed a draft of *Equality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20 for prompt legislation.

Currently, four *Equality Bills* are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discussion on the bills by Assemblymen has not been active, and the Government's position over the equality legislation is not clear.

We propos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Korea:

Recommendations

- Develop the Government strategy for enacting the *Equality Act*
- Pass the comprehensive *Equality Act* in an expeditious manner
- Establish policies and plan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social prejudices against sexual minorities

2.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Military

The violence and ill treatment, sexual assault and harassment, and suicide in the military have been long-standing social concerns in Korea.

The military adopted several protection and prevention measures over the past few years. However, a series of recent sexual assaults against female soldiers and their suicide deaths indicate that the human rights system in the military does not function effectively.

In addition, it is also concerned that suicide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the military, accounting for 72% of all military deaths during the period from 2016 to 2021.

We propos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Korea:

Recommendations

- Establish a transparent, fair and effective human rights investigation and remedial procedure in the military
- Prevent attempts to conceal the incidents of violence, retaliatory actions against reporters, and the victimization of the victims of abuses
- Identify the root causes of suicide in the military and intensify the efforts to prevent suicide

3. The Rights of Migrants and Foreigners in Vulnerable Situations

Restriction on the Freedom to Choose Workplaces of Migrant Workers

The Article 25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restricts the grounds for migrant workers to change workplaces, allowing the change only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December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is legal provision is not in breach of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effective management of labor migration.

However, it is concerned that the Court decision may exacerbate foreign workers' dependency on employers, weaken their bargaining power i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increase their vulnerability to exploitation and human rights abuses.

Immigration Detention

The 'protection' under the *Immigration Act* is an administrative measure to place a foreigner under protection during deportation process. However, this protection system functions as 'detention' in reality.

Furthermore, it does not provide the limit of detention period and the due

process commensurate with that in criminal legal proceedings. Detainees in immigration detention centers are occasionally at risk of abuses such as ill treatment and solitary confinement.

We propos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Korea:

Recommendations

- Reduce or abolish the excessive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s of migrant workers, and support the migrant workers to seek their jobs freely
- Take measures for stronger human rights protection of migrants and foreigners in immigration detention, including laws and policies to limit the period of detention, guarantee the due process for detention, and prevent human rights abuse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국문 번역〉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발 표 문

- UPR INFO 사전세션, 2022. 11. 30.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법률에 기반하여 2001년 11월 설립된 독립적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4차 UPR 심의를 위해, 약 25개의 권고 사항을 제안한 보고서를 2022년 7월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본 UPR INFO 사전세션에서 말씀드릴 다음의 세 가지 인권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첫째, 차별금지법의 제정
- 둘째, 군 인권 보호체계 개선
- 셋째, 인권취약 상황에 처한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권 보호

1.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한국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 UPR 심의에서 다수의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성 소수자의 평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일부 종교·보수 단체의 강한 반대에 종종 부딪혀왔습니다.

위원회는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였고, 2020년에는 '평등법' 시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한 입법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4건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이에 대한 입법부의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평등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 또한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권고 제안

- 평등법 제정을 향한 정부의 전략 및 계획을 마련할 것
- 포괄적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 성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할 것

2. 군 인권 보호체계 개선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성폭력 및 성희롱, 자살 사건 등은 한국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군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 조치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래 잇달아 발생한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들의 자살은 군의 인권보호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2021년 전체 군 사망사건 중 자살이 72%를 차지하는 등 자살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권고 제안

- 군 내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인권 조사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
- 폭력 발생을 은폐하거나, 신고자에게 보복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것
- 군 내 자살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3. 인권취약 상황에 처한 이주민 및 외국인의 인권 보호

이주 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동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심화, 고용관계에서 협상력 약화, 노동 착취 및 인권침해 취약성 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구금 중심의 외국인 보호제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는 강제퇴거 과정에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제도는 사실상 '구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구금(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 및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행위가 외국인보호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고 제안

-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 혹은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구직활동을 지원할 것
-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을 제한하고, 수용(구금) 관련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 등을 포함하여,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6. 주한 외교공관 대상 UPR 브리핑 세션 개최 자료(2023. 1. 1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보도자료 | 배포일자: 2023. 1. 13. | 보도일자: 2023. 1. 13. | 홍보협력과장 육성철(02-2125-9870)
담당부서: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 과장: 문은현(02-2125-9880) | 담당: 최수희(02-2125-9887)

인권위, 주한 외국공관 대상으로 UPR 인권보고서 브리핑회의 개최

-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앞두고 한국 인권 개선과제 제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한민국 인권상황에 대한 제4차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앞두고, 1월 12일 오후 3시 인권교육센터(인권위 10층)에서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UPR 독립보고서에 관한 브리핑회의〉(이하 '브리핑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핵심 제도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2012·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으며, 제4차 심의는 2023년 1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UPR 심의는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이해관계자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권위는 국내 주요 인권 현안 및 개선 과제에 관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이해관계자 보고서)를 2022년 7월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번 브리핑회의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인권위 UPR 독립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개최되었으며, 43개국 대사관에서 총 46명의 외교관이 참석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이번 브리핑회의에서, 독립보고서에 담긴 우리나라 인권 과제가 UPR 심의 과정에서 실제 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ress Release, 13 January 2023

NHRCK Holds Briefing Session on Its UPR Submission for Diplomatic Missions in Korea

NHRCK report identifies key human rights issues of Korea for upcoming UPR Working Group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On 12 January 2023,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held a briefing session on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report for diplomatic missions in Seoul, ahead of the country's 4th cycle of review at the 42nd session of UPR Working Group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he UPR is a key mechanism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at regularly reviews the human rights records of UN Member States and presents recommendations on issues that require improvement. The Republic of Korea underwent the UPR in 2008, 2012 and 2017, and the next review is scheduled for 26 January 2023.

The UPR is conducted based on the national report prepared by the State, stakeholders' reports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ther information. The NHRCK submitted its independent report for UPR to the United Nations in July 2022. The report outlines key human rights challenges in South Korea and proposes recommendations to be considered by the UN Member States.

The briefing session was organized to give an overview of the NHRCK's UPR report to foreign missions in Korea. It was attended by 46 diplomats from 43 embassies in Seoul.

At the briefing session, the NHRCK asked for cooperation and support from the countries present to ensure that the proposals contained in the NHRCK's UPR report can lead to the actual UPR recommendations during the upcoming UPR Working Group sess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Established in November 2001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 Independent national body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in South Korea
- Accredited A status by the GANHRI SCA
- Submitted its UPR report to UN in July 2022 proposing 25 recommendations

Anti-discrimination Act (Equality Act)

Recommendation

- Initiate immediately the legislative process to enact the Equality Act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other grounds

Civil and Political Rights

Recommendations

- Consider abolishing the capital punishment and introducing alternatives to death penalty, and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on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 Take measures to reduce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 Revise the legislations that excessively restrict the political freedom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Privacy and Information Rights

Recommendations

- Introduce control systems and procedures that prevent investigative agencies from arbitrarily using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83(3)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Take measures to prevent big data-based AI systems from causing human rights violation and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commendations

- Take necessary measures to accede to and ratify all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o withdraw reservations from the treaties

- Take necessary measures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from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legislate law to implement the decision of treaty bodies on individual complaints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commendations

- Strengthen legislative measures and financial support to enhance the ac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facilities
- Minimize the involuntary hospitalization of mentally ill persons, and establish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and treatment system
-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Road Map for Community-based De-facility Support Measures, and incorporate strategies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into this road map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Military

Recommendations

- Establish plans to improve the period, area and duty of alternative service to protect the rights of alternative service personnel
- Establish a transparent, fair and effective human rights investigation and remedial procedure in the military
- Prevent attempts to conceal the incidents of violence, retaliatory actions against reporters, and the victimization of the victims of abuses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Military

Recommendations

- Identify the root causes of suicide in the military and intensify the effort to prevent suicide
- Repeal the Article 92-6 of Military Criminal Act which violates rights to equality,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privacy of gay soldiers in the military

Labor Rights

Recommendations

-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safeguard the lives and safety of workers and citizens effectively,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hrough stricter law enforcement when industrial accidents occur
- Reduce the gaps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those in different types of employment, and guarantee the labor rights of people in new forms of work including platform workers

Rights of Women

Recommendations

-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vide the access to safe abortion, including insurance coverage of abortion and medication abortion,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April 2019
- Take active measures to ensure the rights to justice and remedies for the victims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to eradicate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o tackle gender conflict

Rights of Migrants

Recommendations

- Reduce excessive restrictions for migrant workers to change workplaces
-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detainees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 Increase the fairnes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and establish the appeal and remedial procedures in an independent body for those rejected refugee status

Rights of Children

Recommendations

- **Take additional measures to prevent victimization of and further damage to under-aged sexual crime victims**

Business and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 **Legislate laws to obligate the exercise of corporate 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introduce a system for disclosure of human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 Establish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on climate risk and make action plans to protect the rights of people vulnerable to climate risk, including construction workers and farmers

Local Governments and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 Develop measures that allow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solid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 (ex: legal basis, mandatory rules, etc.)


Thank you!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7. 제4차 UPR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3. 2. 2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2. 27.(월)	
배포일시	2023. 2. 27.(월)	
담당부서	국제인권과	과장: 문은현(02-2125-9880) | 담당자: 최수희(02-2125-9887)
언론홍보	홍보협력과	과장: 육성철(02-2125-9870) | 담당자: 이수지(02-2125-9872)

대한민국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의 권고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95개 유엔 회원국, 한국에 대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도 개선 등 권고 -
-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

❑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2023년 1월 26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실시하고, 2023년 2월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였습니다.

❑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로, 유엔 회원국 간 인권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2012년, 2017년 UPR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 제4차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대한민국에 권고하였습니다.

❑ 주요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다수의 국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여성 폭력·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공공·민간영역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여성 인권 증진,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탈시설 과정 개선 등 장애인 차별 철폐, △아동학대 예방, 소년사법제도 개선 등 아동 인권 보호 강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난민심사제도 개선, 인종차별 예방 등 이주민·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를 권고하였습니다.

❑ 이번 심의에서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과 같은 권고사항도 새롭게 제시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절차에 따라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2023년 6월 예정)가 열리기 전까지 유엔에 통보해야 하며, 수용한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UPR 심의에 앞서, 2022년 7월 14일 국내 주요 인권현안과 개선과제에 관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독립보고서에 담긴 25개 인권과제가 여타 유엔 회원국을 통해 UPR 권고로 도출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2일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브리핑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위가 제안한 대다수의 권고 항목이 실제 UPR 권고로 이어졌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하여, 대한민국에 주어진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2023. 2.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8. 법무부 주최 <UPR 후속조치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발제문(2023. 4. 1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제4차 UPR 심의 후속조치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 발제문

- 수용 여부 미정 권고에 관하여 -

2023. 4.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UPR 심의 후속조치 간담회 발제문
- 수용 여부 미정 권고에 관하여 -

목 차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인권제도 강화 ····· 232
   가.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비준 ····· 232
   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233

2. 평등 및 비차별 원칙 ····· 233
   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233
   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처벌 ····· 234
   다.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 235
   라.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및 권리 보호 ····· 235

3. 시민적·정치적 권리 ····· 236
   가.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 236
   나. 사형제 폐지 ····· 237
   다. 양심적 병역거부 보호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 ····· 238
   라.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 239
   마. 고문 방지 ····· 239
   바. 인신매매 근절 ····· 240
   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 241

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243
   가. 노동권 보호 ····· 243

5. 여성 인권 ····· 243
가. 성별임금격차 해소 ····· 243
나. 여성 대표성 강화 ····· 244
다. 임신 중단 관련 여성의 건강권 보장 ····· 245
라. 여성·여아 대상 폭력 근절 ····· 245

6. 장애인 인권 ····· 246
가. 선거 및 노동 영역에서 장애인 참여 보장 ····· 246
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 247

7. 노인 인권 ····· 248
가. 노인 학대 예방 ····· 248
나. 노인 빈곤 해소 ····· 249

8. 아동 인권 ····· 250
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 250
나. 아동 대상 폭력 및 학대 예방 ····· 250
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 251

9. 이주민 인권 ····· 252
가. 이주 아동 인권 보호 ····· 252

10. 군 인권 ····· 253
가. 군 인권 보호 체계 개선 ····· 253

11. 새로운 인권 현안 대응 ····· 254
가. 기후 변화와 인권 ····· 254

제4차 UPR 심의 후속조치
- 수용 여부 미정 권고에 관한 의견 -

1.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인권제도 강화

가.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비준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국가예방기구 설립 등),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개인통보),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개인통보) 등의 가입 및 비준
- 국제인권조약 유보 조항의 철회
-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한 이행·보고·후속조치 관련 국내 상설 매커니즘 신설

❑ 현황 및 의견

- 정부는 미비준 국제인권조약과 관련하여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비준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비준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필수적 과정으로서, 정부는 미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신속하게 비준하고 유보 조항을 철회하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또한 유엔이 권장하고 있는 권고 이행 후속조치 메커니즘과 타국의 관련 사례들을 연구하여 체계적인 후속조치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수립(도입)할 필요가 있음.

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내 인권현안 반영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현황 및 의견

○ 제3차 인권 NAP(2018~2022)가 2022년 종료되었으나 제4차 NAP가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은 실정

- 2022. 11. 9. 예정이던 제4차 NAP 수립 공청회가 잠정 연기된 후, 현재까지 진척되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8.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 100대 핵심과제〉를 대통령에게 권고한 바 있음.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4차 NAP를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균형적인 인권 정책의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회의 참여 경로를 확대하고, 회의 결과를 외부에 공지하는 등 투명성 강화가 필요함.

○ 그동안 NAP를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법무부와 인권위는 NAP 수립 및 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적·체계적인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 12월, 공동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법안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상호 협력이 필요함.

2. 평등 및 비차별 원칙

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
- 인종 및 국적으로 사유로 하는 차별 금지 포함

- 성,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성 특성을 사유로 하는 차별 금지
-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 금지
- 종교 및 신념을 사유로 하는 차별 금지 포함

❑ 현황 및 의견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위원회 등 다수의 인권조약 기구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사회권위원회 제4차 최종 견해(2017. 10. 9.)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성을 재차 언급하면서 차별이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정부가 국민과 입법자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제21대 국회에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에 대한 입법부의 논의는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음. 한편, 정부는 제4차 UPR 국가보고서에서 “국회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나 의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고, 2020년 「평등법」시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또한 2020년 4월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응답자 88.5%가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는 등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지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입장을 제시하고, 신속한 입법 절차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정확한 시행 효과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

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 처벌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인종차별 동기를 형사범죄의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하도록 형법 개정 검토

○ 인종에 기반한 혐오 선동 및 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법률 제정

❑ 현황 및 의견

○ 대한민국은 광범위한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형법에 의해 처벌이 가

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종적 동기에 의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개별 법률도 없는 실정임.

-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제15차·제16차 최종견해)는, 대한민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위반의 경중에 비례해 적절한 처벌을 규정함과 더불어 인종차별을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혐오표현의 개념화 및 제재(규범) 방식을 검토하고, 혐오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필요

다.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 현황 및 의견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가운데, 2022년 4월 대법원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행위 등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성행위 등이 근무시간 외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음.
-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8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의6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며,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 정부는 성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검토하고, 군 복무 중 성전환한 장병에 대한 보호 규정 및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및 권리 보호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 수립

-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을 전제조건 없이 허용/성별 정정 요건 완화
- 동성혼의 법적 인정, 동성부부의 입양 합법화
- 전환치료 금지

❑ **현황 및 의견**

- 제3차 UPR 권고 중 다수는 성 소수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입법 조치, 국가 차원의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인식 개선 활동, 성 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금지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4차 UPR 국가보고서에는 해당 권고의 이행 여부가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성 소수자 차별 근절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 등을 알기 어려움.
- 우리나라 성 소수자는 심각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차별에 직면해 있음. 정부는 이를 인식하여 성 소수자 인권 보호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NAP 수립을 위한 권고(2022. 8.)에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음.
  - △군형법 92조의6 폐지, △성별 정정 요건 완화, △성 소수자에 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성 소수자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 △성 소수자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및 자살 예방,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가족 형태의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성 소수자의 가족 형성 기본권 보장 방안 검토 등

3. 시민적·정치적 권리

가.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찬양·고무죄)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임의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 검토
-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검토

❑ **현황 및 의견**

- ○ 대한민국 정부는 제3차, 제4차 UPR 국가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은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최소한으로 적용되고 있어 동 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 자유권위원회는 제4차 최종견해(2015년)에서「국가보안법」제7조(찬양·고무죄)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되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동 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였음.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6년 발표한 대한민국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오남용 가능성 및 동법 제7조로 인한 정치적 다원성 훼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우려하였음.
- ○ 국가인권위원회도 2004년 「국가보안법」이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국가보안’ 관련 사안은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규율이 가능하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였음.
- ○ 정부는 현행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관한 논의의 시작 및 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이 법 적용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실행 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나. 사형제 폐지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 사형제의 법률상 폐지 및 대체형벌의 도입
- ○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및 비준

❑ **현황 및 의견**

- ○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후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임. 그러나 정부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하여,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유엔 총회 결의를 포함한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의견 표명, 2018년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2021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헌법소원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해왔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가 잔혹하고 비인도적 형벌로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점, 사형판결에 대한 오판 가능성 및 오판의 경우 그 피해 회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사형의 범죄억지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1997년 12월 이후 현재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사형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같은 맥락에서 자유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인권조약심의기구도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였음.
- 정부는 2020년 11월 제75차 UN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와 2021년 10월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 사형제 결의 채택 시 처음으로 찬성 표결하였으나, 2021년 1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헌법소원에 대한 합헌의견을 제출하는 등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사형제의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 검토에 관한 구체적 추진 일정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비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양심적 병역거부 보호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비처벌적이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 마련,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복무 영역 및 복무 기간 개선
-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로 수감된 사람들의 석방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기록 삭제

❑ 현황 및 의견

- 정부는 2019년 12월 「병역법」을 개정하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의 2배에 달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하도록 복무분야를 한정하고 있어 징벌적 성격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의 영역, 형태,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을 민사법률로 대체

❑ 현황 및 의견

○ 자유권위원회는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2015년)를 통해, 사실인 발언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 점에 우려하면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형사법은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제한할 것을 권고함.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8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2018년)에서, 성폭력 범죄를 주변에 알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 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활용되는 현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비범죄화되었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민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마. 고문 방지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고문방지 국가예방매케니즘(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 설립 검토

○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행 근절

❑ **현황 및 의견**

- ◦ 「헌법」 제12조 제2항(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이 고문을 금지하고,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에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고문을 명시하고 있으나, 「형법」 등 관련 법률에 '고문'의 구체적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 '고문'의 정의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고문에 포함시키는 고문방지협약과 명확히 일치하는가는 불명확함.
-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인권규범에 맞게 고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
- ◦ 한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구금시설 방문조사, 국가예방기구 설치 등 고문 방지 목적에서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기제의 확립을 주요 규정으로 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가기밀보호법 등 국내법과의 상충을 이유로 선택의정서의 가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제3,4,5차 국가보고서 심의(2017)에 대한 의견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동 선택의정서에 따른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바. 인신매매 근절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 인신매매 예방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 인신매매방지법의 효과적 이행과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 ◦ 이주자 및 성매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 및 강제 노동 목적의 인신매매 근절
- ◦ 인신매매 범죄 불처벌 근절

❑ **현황 및 의견**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2021년 4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시행됨.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정의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 수립 및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인신매매방지법은 11개 법의 강제 근로나 인신매매 범죄를 포괄적으로 엮었을 뿐, 인신매매 범죄 행위를 인신매매방지법이 아닌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각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 근로나 인신매매를 식별·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 특히 이주노동자 등 취약집단 내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 및 보호,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기소,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임.
-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마련하여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7년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음.
- ◦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을 제고하여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수사과정에서 인신매매 식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구제 조치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방식 및 보호조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경찰관서에 전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 보안감시시스템 및 인공지능시스템이 사생활 권리 및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

❑ **현황 및 의견**

-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발달과 확산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발생,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인식·합성 기술을 이용한 감시, 인공지능 판단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권리구제 제한, 인공지능의 결정에 의한 편향과 차별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혁신적인 정보처리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사회는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개발이 미진한 실정임.

○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에게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인권 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것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하였음.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NAP 권고(2022. 8.)에서 정부에 다음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있어 인권보호 기준 마련
  - ·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보장, 차별 금지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 할 것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실시
  - ·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방법 개발
  - ·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 추진
- 인공지능으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의사결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와 절차 마련
  -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인공지능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의무 수행을 위한 인공지능 국가 관리·감독 체계(거버넌스) 구축

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가. 노동권 보호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
- ○ 노동 관련 법령이 모든 유형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개정

❑ 현황 및 의견

- ○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은 노무제공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등은 고용과 소득 불안정,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 또한 간접고용의 문제는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제약, 노동조건 악화 등 다양한 노동문제를 양산하였으며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등의 노동인권 시각지대 개선을 위해 노동관계법 적용대상의 확대 개정 또는 보호입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간접고용근로자의 기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는 원청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유도하고, 원·하청 통합관리 제도 적용 범위를 전산업·전업종으로 확대하여 외주화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5. 여성 인권

가. 성별임금격차 해소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 성별임금격차 해소

❑ **현황 및 의견**

- 유엔 자유권위원회(2015), 사회권위원회(2017),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 등은 한국의 높은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음.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성평등임금공시제도를 법제화하고, △모집 및 채용에 있어 성차별 예방을 위한 지침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며, △여성 관리자 확대를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별임금격차의 유발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이 개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성별임금격차의 요인이 다양하고 구조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비정규직 고용 상황, 최저임금, 성별 직종분리, 유리천장 등 성별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의 법률과 제도에 관한 통합적 접근과 분석이 우선되어야 함.

나. 여성 대표성 강화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 보장 및 확대
- 정치 및 공공 부문에서 성평등 강화 및 여성 대표성 증진
-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비례적 대표성 확대

❑ **현황 및 의견**

- 우리나라는 다년간 추진되어 온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과 여성인력의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분야의 여성 대표성이 상당히 낮음.
  -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불평등지수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6위
  - 2016년 노동인구 대비 여성 고용률(56.2%), 국회와 광역지방의회에서 여성비율이 각각 17%, 14.3%로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
- 이후 공공기관 및 상장법인의 여성 대표성을 공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성 대표성은 낮은 수준이며, 정치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이행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마련,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상장법인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다. 임신 중단 관련 여성의 건강권 보장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자발적 임신 중절에 관한 접근성 강화

❑ 현황 및 의견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낙태에 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어졌으나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하는 후속 입법 및 의료체계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정부는 자발적 임신 중단과 관련하여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임신 중단 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 약물적 임신 중지를 안전한 의료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여성·여아 대상 폭력 근절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여성 및 여아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폭력 근절

-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수단 마련
- 가해자 처벌 강화
- 사이버 폭력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국내외 민간기업들에 의한 조치 마련

❑ 현황 및 의견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 촬영물의 반포·소지·구입 등을 처벌하고 있고, 최근 성적 딥페이크 영상의 편집·합성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그러나 불법촬영물 등의 단순 시청·저장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의 경각심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점, 실제 재판과정에서 종종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상당수의 불법촬영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단속에 현실적 한계가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최종견해에서, '온라인 성폭력을 예방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배포자들이 범죄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과 같이 여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명확히 범죄화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제4차 NAP 권고(2022. 8.)에서 개선과제로서 아래의 사항을 제시하였음.
  - 불법촬영물 등 사이버 성폭력 미디어에 대해 단순 시청·저장 등의 행위도 가해에 해당한다는 가해자 인식기준 확산 및 교육·홍보 강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처벌 및 규제 적용
  -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차단 및 게재자 추적에 대한 국외 수사기관,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와의 공조체계 구축

6. 장애인 인권

가. 선거 및 노동 영역에서 장애인 참여 보장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선거절차와 공공 정치영역에서의 장애인 참여 개선
- 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공정한 고용기회 보장

❑ **현황 및 의견**

○ 장애인의 경우, 투표소 시설 접근성, 선거관련 정보(물) 및 방송에 대한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음.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률 확대, 적절한 급여의 제공, 차별 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청각, 시각,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선거공보물 제공 및 투표 보조용구 도입 등을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명시
- 「공직선거관리규칙」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에 명시된 예외 조항 삭제
-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우선하여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공적 조력인 도입 방안 검토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등에 대한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거소투표 안내를 철저히 하여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
- 정신장애인의 자격,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28개 법률에 대하여 해당 결격 조항 폐지 또는 완화
- 중증장애인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충급여제(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전) 도입 등 제도 개선
-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여성 고용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직종 개발 강화 등 추가 개선 방안 마련

나.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정신 장애인의 강제입원 중단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제도 마련

❑ **현황 및 의견**

○ 2016년 5월 (구)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요건 및 절차가 강화되었으나,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심의 치료 관행, 높은 비자의·장기입원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자발적 입원을 원칙으로 하는 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질환자가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치료·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치계의 비전과 목표, 실행계획, 탈원화 비율 등에 관한 연차별 로드맵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체계 마련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 예산을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보건 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장애인 시설 이용 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정신재활시설의 수요를 추계하고 시군구별 최소 1곳 이상 필요한 유형의 시설을 설치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재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집중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노인 인권

가. 노인 학대 예방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및 전략 수립

❑ 현황 및 의견

○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이행해가는 가운데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학대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노인 보호를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 등 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회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학대피해노인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보완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또한, 인권위는 2023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학대피해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를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음. 정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나. 노인 빈곤 해소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 노인의 빈곤 방지
-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일 것
- ○ 노인 대상 주거 정책 개선

❑ 현황 및 의견

-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4.0%로 노동연령인구(18~65세) 12.6% 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임.
- ○ 정부는 노인의 빈곤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래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노후의 삶을 영위하기에 적절한지 여부와 국가 지급보장을 검토하고, 소득대체율 인상 및 사각지대를 고려한 실태 파악을 통해 실효적인 정책 대안 마련
  - 현행 기초연금 월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의 55%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기초연금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액 상향
  - 일할 수 밖에 없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원, 간병인 등 노인 집중 취업 분야에 대하여 고령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방안 마련
  - 기초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8. 아동 인권

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아동의 공정한 재판 권리 보장

❑ 현황 및 의견

○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0조 제6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2018헌바524). 이 결정 이전에는 성폭력 재판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지 않아도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제출하고 조사 동석자가 사실확인을 하면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음.

○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과 관련하여,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음.

나. 아동 대상 폭력 및 학대 예방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온라인 폭력 포함) 및 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과 이행 계획 수립

❑ 현황 및 의견

○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임.

○ 정부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개선하여 취약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필요가 있음. 개선 방향으로 △「아동복지법」중심의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업무체계와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형사사법기관의 업무체계 및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 구축,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학대피해 아동 쉼터 확충 계획 이행,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보호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운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사이버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인지, 조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분화된 지침 마련 및 보급, △사이버폭력의 특성, 유형, 대처방법에 관해 아동,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확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성매매 피해 아동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증액 및 권한 부여, 심리상담 기능 지원 등),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차단 조치의 신속성, 효율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형사 책임 연령 하향 계획 재고

❑ 현황 및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는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을

비롯한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인권위는 오늘날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있다고 보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9. 이주민 인권

가. 이주 아동 인권 보호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 이주 아동의 의무교육 권리 보장을 위해 이주 아동 등록제도 개선
- 이주자와 가족의 결합을 위한 국내 정책 강화

❑ 현황 및 의견

- 2021년 2월 정부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2년 6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의원발의되었음. 동 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은 아동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부모 등이 그 출생등록 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아동의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정부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지원해야 함.
-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혹은 한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들은 한국정부로부터 언제든지 강제퇴거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 정부는 학령기 이주아동의 교육 보장과 체류자격 부여에 관한 조치들(국내 장기체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등)을 시행한

바 있으나, 그 대상이 일부이고 한시적이며 지침에 불과하여 미등록 아동의 체류를 안정화하는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5월,'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10. 군 인권

가. 군 인권 보호 체계 개선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제도 검토
- ○ 군 내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지속·강화

❑ 현황 및 의견

- ○ 군은「군인복무기본법」제정, 인권교육 확대, 국방 헬프콜 및 군인권 지킴이 시스템 운영 등 제도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2021년 성폭력 피해 군인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강하게 제기되었음.「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와는 별개로 군 내 인권 보호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NAP 권고(2022. 8.)에서 다음의 과제를 권고하였음.
  - 군 내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체계 이용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외부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장병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향상계획을 마련하며,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담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담관의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지침에 반영하고, △장병, 간부들을 대상으로 군인권보호관 등 인권침해 구제 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

- 군 내 성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 내 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작동 여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제보자 색출 및 불이익 유발, 사건 은폐, 피해자 및 목격자 회유 등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부대장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자문 절차를 수립하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을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별도로 규정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 조사 및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
- 군 사망사건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심각한 수준임을 유념하여, △군 내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자살 예방 정책에 반영하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증원하여 각 군 대대급 부대에 1명 이상 배치하고, △정신의료체계 내 자살위험 및 부적응 병사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군 내 자살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11. 새로운 인권 현안 대응

가. 기후 변화와 인권

❑ UPR 권고의 주요 내용

- 기후 위기로부터 취약계층 인권 보호를 위한 통합적 대응 시스템 및 이행계획 수립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인권 기준과 파리협정에 부합하도록 설정
- 기후변화 관련 협상에 비정부기구 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모든 화석 연료 사용 근절,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조치 마련

❑ 현황 및 의견

- 기후 변화는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노동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의 문제'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상황임.

○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의 당사국으로서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기후 변화를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후 변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현황 분석이 미흡한 실정임.

○ 정부는 기후 위기가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원칙 및 기후 정의에 기반을 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기후 변화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행동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대통령)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음.

- 기후 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 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 우리나라 기후 변화의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후 위기 취약 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 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적응역량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2년)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도 설정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기후 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업 공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 측정 및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 등을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든 사람이 기후 변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9.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발언문(2023. 7. 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발 언 문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 의제 6. UPR 최종결과 (2023 7.)

의장님, 각국 대사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여 발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UPR)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 향상을 위해 UPR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엔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신기술,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과제 등을 포함하여, 한국에게 폭넓은 권고를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총 263개의 권고 중 164개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99개의 권고를 참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수의 유엔 회원국 권고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고착시킬 수 있고, 이들의 평등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또한 차별금지법 외에도 한국 정부가 여러 중요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개선,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과제인 만큼, 정부가 지체 없이 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개별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여 UPR 권고를 실현하고, 모니터링 및 인권 옹호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TATEMENT

The 53rd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genda Item 6. Consideration of UPR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Deliver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July 2023

Mr. President, excellencies.

I am honored to deliver this statement on behalf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UPR has been a driver for significant changes in many countries. We, as Korea'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have actively engaged in the UPR process to advance human rights.

We thank UN Member States for their wide-ranging recommendations to Korea which include newly emerging challenges in the areas of climate change, new technology, and business and human rights.

We welcome that Korea supported 164 recommendations out of 263 it received. However, we find it regrettable that 99 recommendations were noted by Korea.

In particular, we are gravely concerned that Korea has not supported recommendations by numerous UN Member States calling for the legisla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his can affect the right to equality of social minorities, solidifying discrimination and prejudices against them.

We are also very concern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supported

several important recommendations. These include (a)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b) the improvement of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nd (c) the repeal of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prohibiting consensual same-sex sexual acts.

These issues are long-standing challenges in the Korean society, and thus, we urge the Government to pay due consideration on them without delay. We also encourage the Government to establish concrete plans to implement individual recommendations and to take effective follow-up measur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Government to realize UPR recommendations, and fulfill our monitoring and advocacy role. Thank you.

10. 제4차 UPR 대한민국 심의 최종보고서 및 정부답변서(영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United Nations A/HRC/53/11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23 March 2023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uncil
Fifty-third session
19 June–14 July 2023
Agenda item 6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 The annex is being circulated without formal editing, in the language of submission only.

Introduction

1.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held its forty-second session from 23 January to 3 February 2023.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ld at the 8th meeting, on 26 January 2023.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aded by the Vice-Minister of Justice, Noh Kong Lee. At its 15th meeting, held on 1 February 2023, the Working Group adopted the report on the Republic of Korea.

2. On 11 January 2023, the Human Rights Council selected the following group of rapporteurs (troika) to facilitate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Côte d'Ivoire, France and United Arab Emirates.

3.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and paragraph 5 of the annex to Council resolution 16/21, the following documents were issued for the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a) A national report submitted/written present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a);[1]

(b) A compilation prepared by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b);[2]

(c) A summary prepared by OHCH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5 (c).[3]

4. A list of questions prepared in advance by Belgium, Canada, Germany, Liechtenstein, Panama, Portugal, on behalf of Group of Friends on national mechanisms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Slovenia, Spai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ruguay was transmitt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troika. The questions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I. Summary of the proceedings of the review process

A. Presentation by the State under review

5. The delegation stated that, in May 2022, a new Government had assumed office, and it sought to participate in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to fulfil its role as a "global pivotal State".

6. In preparing for the fourth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e Government had consulted ministries and agenci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ivil society and had attended the pre-session briefing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held in Geneva.

7. Responding to third cycle recommendations, the Government had acceded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It had ratified three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namely,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and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and had withdrawn its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Government was considering accession to other treaties and would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treaties it had already signed.

[1] A/HRC/WG.6/42/KOR/1.
[2] A/HRC/WG.6/42/KOR/2.
[3] A/HRC/WG.6/42/KOR/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8. The Republic of Korea had cooperated in country visits by several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s and had served as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the periods 2016–2018 and 2020–2022.

9. In 2018, the Government had adopted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a new chapter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preparing the fourth plan, it planned to include policies regarding the digital transition.

10. Government measures ensured freedom of assembly, including through use of the "Korean model of police dialogue system" on police facilitation of peaceful assemblies, the provision of human rights training for police officers and the conduct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for related police activities.

11. The Government was enforcing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encompassing a response plan for combating human trafficking.

12.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for conscientious objectors had been established. Pursuant to new legislation, conscientious objectors performed their duti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13. To address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efforts had continued to secure additional space through the renov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14. Regarding social security, the Government had expanded the eligibility of recipients, as well as the child allowance, the basic pension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ility pension. The medical allowance programme and the personal contribution cap system had alleviated medical expenses for low-income groups.

15. In the context of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the Government had made effort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vulnerable groups. Addressing the female employment crisis, it had created approximately 780,000 new jobs and had strengthened support and childcare services. In 2020, online learning had been implemented.

16. With respect to labour rights, provisions in the Labor Standards Act protected workers from harassment and obliged employers to investigate cases. The scope of employm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had also been expanded.

17. The Republic of Korea enjoyed a 99 per cent high school enrolment rate. The Government extended free education to high school and provided education allowances to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18. The Government had established the gender equality basic plan in 2018 and had introduced the Framework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a corresponding basic plan. The Digital Sex Crime Victim Support Centre had been created, and laws had been amended to increase penalties and offences. New laws had established the legal grounds for the punishment and prevention of the crime of stalking and support for victims. To addres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labour inspectors supervised the gender equality support system.

19. Under the amended Child Welfare Act,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basic children policy plan had been established.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combating child abuse had been installed in local governments, and the number of protection agencies and shelters had been increased. Th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in the Civil Act had been removed. The Government had amended laws to exclude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sexual violence crimes against children. Through the youth policy implementation plan, the Government sought to prevent the marginalization of youth.

20. To eradicate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the Government had introduced provisions in rules to separate perpetrators and victims, had established a dedicated organization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and had increased the number of counsellors specialized in complaints of sexual offences.

21. An officer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had been established with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2. Regar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 to Health and Access to Medical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upported health management projects, while measures to strengthen lifetime care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ovided for 24-hour care. The Government had increased the amount of the disability pension and had ensured individualized welfare services.

23. For older persons, there was strengthened care for dementia patients, shelters for elderly victims of abuse, personalized care services and expanded employment opportunities.

24.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ers, the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had been advanced, and 20 May had been designated as Together Day. The Government supervised businesses to prevent violations of migrant workers' rights. Under an improved employment permit system, foreign workers were allowed unlimited workplace changes if they were not responsible for their employment termination. The Foreigner Detention Regulation designated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s. The Government had adde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officers and had issued guidelines on appeal procedures. The Government had guaranteed the right of all children to receive free compulsory education, regardless of residence status.

25. The Government had incorporated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into development cooperation.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ad launched the human rights-based development cooperation implementation plan, in 2020, to promote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and had integrated human rights into project management.

B. Interactive dialogue and responses by the State under review

26.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 95 delegations made statements.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dialogue are to be found in section II of the present report.

27.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expressed concern about inequalitie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and the rise of hate speech against migrants and refugees.

28. Iraq commended th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o promote human rights, including to guarantee respect for the right to housing,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and combat human trafficking.

29. Ireland welcomed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and the expanded definitions of domestic violence crimes, but noted a lack of progress made on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hich was recommended previously.

30. Israel praised progress made on non-regular workers,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but expressed concern about sexual violence in the armed forces.

31. Italy lauded the efforts mad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nhance female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notably the gender equality basic plan.

32. Japan expressed appreciation for efforts to increase female representation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o address social inequality, among other things.

33. Jordan commended the efforts made in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reflecting human rights achievements, and the laws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and domestic violence.

34. Kazakhstan welcomed advances in social policy, support for persons in vulnerable situations,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35. Kuwait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efforts made in preparing the national report and in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36.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and the progress made in protecting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37. Lebanon haile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2018–2022, the preparations for the new plan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38. Libya praised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positive cooperation with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process and the efforts mad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39. Lithuania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its continued efforts to place human rights at the forefront of its national agenda.

40. Luxembourg welcomed the efforts made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and the passage of the law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41. Malawi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progress made i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since the previous review and noted the passage of legislation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42. Malaysia highlighted the strengthened cohesiveness of policie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encouraged continued measures towards social equality, affordable education and basic medical services.

43. Maldives commended the consultative approach to the national repor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entre for the Rights of the Child for policies on children.

44. The Marshall Islands welcomed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and the move towards the form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45. Mauritius praised the financial support provided to the Voluntary Technical Assistance Trust Fund to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subsidy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o facilitate access to schooling.

46. Mexico lauded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and ratification of the ILO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and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47. Mongolia haile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strengthened labour rights, improved work environments and the increase in female representation at all levels.

48. Montenegro welcomed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called for commuting all death sentences to life imprisonment.

49. Namibia applauded the country'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its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50. Nepal welcomed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the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rights and the poverty reduction efforts for older persons.

51.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valued efforts to uphold human rights instruments, but expressed concern about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cluding online and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intersex and other persons.

52. New Zealand commended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as an important step in recognizing the rights of women, and the legislative work to protect those with disabilities.

53. Norway welcomed the improved enforcement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54. Pakistan commended the country's cooperation with human rights mechanisms and the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adopted on human trafficking, human rights and domestic violence.

55. Panama made recommendations.

56. Paraguay welcomed the bill on the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 children and the preventative approach towards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included in migration policies.

57. Peru no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period 2018–2022.

58. The Philippines lauded the third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commitment to ILO conventions and the efforts to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migrants.

59. Poland 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and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and encouraged efforts towards the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60. Portugal praised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article 25 (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61. Qatar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adopting several policy and legisla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it had accepted during the previous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62. The Russian Federation expressed regret that recommendations made during the third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had not been sufficiently implemented.

63. Senegal hailed the sustained efforts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received during the third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and the national action plans to address various human rights challenges.

64. Serbia welcomed efforts to improve social equality by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and the frameworks to address various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65. Singapore welcomed the efforts to improve accessibility to health care and public transpor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through expanded services.

66. Slovakia encouraged further accessions to treaties, was pleased that capital punishment had not been implemented recently and regretted that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conditions were not proportionate.

67. Slovenia expressed appreciat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strategies to realize the rights of older persons.

68. Spain hailed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 approval of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69. Sri Lanka welcomed action taken to comply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nteraction with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s.

70. The Sudan commended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the legislation on the prevention of trafficking and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national inclusive children policy.

71. Switzerland welcomed the de facto moratorium on the death penalty and the sup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related resolutions. It encouraged continued efforts to promote gender equality.

72. The Syrian Arab Republic noted with concern the continu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impact of the spread of information technologies on rising levels of violence against women.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73. Thailand acknowledged the efforts regard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progress made on the labour rights of foreign workers, the improved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legislation to combat human trafficking.

74. Timor-Leste no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a de facto abolitionist State and welcomed the decriminaliz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and the improved employment system.

75. Togo welcomed measures aimed at eliminating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against migrants, refugees and foreigner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76. Türkiye noted appreciatively the efforts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from the previous cycle and towards the adoption of laws on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that would strengthen the legal framework.

77. Turkmenistan no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2018–2022, and assessed positively the efforts to apply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78. Ukraine commended the country's commitment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efforts to fulfil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operate with human rights mechanisms.

79. The United Kingdom welcomed the steps taken to tackle human trafficking, encouraged prioritizing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nd urged it to place a moratorium on executions.

80. The United States applauded the Republic of Korea for promoting human rights globally, but was concerned by the low rates of approval of refugee status.

81. Uruguay welcomed efforts made by the country, including the promulgation of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82. Uzbekistan praised legislation against human trafficking and assessed positively the fact that the application of death sentences had not been carried out since 1998.

83. Vanuatu welcomed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nked it for its presentation.

84.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expressed concern about the suspicion of migrants and refugees, the rise of hate speech and allegations of torture and ill-treatment.

85. Viet Nam applauded the eff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creasing female representation,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and supporting the marriage of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86. Zambia commended the Government's efforts to fulfil its obligations under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o comply with the human rights mechanisms.

87. Algeria lauded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under its strategy for 2021–2025 and the steps taken against discrimination,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88. Argentina commende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89. Australia welcomed the country's commitment in its Indo-Pacific strategy to promote human rights and its support for General Assembly resolution 77/222 on a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90. Azerbaijan noted positively the efforts to comply with human rights mechanism recommendations and highlighted the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ipulating human rights considerations.

91. Bangladesh appreciated the legislation addressing human trafficking a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efforts to address social inequality through expansion of the social safety net and housing.

92. Belarus extended a welcome to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nked it for submitting its report.

93. Belgium congratulate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in 2021, but noted that more progress could be achieved regarding gender in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94. Bhutan lauded the legislative measures against human trafficking and domestic violence, the measures to promote the right to housing and the efforts on the rights of the child.

95. Brazil encouraged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s in schools, investment in capacity-building for teacher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ILO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and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96. Brunei Darussalam valued the support provid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various schemes and the improvements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at work, in particular equal pay for work of equal value.

97. Bulgaria encouraged continuing the good practic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and capacity-building for teachers and highlighted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98. Canada took note of the commit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dvancing human rights internationally as part of its "global pivotal State" foreign policy.

99. Chile commended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basic plan for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00. China noted progress achieved, but was concerned about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and ethnic minorities, sexual harassment against women and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being ineffectively protected.

101. Colombia welcomed the law against human trafficking, the plan address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plan on improved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public sector.

102. Costa Rica thanke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resentation of its national report and made recommendations.

103. Côte d'Ivoire congratulate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measures taken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since the previous review and encouraged continued efforts.

104. Croatia welcomed the Framework Act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decision to decriminalize conscientious objection, but expressed concern about the rights of people performing alternative service.

105. Cyprus hailed the strengthened legislation to comba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106.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systematic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107. Denmark expressed concern tha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faced legal, social and economic barriers and highlighted that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Initiative stood ready to assist.

108. Egypt praised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including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article 25 (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09. El Salvador welcomed the legislation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and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10. Estonia noted appreciatively the implementation of the third national action plan for human rights,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and the progress made towards gender equality.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11. Finland welcomed the progress made by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previous universal periodic review cycle.

112. France welcomed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113. The Gambia commended the amendment to the Child Welfare Act of 2020, including making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abuse in local governments and conducting on-site investigations.

114. Georgia positively evaluated the measures to address the social inequality of vulnerable groups, progressively realize the right to housing and promote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115. Germany asser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was an inspiring example for its region and noted the introduction of an alternative service to military conscription.

116. Ghana lauded the inclu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the adoption of the gender equality basic plan and the human rights measures in the military service.

117. Greece commended the withdrawal of the 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legislation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and punish domestic violence.

118. Iceland welcomed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national report.

119. India noted with appreciation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the legislation and plan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National Centre for the Rights of the Child.

120. Indonesia acknowledged the progress made in human rights promotion and protection, including regarding military service, and women's empowerment through the gender equality basic plan.

121. Kyrgyzstan welcomed the significant steps taken to strengthen legislative and policy mechanism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with a focus on vulnerable groups.

122. In addressing advance questions, the delegation noted that the Government was participating in the ongoing discuss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gradual reduction of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123. The Government had integrated recommendations by United Nations human rights bodies into the national action plan and had evaluated the implementation status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124. The National Security Act was needed for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as applied minimally to protect freedoms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Defecto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re guaranteed the same freedom of expression as the general public and were provided with legal aid.

125. On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proposals for related bills were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 complaint procedure had been established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olicies recognizing same-sex marriage required social consensus.

126. Regarding domestic violence, the police were obliged to take emergency measures, while prosecutors could request restraining orders. Marital rape could be punished under existing law. Countering online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 Government used big data to monitor children at high risk and conducted positive parenting campaigns.

127. Identifying career interruptions as a major driver of the gender pay gap, the Government was expanding childcare leave allowances, the application of reduced working hours for childcare needs and vocational training. It had implemented the plan for enhanced gender representa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planned to integrat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nsure more effective programme implementation.

128. Education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was compulsory for those operating related facilities. Mental health welfare service centres provided community access to mental health services.

129. Those not recognized as refugees following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were granted humanitarian stay permits, if there would be a risk of threats to their life and person upon repatriation.

130. The Government was not considering repealing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131.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and the Broadcasting Act guaranteed freedom of the press. The only exceptions to the right to freedom of assembly were instances posing a direct danger to public safety.

132. Responding to recommendations made, the Government stated that it w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o contribute to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33.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the Government maintained its agreement with Japan of 2015 on comfort women victims and w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restore honour and dignity and to heal the psychological wounds of the victims.

134.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 allowed workers to freely organize or join trade unions. Workplaces were inspected annually to identify forced labour. Regarding human trafficking, the delegation highlighted enhancing awareness and using indicators for early victim identification.

135.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birth of foreign children wa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was revising the Juvenile Act and the Criminal Act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to 13 years of age, while deprioritizing detention.

136. The Government had submitted a proposed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stipulating requirements for abortion, and it was currently before the legislature.

137. In its concluding remarks, the delegation stated that the Government was aware that the fourth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was not a one-off procedure, but part of an ongoing process of continuous progress. The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provided would serve as valuable resources in implementing policies. The Republic of Korea strove to ensure that its human right policies would not only meet global standards, but would become best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I.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138. **The recommendations formulated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listed below have been exam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enjoy the sup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138.1 **Ratify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Denmark);**

138.2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amibia);**

138.3 **Take further steps to complete the procedure of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Ukraine);**

138.4 **Continue to implement measures to protect vulnerable groups and further defend and promote human rights (Japan);**

138.5 **Continue its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y based on a human rights approach (El Salvador);**

138.6 **Implement in full the Government's third strateg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mid-term strategy for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based development cooperation implementation plan (Kyrgyzstan);

138.7 **Conduct mor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for youth, public officials and educators to prevent so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spect cultural diversity (Viet Nam);**

138.8 **Continue efforts to strengthen the fight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Algeria);**

138.9 **Increase efforts to combat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racial hatred (Belarus);**

138.10 **Take effectiv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combat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China);**

138.11 **Combat hate speech against foreigners and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Egypt);**

138.12 **Reduce overcrowd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Zambia);**

138.13 **Work to reduce overcrowding in pris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Libya);**

138.14 **Pursue efforts aimed at fighting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Lebanon);**

138.15 **Continue its efforts to protect employees from abuses at workplaces (Sudan);**

138.16 **Better protect the labour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combat discrimination between national and foreign workers (Viet Nam);**

138.17 **Continue to reinforc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o expand social benefits for older persons (Portugal);**

138.18 **Continue its ongoing efforts to address social inequality and lay a foundation for an inclusive welfare State by continuing to expand social security for vulnerable groups (Turkmenistan);**

138.19 **Enhance measures to strengthen mechanisms guaranteeing bette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vulnerable groups, by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Pakistan);**

138.20 **Continue efforts to address social inequality and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Azerbaijan);**

138.21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on guaranteeing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nd prioritizing housing for persons in a disadvantaged position (Kazakhstan);**

138.22 **Enhance policy measures aiming at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while ensuring that guidance on the housing welfare system is accessible for all (Azerbaijan);**

138.23 **Continue its efforts in promoting the right to housing and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Bhutan);**

138.24 **Intensify its efforts to reduce poverty, especially among older persons, by guaranteeing their access to adequate social security and medical care and by preventing discrimination and abuse (Brazil);**

138.25 **Consider expediting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to decriminalize abortion and ensuring access to safe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for women, including safe and legal abortion (India);**

138.26 **Proceed with measures to improve access to health care, especially for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groups (Georgia);**

138.27 **Reform the Criminal Code and other legislation to ensure universal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Estonia);**

138.28 **Adopt a law that regulates abor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f April 2019 (Spain);**

138.29 **Enact legislation which would provide the legal basis to enshrine the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New Zealand);**

138.30 **Guarantee universal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y swiftly reforming the Criminal Act (Iceland);**

138.31 **Reform the Criminal Act to ensure universal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elgium);**

138.32 **Strengthen the means to ensure free public education for all and eradicate any form of discrimination in enrolment to schools (Bangladesh);**

138.33 **Conduct appropriate training for teachers and non-teaching education personnel on inclusive education (Maldives);**

138.34 **Implement measures to reduce disparities in access to education in rural areas, by strengthening school infrastructure and increasing teaching personnel (Mauritius);**

138.35 **Increase the leve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fulfil its international commitment of 0.7 per cent of gross national income (Bangladesh);**

138.36 **Continue efforts to address gender-based crim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articularly in the employment sector, including by creating conducive working environments for women (Indonesia);**

138.37 **Continue and strengthen its national plan for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El Salvador);**

138.38 **Introduce measures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and combat social controversies and stigma attached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oatia);**

138.39 **Continue efforts to increase wom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reduce the gender pay gap (Chile);**

138.40 **Ensure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s empowerment in increasing access to leadership positions in the public sphere and in private businesses, including in the areas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innovation (Bulgaria);**

138.41 **Continue enhancing programmes on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women (Brunei Darussalam);**

138.42 **Continue implementing policies and measures for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Viet Nam);**

138.43 **Implement more effective policies and strengthen institutions in order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ürkiye);**

138.44 **Maintain, even strengthen, the service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en they are handed over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witzerland);**

138.45 **Promote gender equality by eliminating the driver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such as harmful gender stereotypes, and b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inter-agency mechanism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m to access justic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38.46 **Promote gender equality by eliminating the driver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Malaysia);**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138.47 **Take measures to increase women's representation in public sector decision-making positions and seek to lower the gender pay gap (Lithuania);**

138.48 **Continue efforts to eliminate the pay gap between women and men (Iraq);**

138.49 **Strengthen efforts to address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domestic violence (Kazakhstan);**

138.50 **Continue with procedures and legislation aimed at elimina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der equality, protecting women from gender-based violence and support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Kuwait);**

138.51 **Pursue efforts in combating gender-based violence and ensure that victims are provided with adequate assistance (Lebanon);**

138.52 **Strengthen efforts to combat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Zambia);**

138.53 **Significantly increase efforts to combat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n all its forms in order to m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amendments to criminalize marital rape, as well as to recognize gender identity, in accordance with personal autonomy and human dignity (Argentina);**

138.54 **Adopt further concrete measures to combat gender-based violence and gender inequality, including by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Brazil);**

138.55 **Organize public awareness-raising campaigns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counter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Estonia);**

138.56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mbat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targeting women and girls (Syrian Arab Republic);**

138.57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lans for preven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38.58 **Introduce a taskforce to tackle all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bringing in tougher penalties for perpetrators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38.59 **Ensure that foreign women who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or human trafficking or other forms of violence are guaranteed access to justice (Russian Federation);**

138.60 **Support parents by reducing the burden of childbirth and childcare expenses (Malaysia);**

138.61 **Ensur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preventing inappropriate conditions of detention for minors (Gambia);**

138.62 **Put in place clear grounds for detention in the Juvenile Act and strengthen all measures to prevent the detention of children with adults (Gambia);**

138.63 **Review legislation related to juvenile justice and consider further measures related to the detention of juveniles (Bhutan);**

138.64 **Work on a policy strategy to prevent and monitor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Estonia);**

138.65 **Implement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to incorporate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to national legislation (Cyprus);**

138.66 **Strengthen State policies aimed at eliminating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Belarus);**

138.67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have access to childcare facilities, education, health care, leisure activities and State support (Zambia);**

138.68 **Take effec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second basic children policy plan to ensure the rights of children and expand State responsibility for children (Turkmenistan);**

138.69 **Continue the priority afford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by expanding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children (Sri Lanka);**

138.70 **Strengthen measures to ensure that prison condition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minors,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eru);**

138.71 **Implement the commitment made at the twenty-fifth anniversary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to support parents, by reducing the burden of childbirth and childcare expenses, establishing a secure childcare system with no blind spots, creating conditions for the 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and an inclusive family culture that respects all children and laying the foundations for a stable life for the younger generation (Panama);**

138.72 **Continue its efforts to address sexual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Nepal);**

138.73 **Continue efforts towards improving welfare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38.74 **Continue to impl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safety, well-being and participation of older persons (Singapore);**

138.75 **Devise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the protection of older persons from violence and all forms of abuse, in order to effectively prevent and address elder abuse (Slovenia);**

138.76 **Continue efforts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older persons (Algeria);**

138.77 **Provide more support to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and their families (Islamic Republic of Iran);**

138.78 **Strengthen legislative measures and financial support to enhance the acces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public facilities (Israel);**

138.79 **Increase efforts aimed at promoting equality between members of society and vulnerable groups, such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older persons and children, and guaranteeing their rights (Kuwait);**

138.80 **Continue to enhance the access to, and expand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gapore);**

138.81 **Strengthen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facilities (Türkiye);**

138.82 **Continue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aimed at social support for older person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other vulnerable groups (Belarus);**

138.83 **Prioritize efforts to ensure that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afforded the same right to health as all (Brunei Darussalam);**

138.84 **Continue efforts to improve the process of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ull social inclusion through an accessible environment and equal payment (Bulgaria);**

138.85 **Continue with the initiative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 (India);**

138.86 **Adopt a legislative framework that prohibits discriminatory practices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or gender identity and that prohibits discriminatory practices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Chile);**

138.87 **Continue taking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Pakistan);**

138.88 **Redouble efforts to guarantee greater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foreigners (Paraguay);**

138.89 **Amend the relevant regulation that adversely impacts migrant workers' right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particularly the limit on the number of times and reasons a migrant worker can change workplaces (Philippines);**

138.90 **Further enhance measure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investigate cases of both labour righ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resulting from business activities (Thailand);**

138.91 **Improve effectiveness in the enforcement of labour-related laws,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employers and recruitment agencies, as well as enhance understanding and appropriate treatment for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ailand);**

138.92 **Take additional steps for the rights of migrant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ppeal and remedial procedures for those with rejected refugee status (Türkiye);**

138.93 **Adopt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apply a human rights-based migration policy,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detention of migrant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Uruguay);**

138.94 **Take further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s and vulnerable groups (Uzbekistan);**

138.95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radicate hate speech and adopt a strategy to combat prejudice, misinformation and stigmatization against migrants and refugees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138.96 **Continue effort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promotion of the welfare of migrant workers (Ghana);**

138.97 **Consider further measures for address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migrants and refugees (India).**

139.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will be exam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ill provide responses in due time, but no later than the fifty-third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39.1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France);**

139.2 **Consider the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Slovakia);**

139.3 **Continue to strengthen access to the voluntary 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onsider ratifying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France);**

139.4 **Accede to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Côte d'Ivoire);**

139.5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ongolia) (Montenegro);**

139.6 **Acced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exico);**

139.7 **Consider ratifying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Mauritius);**

139.8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accede to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ustralia);**

139.9 **Consider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in law and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France);**

139.10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and the 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Panama);**

139.11 **Consider the ratification of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ortugal);**

139.12 **Approve a legislative initiative that eliminates the death penalty and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since, despite the moratorium, the courts continue to hand down death sentences (Spain);**

139.13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ratify without reservation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celand);**

139.14 **Consider ratifying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Uruguay);**

139.15 **Accede to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its implementation (Côte d'Ivoire);**

139.16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nd commute all existing death sentences (Mexico);**

139.17 **Ratify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elgium) (Chile) (Estonia) (Finland) (Germany) (Lithuania) (Switzerland)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39.18 **Accede to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s well as accede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Luxembourg);**

139.19 **Move towards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hile);**

139.20 **Carry out national deliberation among relevant institutions and stakeholders on the possibility of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donesia);

139.21 **Accede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strengthen national policies on migrants and family reunification (Egypt);**

139.22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Colombia);**

139.23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lgeria) (Bangladesh) (Philippines) (Togo);**

139.24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Libya) (Senegal);**

139.25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Paraguay);**

139.26 **Sign and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Denmark);**

139.27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ongolia);**

139.28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taly);**

139.29 **Ratify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Finland);**

139.30 **Intensify ongoing processes leading up to the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Ghana);**

139.31 **Consider ratification of major outstan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Malawi);**

139.32 **Adop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ithout delay (Ireland);**

139.33 **Update the relevant labour legislation so that it covers all categories of workers (Poland);**

139.34 **Consider reviewing its legislation to address concerns on conscientious objection and alternative services and further bring it into full compliance with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Timor-Leste);**

139.35 **Consider including all categories of workers in the labour legislation and expand the coverage of the legislation and labour standards to all sectors of the economy (Timor-Leste);**

139.36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other evil laws which are in contraven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well as the provocative so-calle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39.37 **Consider the ratification of the Act on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 Children (Egypt);**

139.38 **Enhance its efforts to establish a fourth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new demands for human rights issu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will en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various stakeholders (Turkmenistan);**

139.39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and action plan to protect the rights of vulnerable persons from climate risks (Bhutan);**

139.40 **Establish a permanent na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Paraguay);**

139.41 **Consider amending the Criminal Code to consider racist motives as an aggravating circumstance when sentencing for criminal offences (Jordan);**

139.42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d the compliance with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that are illegal and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lamic Republic of Iran);**

139.43 **Refrain from and repeal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already taken that are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 that prejudice the social and economic rights of various categories of the population (Belarus);**

139.44 **Develop the government strategy for enacting the equality act and pass the comprehensive equality act, to establish polici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social prejudices against sexual minorities (Kingdom of the Netherlands);**

139.45 **Adopt legislation to prohibi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enshrine the concept of racial discrimination in legislation, as well as introduce criminal sanctions for the incitement to ethnic hatred and acts of a violent nature based on racial grounds (Russian Federation);**

139.46 **Consider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law against discrimination that includes, in addition to sex, religion and social conditi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rac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among other factors (Peru);**

139.47 **Strengthen efforts to comb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by adopting a comprehensive legislative framework (Ukraine);**

139.48 **Review legislation and practice to ensure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that is genuinely civilian, accessible to all conscientious objectors without discrimination, non-punitive and non-discriminatory in nature and cost and of a duration comparable to military service with any additional duration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Costa Rica);**

139.49 **Continue the ongoing efforts to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hat prohibit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Croatia);**

139.50 **Consider the adoption of further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ithin its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Greece);**

139.51 **Continue existing efforts to develop a government strategy for the enaction of an equality act (Greece);**

139.52 **Consider abolishing the capital punishment and introducing alternatives to death penalty (Kazakhstan);**

139.53 **Take concrete steps towards the form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Marshall Islands);**

139.54 **Entrench its moratorium on executions through the form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cluding by taking legislative action to permanently remove the death penalty from Korean law (New Zealand);**

139.55 **Take steps towards the form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ased on the longstanding moratorium (Norway);**

139.56 **Take steps towards the leg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while commuting the existing sentences to life imprisonment (Slovakia);**

139.57 **Continue its review of its legislation and policy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de jure (Timor-Leste);**

139.58 **Continue efforts on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at the legislative level (Uzbekistan);**

139.59 **Fully abolish the death penalty, which has been under a de facto moratorium for 25 years (Canada);**

139.60 **Abolish the death penalty (Costa Rica);**

139.61 **Formally abolish the death penalty and commute death sentences to lesser punishment or full pardons (Cyprus);**

139.62 **Consider adopting a de jure moratorium on capital executions (Italy);**

139.63 **Put an end to torture and ill-treatment practices in detention centres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139.64 **Increase measures against torture and ill-treatment, including by considering accession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preventive mechanism (Uruguay);**

139.65 **Review the protection and prevention mechanisms on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prevent retaliation against those who reported sexual violence and ensure the rights to justice and remedies for victims (Islamic Republic of Iran);**

139.66 **Review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mechanisms on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Israel);**

139.67 **Continue and strengthen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El Salvador);**

139.68 **Take steps on alternative service to ensure the observance of the rights to freedom of thought, belief, conscience and religion (Malawi);**

139.69 **Review the National Security Act, in particular article 7, to make it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amend the inaccuracies that could restri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exico);**

139.70 **Implement adequate measures to ensure freedom of the press and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Paraguay);**

139.71 **Take measures to bring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of 1948 and the Crimina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Russian Federation);**

139.72 **Repeal, revise or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so that it i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nd in particular guarantee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witzerland);**

139.73 **Replace criminal defamation and libel laws with civil laws and reform national security law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United States of America);**

139.74 **Guarantee that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is exercised by all persons and that its limitation and the rules on the use of public force ar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139.75 **Stop the suppression of all persons from freely forming trade unions and law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the arbitrary interference in the functioning of trade unions and the disproportionate use of force on all persons enjoying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39.76 **Allow conscientious objectors to serve for a length comparable to that of military service and with a variety of options to serve, taking into account the range of talent and skills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can contribute to the nation (Canada);**

139.77 **Ensure that no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is imprisoned or deprived of their liberty and that objectors are offered a genuinely civilian and non-punitive alternative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Spain);**

139.78 **Take steps to implement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lovakia);**

139.79 **Adopt provis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carry out an appropriate alternative and non-puni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and of a comparable length to military service, with any additional extension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Panama);**

139.80 **Amend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particular article 7, to ensure that it is not used arbitrarily or to restrict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opinion and association and release all individuals unjustly charged and sentenced to prison terms solely for the legitimate exercise of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Germany);**

139.81 **Provide for the release of all imprisoned conscientious objectors, expunge the criminal record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provide them with adequate reparation (Argentina);**

139.82 **Allow conscientious objectors to carry out an appropriate alternative service of a genuinely civilian character (Cyprus);**

139.83 **Release all conscientious objectors in detention, expunge their criminal records and grant them appropriate reparation (Luxembourg);**

139.84 **End the deten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ensure that civilian alternatives to military service are not punitive or discriminatory and remain under civilian control (Uruguay);**

139.85 **Improve civilian alternatives to the military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stonia);**

139.86 **Provide alternative service op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by introducing an alternative non-punitive service of genuine civilian character, under civilian control and of a length comparable to military service and ensure that alternative service is offered without unreasonable delay (Australia);**

139.87 **Ensure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can carry out genuinely civilian and non-punitive alternative service without discrimination, by reducing the length of alternative service and expanding the places of possible service (Croatia);**

139.88 **Continue efforts towards mak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of a non-punitive and civilian character (Poland);**

139.89 **Take measures to prevent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based on big data, including surveillance systems, from violating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Costa Rica);**

139.90 **Further reinforc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o tackle the menace of human trafficking (Pakistan);**

139.91 **Consider adopting a general law to combat human trafficking, with a focus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ddress complaints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including sex workers and migrants in an irregular situation (Peru);**

139.92 **Continue efforts to eradicate human trafficking, including through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and by adopting a victim-protective approach (Qatar);**

139.93 **Ensure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plan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and to protect trafficking victims (Sri Lanka);**

139.94 **Fight impunity for human trafficking crime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Syrian Arab Republic);**

139.95 **Eliminate all practice of social evil, such as trafficking in persons for sexual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and the increasingly higher rate of child crim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39.96 **Continue efforts towards combating human trafficking (Kyrgyzstan);**

139.97 **Take further measures to tackle human trafficking, particularly of women and children, and to provide effective protection to victims (Georgia);**

139.98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ffectively ensure labour protection for all workers (Indonesia);**

139.99 **Ensure effective protection of the rights to housing, education, medical care, employment and other fields for persons in vulnerable situations (China);**

139.100 **Continue strengthening measures to guarantee better care for people living with HIV (Senegal);**

139.101 **Provide age-appropriate sex education classe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revention of teenage pregnancy and HIV/AIDS and adequately addressing issue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Luxembourg);**

139.102 **Endorse the Safe Schools Declaration for the protection of schools in conflict areas (Spain);**

139.103 **Increase efforts to ensure that all children have access to quality education without discrimination and reduce educational disparitie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Qatar);**

139.104 **Implement the necessary reform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o mitigate threats against human right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including by raising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target consistent with human rights obligations (Malaysia);**

139.105 **Align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with the Paris Agreement goal of limiting global warming to 1.5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Marshall Islands);**

139.106 **Ensure tha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digenous Peoples are equally and fully represented in futur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Vanuatu);**

139.107 **Take swift action to eliminate all fossil fuels and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Vanuatu);**

139.108 **Further strengthen the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and plans aimed at eliminating structures and norms that perpetuate gender-based discrimination, violence and abuse, by allocating mor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Philippines);**

139.109 **Strengthen the mandat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gender and women's rights (Colombia);**

139.110 **Take further steps towards reducing gender inequality, including by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and in the private sector (Ukraine);**

139.111 **Combat the spread of cybercrime targeting women and girls, including through social media platforms, to ensure effective means of prevention and**

protection for victims and the legal prosecution of perpetrators (Syrian Arab Republic);

139.112 **Consider the possibility of lifting the reservation to article 16 (1) (g)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Paraguay);**

139.113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women's equal participation in work life and politics, by preventing discrimination and reducing the gender pay gap (Norway);**

139.114 **Continue measures to enhance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political and public life (Nepal);**

139.115 **Withdraw the reservation to article 16 (1) (g)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amibia);**

139.116 **Devise and implement strategies and structural reforms towards ensuring the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including thei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vincial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Marshall Islands);**

139.117 **Reinforce the gender and women's rights mandat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aldives);**

139.118 **Intensify efforts to promote women's rights and to prevent and comb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them, both online and offline (Italy);**

139.119 **Address th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political domains (Islamic Republic of Iran);**

139.120 **Encourag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sector companies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liminate all forms of onlin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including online gender-based violence and digital sex crimes (Ireland);**

139.121 **Strengthen efforts to combat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gender-based violence (Cyprus);**

139.122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liminate violence,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against women and girls, as well as to eradicate gender-based stereotypes and promote education on healthy sexual relationships, consent and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online sex crimes (Costa Rica);**

139.123 **Continue its efforts in ensuring protection for women and girls against all kind of violence, harassment and abuses (Sudan);**

139.124 **Combat effectively, online and offline,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China);**

139.125 **Continue the commitment towards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and strengthening support services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Sri Lanka);**

139.126 **Continue efforts for monitoring, preventing and combating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women and children, including online violence (Lithuania);**

139.127 **Ensure children's fair trial rights by preventing the use of forced confessions and including legal guardians in the child's trial proceedings (Gambia);**

139.128 **Introduce a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in the country (Azerbaijan);**

139.129 **Introduce comprehensive policies and strategies to address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including online violence, as well as to ensure the prevention of all forms of abuse of older persons (Serbia);**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39.130 **Reconsider the plan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pursuant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hilippines);**

139.131 **Develop a comprehensive strategy and an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fight and monitoring of all forms of violence and abuse against children, including online violence (Montenegro);**

139.132 **Consider joining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Mongolia);**

139.133 **Establish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that allows for the registration of births of all children born in the Republic of Korea,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or social status (Lithuania);**

139.134 **Continue efforts to ensure birth registration, making it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 legal status of the parents or their origins (Iraq);**

139.135 **Adopt a housing polic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of older persons to enable them to live independently, while reducing informal settlements and households that do not reach minimum housing standards (Slovenia);**

139.136 **Devote sufficient funding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ensure equal access to services and prevent poverty in old ag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y rais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to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verage (Slovenia);**

139.137 **Improve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electoral process and public political life (Jordan);**

139.138 **Take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care institu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New Zealand);**

139.139 **Eliminate the forced hospitalization of people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nd establish a community-based care system that promotes their full autonomy (Costa Rica);**

139.140 **Enhance the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building their capacities and ensuring their fair access to employment opportunities (Qatar);**

139.141 **Repeal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o end restrictions on consensual same sex relations (Ireland);**

139.142 **Continue to take measures to tackl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Israel);**

139.143 **Repeal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consensual sexual relations between people of the same sex (Mexico);**

139.144 **Legalize same-sex marriage and ensure that same-sex couples are recognized as having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opposite-sex couples in de facto relationships (New Zealand);**

139.145 **Adop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that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and intersex persons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Norway);**

139.146 **Adopt a generic law that addresses all cases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sexual orientation, race or nationality, in all areas, including labour, education and access to public services (Spain);**

139.147 **Enac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that prohibits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protection for all those in the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other community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39.148 **Pass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protecting members of marginalized communities, includ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intersex and other persons, and provide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United States of America);**

139.149 **Repeal the Military Criminal Act article criminalizing same-sex conduct in the military (United States of America);**

139.150 **Adopt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including protection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and ensure access to legal gender recognition without prerequisites (Australia);**

139.151 **Enact comprehensive and enforceabl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among other things, race,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and sex characteristics (Belgium);**

139.152 **Adopt an anti-discrimination law prohibiting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nd abolish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which criminalizes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Canada);**

139.153 **Eliminate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in the Military Criminal Code Act (Colombia);**

139.154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through the adoption of standards and the revision of study plans that promote the inclusion of all people (Costa Rica);**

139.155 **Ensure further efforts for the adoption of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prohibiting discrimination based on, among other thing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Denmark);**

139.156 **Continue to strengthen the figh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those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France);**

139.157 **Adopt and implemen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hich prohibits any discrimination, notably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Germany);**

139.158 **Repeal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hat punishes sexual activity between same-sex military personnel with sentences of up to two years in prison (Germany);**

139.159 **Legalize same-sex marriage between consenting adults and legalize adoption by same-sex couples (Iceland);**

139.160 **Repeal article 92 (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o end restrictions on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in the military (Iceland);**

139.161 **Stop conditioning legal gender recognition for transgender persons upon psychiatric diagnosis, medical treatment and the prohibition to marry or have children and introduce instead a transparent administrative process based on individual self-declaration (Iceland);**

139.162 **Strengthen the legal framework to protect and promote the rights of lesbian, gay, transgender, bisexual, intersex, queer and other persons (Colombia);**

139.163 **Ban conversion therapies (Iceland);**

139.164 **Further improve the registration of migrant children, with a view to the full realization of their right to compulsory education (Poland);**

139.165 **Continue consideration of the accession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of their Families (Kyrgyzstan).**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140. **The recommendation formulated during the interactive dialogue/listed below has been examin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been noted by the Republic of Korea:**

140.1 **Ensure a lasting solution to unresolved cases of sexual slavery and forced labour committed by Japa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imed at fulfilling the victims' right to truth, justice and reparation on the basis of a victim-centred approach and victims' demand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41. **All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report reflect the position of the submitting State(s) and/or the State under review. They should not be construed as endorsed by the Working Group as a whole.**

Annex

Composition of the delegation

The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headed by Vice Minister of Justice, Ms. Lee, Noh Kong, and composed of the following members:

- H.E. Mr. Yun, Seong-deok (Alternate Head of Delegatio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Permanent Representativ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s. Yoon, Seong-mee, Ambassador,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s. Yu, Jeong A, Counsell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r. Park, Jinyoul, Counsell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s. Yoo, Yena, First Secretary,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s. Yong, Gyoung Min, Second Secretary,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s. Nam, Yu Jin, Political Affairs Advisor,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Geneva;
- Ms. Lee, Yoo Sun, Director, Human Rights Support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Kim, Tae Hun, Director, Unification Leg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s. Choi, Ji Ye, Prosecu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s. Yeo, Hyejin,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s. Lee, Sung Ho, Deputy Director, Investigation & Enforcement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Ji, Wongeun, Deputy Director, Crime Prevention Planning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Kwak, Eun Sang, Assistant Deputy Director, Refugee Appeal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Kang, Ji Yoon, Human Rights Specialist,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s. Jun, Hyun Shin,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 Mr. Kim, Hae Bal Eun, Prosecutor, Department of National Security, Election and Labor (Labor Division), Supreme Prosecutors' Office;
- Ms. Hwang, Hyuni, Director,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s. Kim, Siyoon, Second Secretary,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r. Kim, Sangmin, Second Secretary, Human Rights and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r. Ahn, Sungmin, Director, Military Human Rights Divis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s. Kim, Aeryeong, Judge Advocate, Military Human Rights Divis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Mr. Hur, Kwon, Deputy Director, Popular Culture industry Divis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r. Lee, Seung Yeop, Deputy Director, Division of Rights Promo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r. Kim, Yeong Seo, Assistant Director, Divi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r. Ryu, Hyosang,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Mr. Lim, Jongpil, Senior Deputy Director, Planning and Finance Divis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Mr. Park, In Jae, Superintendent, Human Rights Protection Divisio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Mr. Song, Seon Jong, Senior Inspector, Human Rights Protection Divisio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Mr. Sung, Jaesik, Deputy Director, Internet Consumer Policy Divis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Mr. Ki, Dong Min (Advisor), Member of Parliament, National Assembly;
- Mr. Jang, Dong Hyeok (Advisor), Member of Parliament, National Assembly;
- Ms. Han, Myoungae (Advisor), Director, Division of Child Right Advocacy,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Ms. Kim, Eun Young, Interpreter;
- Ms. Lee, Lami, Interpreter.

A/HRC/53/11/Add.1

Advance version

Distr.: General
13 June 2023

Original: English

Human Rights Council
Fifty-third session
19 June-14 July 2023
Agenda item 6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Addendum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 The present document is being issued without formal editing.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Joining the constructive spirit and effort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e Republic of Korea carefully reviewed the recommendations received during the 4th cycle review on 26 January, 2023.

2. Based on the governance established between relevant ministries, agencies and civil society through the previous three cycles of UP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ld a meeting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members of civil society in April 2023 to exchange various opinions on the UPR recommendations. Following this discussion, the view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provided in this document were decided upon in close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among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Policy Council.

3. Out of the 263 recommendations received from UN member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supports 159, partially supports 5 and notes 99 recommendations. This document contains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on a total of 166 recommendations, including 165 recommendations on which the Government did not provide responses before the adoption of the Working Group Report, and one (138.86) recommendation which was moved to another category (See paragraph 8). This report states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63 recommendations, “partially supports” 5 recommendations and “notes” 98 recommendations (including “notes” and does “not accept”). The Government "partially suppor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considering that they contain distinguishable elements: 139.3, 139.6, 139.10, 139.84, 139.136.

4. In the spirit of the UPR, the Government presented its position in consideration of the actions required by each recommendation. Accordingly, recommendations that are already implemented or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re supported. However, the Government was not able to immediately support some recommendations due to the following concerns: (a) not being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UPR, (b) requiring immediate act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 (c) being inapplicable considering the domestic legal system and practice, (d) not being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position.

5. While noting some of the recommendations which could not be immediately supported or are not in line with the legal system and social practic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pursuant to the spirit of the UPR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lfillment of international obligations,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nd national human rights framework

6.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njoy support: **the former part of 139.6, the latter part of 139.10, 139.31, 139.38, 139.40, 139.109 139.117.**
   (a) **The former part of 139.6,139.31** See paragraph 7 of the Working Group Report.
   (b) **139.109, 139.117**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gender equality and women's rights through its Gender Equality Division conducting investigation and providing recommendations to improve laws and policies.

(c) **The latter part of 139.10** The 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 was adopted at the 5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the Government plans to establish a domestic system and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reducing and preventing illegal tobacco trade.

(d) **139.40** See paragraph 123 of the Working Group Report.
The Government not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139.1-2, the latter part of 139.3, 139.4-5, the latter part of 139.6, 139.7, the middle part of 139.10, the latter part of 139.18, 139.19-20, the former part of 139.21, the former part of 139.22, 139.23-24, the former part of 139.25, 139.26~30, the former part of 139.64, 139.102, 139.112, 139.115, 139.132, 139.165.**

(e) **The latter part of 139.6, 139.19-20, the former part of 139.21, the former part of 139.22, 139.23-24, the former part of 139.25, 139.165** The recommendation is under careful review as the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ould require public support. The Government continues its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by constantly updating it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 **139.4, the middle part of 139.10** The recommendations are being implemented through policies based on the *Nationality Act*.

(g) **139.7** The Republic of Korea is making effort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in education, including by providing free education up to the high school level.

(h) **139.1-2, the latter part of 139.3, 139.5, the latter part of 139.18, 139.26-30, the former part of 139.64, 139.102, 139.112, 139.115, 139.132** The Government is continuously reviewing the recommendations.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7.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njoy support: **139.47, 139.49-51, 139.108, 139.163.**
   (a) **139.108**, Already implemented.
   (b) **139.47, 139.49-51** Refer to the response to the advance questions presented during the review.

8.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noted: **138.86, 139.32, 139.41, 139.44-46, 139.141-162**.
   (a) **138.86, 139.32, 139.44, the former part of 139.45, 139.46, 139.142, 139.145-147, the former part of 139.148, the former part of 139.150, 139.151, the former part of 139.152, 139.154-157, 139.162** The Government face difficulties in taking immediate act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
   (b) **139.141, 139.143, 139.149, the latter part of 139.152, 139.153, 139.158, 139.160**,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does not uniformly penalize same-sex sexual relations, and is applied only in cases of direct and specific violation of military discipline and healthy community life.
   (c) **139.41, the latter part of 139.45** Given that the Republic of Korea considers the motive for a crime as a condition for sentencing under the existing *Criminal Act*, a careful approach is necessary in reviewing the need to amend the *Criminal Act* and enact a separate special law.
   (d) **139.144, the latter part of 139.148, 139.159** The Government does not plan to take immediate action since changes in the family institution, such as allowing same-sex marriage or adoption by same-sex couples, hold legal and social significance.
   (e) **The latter of 139.150, 139.161** Gender recognition requires legislative action as it is a matter of determining the legal status of one'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gender. In the absence of such legislation, the decision to grant gender recognition is a matter of the judiciary and the presiding judge, in line with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makes a decision on each specific case, taking into account various factors.

Development, environment and diplomacy

9.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njoy support: **139.39, 139.104-106.**
139.39, 139.104-106, Already implemented

10.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noted: **139.42-43, 139.107.**
139.107 The specific context of each country is taken into account when applying the power generation mix polic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t is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eliminate all use of fossil fuels, given the importance of ensuring a stable electricity supply.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is continuing efforts to reduce coal power genera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in order to meet the carbon neutrality commitment mad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11.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njoy support: **139.63, 139.65-67, 139.125.**

12.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noted: **139.8-9, the former part of 139.10, 139.11-17, the former part of 139.18, the latter part of 139.22, the latter part of 139.25, the former part of 139.36, 139.52-62, the latter part of 139.64, 139.71-72, the latter part of 139.73, 139.130.**
(a) **139.8-9, the former part of 139.10, 139.11-17, the former part of**

139.18, the latter part of 139.22, the latter part of 139.25, 139.52-62 Refer to the response to advanced questions presented during the review.

(b) **The former part of 139.36, 139.72, the latter part of 139.73**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basic order of freedom and democracy in a situation where security risks from North Korea have not been resolved. Regarding **139.71**, to avoid undue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National Security Act* of 1948 has been wholly or partially amended several times since its enactment to adjust the subject of punishment and statutory punishment.

(c) **The latter part of 139.64**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urrently performs a role similar to that of the National Prevention Mechanism, such as investigat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detention facilities.

(d) **139.130** The Government is pursuing the amendment of the *Juvenile Act* and the *Criminal Act* to lower the age of juveniles eligible for criminal punishment from 14 to 13. A number of factors, such as the fact that 70% of juveniles subject to protective disposition are 13 years old, and that students enter middle school at the age of 13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have been comprehensively taken into account.

Fundamental freedoms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and political life

13.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njoy support: **139.70, 139.74, the latter part of 139.75, 139.81, 139.83, the former part of 139.84.**

(a) **139.70, 139.81, 139.83, the former part of 139.84**, Already implemented

(b) **139.74, the latter part of 139.75** The freedom of assembly and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association of all citizens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pplicabl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By guaranteeing lawful demonstrations while protecting the public from unlawful protests,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ensure that both the right to assembly is realized and the public welfare is protected.

14.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noted: **139.34, 139.48, 139.68-69, the former part of 139.73, 139.76-80, 139.82, the latter part of 139.84, 139.85-88.**

(a) **139.34, 139.48, 139.68, 139.76-79, 139.82, the latter part of 139.84, 139.85-88**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operat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since 26 October 2020. A careful review is required since the alternative service period and field of service have been decided on the basis of discuss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social consensus, considering equity with others serving in the military and equality of burdens.

(b) **139.69, 139.80** See paragraph 124 of the Working Group Report.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only applied restrictively when there is a clear risk of causing real damage to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or the free democratic order, in order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prevent arbitrary application.

(c) **The former part of 139.73**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including the abolition of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is in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discussion in the legislative body, taking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also possible gaps in victim protection and the availability of punitive damages system as a form of strong civil sanction.

Prohibition of all forms of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15.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njoy support: **139.90-139.97.**

139.90-139.97 See paragraph 11 of the Working Group Report. The Government striv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Regarding the **former part of 139.91,** if a foreigner is in the process of a court trial, an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or a remedy process in relation to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child abuse, human trafficking, or exploitation, the person's period of stay may be extended until the completion of such proceedings. Even after the extended period expires, a further extension is possible if deemed necessary to recover damage, etc.

Right to privacy

16. The Government supports **139.89.**

139.89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making every effort to protec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data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under applicable laws. Considering the AI industry is in the beginning stage of its development, the Government will seek to implement a balanced policy.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labor

17.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njoy support: **The former parts of 139.75, 139.99-100, the latter part of 139.129, 139.135, the latter part of 139.136**, Already implemented

The former part of 139.75 The right to assembly and the activities of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labor unions are ensur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pplicable laws in the Republic of Korea.

18.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noted: **139.33, 139.35, 139.98, the former part of 139.136.**
    (a) **139.33, 139.35, 139.98** Given the different forms of work, there are limits to applying the legislation uniformly to all types of workers. The Government plans to work on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focusing on what should be universally guaranteed to labor in the course of their work.
    (b) **The former part of 139.136** The Republic of Korea is conducting the 5th Financial Accounting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develop improvement plans and will comprehensively review measures to ensure adequate retirement income and financial stability.

Right to education

19.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njoy support: **139.101, 139.103, the latter part of 139.122.**
    (a) **139.101, the latter part of 139.122**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education is provided to all students at every level in Korea without discrimination, and the gender equality perspective is incorporated in the gender education programmes.
    (b) **139.103**, Already implemented.

Rights of women

20.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njoy support: **the former part of 139.3,**

139.110-111, 139.113-114, 139.116, 139.118-121, the former part of 139.122, 139.123-124, 139.126.

(a) **The former part of 139.3** An amendment bill setting out detailed procedures on artificial abortion and providing basis for social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in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has been submitted.

(b) **139.110-111, 139.113-114, 139.116, 139.118-119, 139.121, the former part of 139.122, 139.123-124, 139.126**, Already implemented.

(c) **139.120**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efforts to promote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in order to mitigate and prevent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of business activities by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Rights of children

21.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njoy support: **139.37, 139.127-128, the former part of 139.129, 139.131, 139.133-134, 139.164.**

(a) **139.37** In June 2022, a bill on the birth registration of foreign children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under deliberation.

(b) **139.127, the former part of 139.129, 139.131**, Already implemented.

(c) **139.128, 139.133-134** To introduce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the proposal on an amendment to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has been drafted and is under delib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d) **139.164** Since February 2020, to enable foreign children who were not born in the Republic of Korea to complete their studies and find employment, a residence permit is granted if the child has resided in the Republic of Korea more than six or seven years and is attending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or has graduated from high school.

국가인권위원회 KOR humanrights.go.kr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2.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njoy support: **139.137-138, 139.140.**
139.137-138, 139.140, Already implemented.

23.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is noted: **139.139.**
139.139 The Republic of Korea agrees with the spirit of the recommendation. However, hospitalization may be necessary for the treatment of mental patients and for the safety of the community, and a complete ban on the system would pose difficulties. Strict procedures have been introduced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of patients and the Government is continuing efforts to ensure that patients receive community-based treatment.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24.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is noted: **the latter part of 139.21.**
The latter part of 139.21 The Government plans to carefully review the recommendation in light of immigration policies.

Others

25. The Government does not accept **the latter part of 139.36.**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s a legislation aiming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in accordance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11. 제4차 UPR 대한민국 심의 최종보고서 및 정부답변서(국문)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국제연합 A/HRC/53/11

총회

일반배포
2023년 3월 23일

원본: 영어

인권이사회
제53차 회기
2023년 6월 19일 - 7월 14일
의제6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최종보고서[1)]

대한민국

1) 본 문서는 법무부의 국문번역본임을 밝힙니다.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인권 - 국제인권규범 - 정보 및 자료]

서론

1.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라 설립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은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제42차 회기를 진행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2023년 1월 26일 제8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맡았다. 실무그룹은 2023년 2월 1일 개최된 제15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 2023년 1월 1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코트디부아르, 프랑스, 아랍에미리트를 간사국(Troika)으로 선정하였다.

3. 인권이사회 결의 5/1에 따른 부속서 제15항 및 결의 16/21에 따른 부속서 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의 문서들이 작성되었다.
   (a) 15(a)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 국가보고서;[2)]
   (b) 15(b)항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작성한 유엔 권고사항 요약보고;[3)]
   (c) 15(c)항에 따라 준비된 이해관계자 보고서 요약본.[4)]

4. 벨기에, 캐나다, 독일,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이행·보고·후속조치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에 대해 우호국 그룹을 대표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 우루과이는 간사국을 통해 사전 질의서를 대한민국에 제출하였다. 사전 질의서는 UP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

2) A/HRC/WG.6/42/KOR/1
3) A/HRC/WG.6/42/KOR/2
4) A/HRC/WG.6/42/KOR/3

Ⅰ. 심의과정 진행 개요

A. 수검국 발표

5.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고자 하는 새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6. 제4차 UPR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사회와 협의했으며, 제네바의 “UPR 프리세션”에 참여하였다.

7. 제3차 UPR 권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및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다. 또한 세 가지 ILO 핵심협약인 제29호, 제87호, 제98호를 비준하였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를 철회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타 조약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 가입한 조약을 이행할 것이다.

8. 대한민국은 여러 유엔 특별절차의 국가방문에 협력하였고, 2016-2018년 및 2020-2022년 임기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9.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과 인권” 장이 추가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채택하였다. 제4차 계획 수립 시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을 포함할 계획이다.

10. 정부의 조치는 경찰의 평화적 집회 조력을 위한 “한국형 대화 경찰제도”, 경찰관의 인권교육 및 관련 경찰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11.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인신매매방지 종합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12.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13.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교도소의 개보수를 통해 추가적인 수용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14.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수급 자격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노인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확대하였다. “의료급여” 제도와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15.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78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지원과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2020년에는 온라인 학습을 시행하였다.

16. 노동권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근로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들의 사건 조사 의무를 명시하였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17.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에 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

18.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부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기본계획을 도입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벌금 및 위반 행위를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였다.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양성평등지원제도를 감독하였다.

19.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신설되었고,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고, 보호기관과 쉼터를 추가 개소하였다.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었다. 정부는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의 소외를 방지하고자 한다.

20. 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규칙 조항을 신설하고, 각 군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증원하였다.

21.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22. 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 사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 따라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연금액을 인상하고, 개별적 복지서비스를 약속하였다.

23. 노인과 관련하여, 치매 환자 돌봄, “학대피해 노인 쉼터”,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충하였다.

24.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며,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점검하였다. 개선된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권고 퇴직시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인권보호관이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심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25. 대한민국 정부는 개발협력시 인권 기반 접근법을 반영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2020년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출범하였고, 사업 관리에 인권을 내재화하였다.

B. 상호 대화 및 수검국 답변

26. 총 95개 대표단이 상호 대화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호 대화 중 제시된 권고사항은 이 보고서 제Ⅱ부에 수록되어 있다.

27. 이란은 불평등,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28. 이라크는 주거권 존중 보장, 사회적 보호 강화, 인신매매 방지 등을 포함한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체계를 환영하였다.

29. 아일랜드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확대를 환영하였으나, 이전 권고에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성과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30. 이스라엘은 비정규직, 장애인의 권리 및 여성 폭력 퇴치에 대한 성과를 칭찬하였으나, 군 내 성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31. 이탈리아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성평등 증진, 공공 부문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강화, 특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32. 일본은 무엇보다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33. 요르단은 인권 관련 성과를 반영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인신매매와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법률 마련을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34. 카자흐스탄은 사회 정책, 취약계층 지원, 군대 내 인권 개선 및 학교 내 인권교육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35. 쿠웨이트는 국가보고서 작성과 이전 UPR 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36. 라오스는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여와 취약계층 권리 보호 진전을 환영하였다.

37. 레바논은 2018-2022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과 새로운 계획 준비 및 「인신매매등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을 환영하였다.

38. 리비아는 UPR 절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긍정적 협력과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39. 리투아니아는 인권을 국정과제의 최전선에 두기 위한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40. 룩셈부르크는 이전 UPR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의 통과를 환영하였다.

41. 말라위는 이전 권고 이후 인권 증진 성과에 감사를 표하며,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의 통과를 주목하였다.

42. 말레이시아는 인권 보호 정책의 강화된 결합력을 강조하였고 사회적 불평등, 저렴한 교육 및 기본 의료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장려하였다.

43. 몰디브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협력적 접근과 아동정책을 위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환영하였다.

44. 마셜 제도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과 사형제도의 공식적 폐지를 향한 움직임을 환영하였다.

45. 모리셔스는 인권이사회 업무에 최저개도국(LDC) 및 군소도서국(SIDS)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기술지원 신탁기금(Voluntary Technical Assistance Trust Fund)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교육 접근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칭찬하였다.

46. 멕시코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1930년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1948년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칭찬하였다.

47. 몽골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강화된 노동권, 개선된 업무 환경 및 모든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을 환영하였다.

48. 몬테네그로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 철회를 환영하였고 사형선고를 받은 모든 수감자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것을 촉구하였다.

49. 나미비아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약속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학교의 인권교육 도입을 칭찬하였다.

50. 네팔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노인 빈곤 감소 노력을 환영하였다.

51. 네덜란드는 인권 제도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나 온라인을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52. 뉴질랜드는 여성 권리 인정의 주요 단계로서 임신중절의 비범죄화를 환영하였고,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53. 노르웨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강화된 집행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행을 환영하였다.

54. 파키스탄은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대한민국의 협력과 인신매매, 인권 및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도입된 입법적·정책적 조치를 환영하였다.

55. 파나마는 권고사항을 제출하였다.

56. 파라과이는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을 환영하였고 이주정책에 포함된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을 환영하였다.

57. 페루는 2018-2022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주목하였다.

58. 필리핀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전략계획과 ILO 협약에 대한 공약, 외국인 및 이주민 차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59. 폴란드는 대체복무제도와 학교 내 인권교육 도입을 환영하였고,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장려하였다.

60. 포르투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 철회를 칭찬하였다.

61. 카타르는 제3차 UPR에서 수용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의 여러 정책적·입법적 조치 도입을 환영하였다.

62. 러시아는 제3차 UPR 권고사항 중 아직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점을 우려하였다.

63. 세네갈은 제3차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환영하였다.

64. 세르비아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환영하였다.

65. 싱가포르는 장애인의 의료 및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서비스 확대를 통한 노인복지를 환영하였다.

66. 슬로바키아는 추가적인 조약 가입을 장려하였고, 사형이 최근까지 집행되지 않았음을 환영하였으며, 대체복무제의 조건이 적절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였다.

67. 슬로베니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환영하였고, 노인의 권리 인정을 위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68. 스페인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를 환영하였다.

69. 스리랑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조치와 특별절차와의 상호작용을 환영하였다.

70. 수단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신매매방지 및 여성폭력 관련 법률 및 국가아동통합정책을 환영하였다.

71. 스위스는 사형제에 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과 관련 결의안 지지를 환영하였고, 성평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장려하였다.

72. 시리아는 여성 폭력이 지속되는 것과 정보기술 확산이 증가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73. 태국은 기업과 인권,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관련 성과, 개선된 고용허가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과 관련된 노력을 인정하였다.

74. 동티모르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임에 주목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와 개선된 고용제도를 환영하였다.

75. 토고는 이주민, 난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환영하였다.

76. 튀르키예는 제3차 UPR 권고사항 이행과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평등 및 비차별 관련된 법률의 도입을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77. 투르크메니스탄은 2018-2022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주목하였고, 개발 협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적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78.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의 인권 증진 및 보호 의지와 국제 조약에 따른 의무 수행 및 인권 메커니즘 협력 노력을 환영하였다.

79. 영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조치를 환영하며, 평등과 비차별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장려하고, 사형제도의 모라토리엄을 촉구하였다.

80. 미국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인권 증진한 것을 칭찬하였으나, 낮은 난민 지위 인정률을 우려하였다.

81. 우루과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공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82. 우즈베키스탄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을 칭찬하며 19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83. 바누아투는 대한민국 대표단을 환영하며 발표에 감사를 표하였다.

84. 베네수엘라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의심, 혐오 표현 증가,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85. 베트남은 여성의 대표성 향상, 문화 다양성 존중,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칭찬하였다.

86. 잠비아는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인권 메커니즘을 준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87. 알제리는 한국국제협력단이 2021-2025년 전략에 따라 수행한 국제협력사업과 차별,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에 대응하는 조치를 환영하였다.

88. 아르헨티나는 대한민국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환영하였다.

89. 호주는 인권 증진을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와 사형제 모라토리엄에 대한 유엔 결의안 77/222에 대한 지원을 환영하였다.

90. 아제르바이잔은 인권 메커니즘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주목하였고, 인권에 대한 고려를 명시한 국제개발협력 전략계획을 강조하였다.

91. 방글라데시는 인신매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과 사회안전망 및 주거 확장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92. 벨라루스는 대한민국 대표단을 환영하며 보고서 제출에 감사를 표하였다.

93. 벨기에는 대한민국의 2021년 임신중절 비범죄화를 환영하였으나, 성 불평등 및 차별 금지와 관련된 진전이 더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94. 부탄은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적 조치와 주거권 증진을 위한 조치, 아동 인권을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95. 브라질은 학교 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시행과 교사 역량강화에 대한 투자 및 1930년 「ILO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1948년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장려하였다.

96. 브루나이는 다양한 제도를 통한 장애인 지원과 직장 내 성평등 증진,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선을 높이 평가하였다.

97. 불가리아는 학교 내 인권교육과 교사 역량강화의 선례를 지속할 것을 장려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강조하였다.

98. 캐나다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대외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대한민국의 의지에 주목하였다.

99. 칠레는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환영하였다.

100. 중국은 대한민국이 이룬 진전에 주목하였으나 이주민과 소수 민족 차별, 여성 대상 성희롱, 효과적이지 못한 취약계층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101. 콜롬비아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법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계획 및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향상 계획을 환영하였다.

102. 코스타리카는 대한민국이 국가보고서를 발표한 데에 감사를 표하며 관련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103. 코트디부아르는 대한민국이 이전 UPR 이후로 인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반기며, 지속적인 노력을 장려하였다.

104. 크로아티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양심적 병역거부의 비범죄화 결정을 환영하였으나,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권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105. 사이프러스는 장애인 차별 근절을 위한 강화된 법률과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이행을 환영하였다.

1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내 체계적이고 만연한 인권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107. 덴마크는 성소수자들이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벽에 직면해 있음에 우려를 표하였고, 고문방지이니셔티브의 지원이 완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108. 이집트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 철회를 비롯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칭찬하였다.

109. 엘살바도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 철회와 인신매매를 방지를 위한 법을 환영하였다.

110. 에스토니아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학교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포함, 성평등을 향한 진전에 감사를 표하였다.

111. 핀란드는 이전 UPR 이후 대한민국이 이룬 진전을 환영하였다.

112. 프랑스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환영하였다.

113. 감비아는 지방자치단체에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202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환영하였다.

114. 조지아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 주거권의 점진적 해소 및 여성의 권리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115. 독일은 대한민국이 역내에서 고무적인 사례임을 표명했으며, 병역에서의 대체복무 제도 도입에 주목하였다.

116. 가나는 학교 내 인권교육 포함, 양성평등기본계획 도입, 군 내 인권 조치를 칭찬하였다.

117. 그리스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 철회와 인신매매 방지 및 가정폭력을 처벌하는 법을 환영하였다.

118. 아이슬란드는 대한민국 대표단과 대한민국의 국가보고서를 환영하였다.

119. 인도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 및 계획,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에 감사히 주목하였다.

120. 인도네시아는 병역 관련 문제를 비롯하여 인권 증진 및 보호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한 여성의 권리 신장에서의 진전을 인정하였다.

121. 키르기스스탄은 특히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입법적·정책적 메커니즘 강화를 위한 유의미한 조치를 환영하였다.

122. 대한민국 대표단은 사전질의에 답하며, 정부가 사형 집행의 점진적 감소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23.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하였다.

124.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 적용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또한 일반 국민과 같은 동등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사법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125.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절차를 마련하였다. 동성혼 인정 관련 제도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126.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은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며, 검사는 접근금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강간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온라인 아동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정부는 높은 위기에 처한 아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긍정 양육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27. 정부는 경력단절을 성별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육아휴직 확대, 육아 단축근무, 직업훈련을 확대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 이행을 계획하였다.

128.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노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29. 난민지위심사 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송환 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였다.

130. 대한민국 정부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131. 「신문법」과 「방송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유일한 예외사항은 공공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132. 권고사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이행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133.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가 공식 합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1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제노동 식별을 위해 사업장들은 매년 점검을 받고 있다. 인신

매매와 관련하여 대표단은 조기 피해자 식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식별지표를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135.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하여 형사책임 연령을 13세로 낮추고, 구금을 최소화하였다.

136. 대한민국 정부는 임신중절의 요건을 명시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137.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4차 UPR이 일회적인 절차가 아니며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시된 질의 및 권고사항은 정책 수행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Ⅱ. 결론 및 권고

138. 상호 대화에서 도출된 아래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혔다:

138.1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할 것(덴마크);

138.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나미비아);

138.3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비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우크라이나);

138.4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인권을 더욱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조치 이행을 지속할 것(일본);

138.5 인권기반 접근법을 토대로 국제협력 전략을 지속할 것(엘살바도르);

138.6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인권분야 중기전략, 인권 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을 전면 이행할 것(키르기스스탄);

138.7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청소년, 공무원, 교육자 대상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할 것(베트남);

138.8 인종주의,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에 대한 근절 강화 노력을 지속할 것(알제리);

138.9 혐오표현 및 인종차별적 혐오 선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벨라루스);

138.10 인종차별 및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입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중국);

138.11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근절할 것(이집트);

138.12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것(잠비아);

138.13 수형자 처우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리비아);

138.14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 근절을 목표로 노력할 것(레바논);

138.15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수단);

138.16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 차별을 근절할 것(베트남);

138.17 국가연금제도 강화 및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확대를 지속할 것(포르투갈);

138.18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취약계층 대상 사회보장 확대를 지속함으로써 포용적 복지 국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투르크메니스탄);

138.19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파키스탄);

138.20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아제르바이잔);

138.21 적정주거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우선과제로 삼는 법령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할 것(카자흐스탄);

138.22 누구나 주거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적정주거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조치를 강화할 것(아제르바이잔);

138.23 주거권 및 적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부탄);

138.24 적절한 사회보장 및 의료 접근 확보 및 차별 및 폭력 예방을 통해 빈곤, 특히 노인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브라질);

138.25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형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및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비롯한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 보건 서비스 접근 확보를 고려할 것(인도);

138.26 보건서비스 접근, 특히 빈곤 및 취약계층의 보건 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조지아);

138.27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도록 「형법」 및 기타 법령을 개정할 것(에스토니아);

138.28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임신중절을 규정하는 법을 도입할 것(스페인);

138.29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할 것(뉴질랜드);

138.30 신속히 「형법」을 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아이슬란드);

138.31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에 대해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형법」을 개정할 것(벨기에);

138.32 모든 사람에게 무상 공공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학교 등록과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할 것(방글라데시);

138.33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에 관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몰디브);

138.34 학교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교원을 증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교육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모리셔스);

138.35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제적 달성 목표인 국민총소득(GNI)의 0.7% 수준까지 확대할 것(방글라데시);

138.36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비롯하여 특히 고용 부문에서 젠더 기반 범죄와 여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인도네시아);

138.37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지속, 강화할 것(엘살바도르);

138.3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낙인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크로아티아);

138.39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칠레);

138.40 과학·기술, 연구·혁신 분야를 비롯한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높이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불가리아);

138.41 여성의 경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강화를 지속할 것 (브루나이);

138.42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의 이행을 지속할 것 (베트남);

138.43 여성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제도를 강화할 것(튀르키예);

138.44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경우,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지 또는 오히려 강화할 것(스위스);

138.45 유해한 성 고정관념과 같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동인을 제거하고 이들에게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적 기관 간 연계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성평등을 증진할 것(네덜란드);

138.46 여성차별 동인을 제거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의 여성 참여를 높임으로써 성평등을 증진할 것(말레이시아);

138.47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리투아니아);

138.48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크);

138.49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 기반 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카자흐스탄);

138.5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며,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절차 및 법령의 시행을 지속할 것(쿠웨이트);

138.51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을 보장할 것(레바논);

138.52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잠비아);

138.53 부부강간을 범죄화하도록 필요한 법률개정을 위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강화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따른 성정체성을 인정할 것(아르헨티나);

138.54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는 등 젠더 기반 폭력 및 성불평등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것(브라질);

138.55 성평등을 증진하고, 장애가 있는 여성 및 여아를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대중인식 개선 운동을 추진할 것(에스토니아);

138.56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시리아);

138.57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이행을 강화할 것(라오스);

138.58 여성에 대한 모든 성폭력을 근절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영국);

138.59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기타 형태의 폭력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게 사법 접근성을 보장할 것(러시아);

138.60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여 부모를 지원할 것(말레이시아);

138.61 부적절한 미성년자 구금환경을 방지하여 국제적 기준을 준수할 것(감비아);

138.62 「소년법」상 구금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아동을 성인 수감자와 함께 구금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화할 것(감비아);

138.63 소년사법제도 관련 법령 및 미성년자 구금에 관한 조치를 재검토할 것(부탄);

138.64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 및 학대를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 전략을 추진할 것(에스토니아);

138.6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이행할 것(사이프러스);

138.66 아동폭력 및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을 강화할 것(벨라루스);

138.67 국가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아동보육시설, 교육, 보건의료, 여가, 국가지원제도 접근을 보장할 것(잠비아);

138.68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이행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투르크메니스탄);

138.69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여 아동 권리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둘 것(스리랑카);

138.70 교정시설의 여건, 특히 미성년자 구금시설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페루);

138.71 출산 및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각지대 없는 견고한 아동양육 제도를 마련하며,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아동을 존중하는 포용적 가정 문화를 조성하며, 젊은 세대가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국제인구개발회의 25주년 기념 정상회의(ICPD25)에서 채택된 부모 지원에 관한 합의를 이행할 것(파나마);

138.72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학대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네팔);

138.73 노인 복지 및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라오스);

138.74 노인의 안전, 안녕, 사회적 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이행을 지속할 것 (싱가포르);

138.75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폭력 및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종합적 전략을 수립할 것(슬로베니아);

138.76 노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알제리);

138.77 장애인,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란);

138.78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입법 조치와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스라엘);

138.79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과 사회 구성원 간 평등을 추구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력을 증진할 것(쿠웨이트);

138.80 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접근 및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싱가포르);

138.81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튀르키예);

138.82 노인,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이행을 지속할 것(벨라루스);

138.83 장애인의 동등한 건강권 향유 보장을 위한 노력을 우선할 것(브루나이);

138.84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 환경 및 동일임금 등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완전한 사회적 통합 과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불가리아);

138.85 장애가 있는 여성 및 여아를 비롯한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속할 것(인도);

138.86 성적 지향 및/또는 성정체성을 사유로 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할 것 (칠레);

138.87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이행을 지속할 것(파키스탄);

138.88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보호 확대 보장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파라과이);

138.89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고용 선택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특히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횟수와 사유에 제한을 두는 관련 규제를 개정할 것(필리핀);

138.90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관련 조치를 더욱 개선할 것(태국);

138.91 특히 사용자 및 채용기관과 관련하여 노동 관련 법률 집행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처우를 강화할 것(태국);

138.92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자들의 이의 제기 및 구제절차를 신설하는 등 이주민 권리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튀르키예);

138.93 특히 여성·아동 이주민의 구금과 관련하여, 인권을 기반으로 한 이민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우루과이);

138.94 이주민 및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우즈베키스탄);

138.95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편견·허위정보·낙인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베네수엘라);

138.96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가나);

138.97 외국인 이주민와 난민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고려할 것(인도).

139.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제53회 인권이사회 전까지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139.1 「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프랑스);

139.2 「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슬로바키아);

139.3 자발적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프랑스);

139.4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할 것(코트디부아르);

139.5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몽골, 몬테네그로);

139.6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과「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멕시코);

139.7 유네스코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을 고려할 것(모리셔스);

139.8 사형제를 폐지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호주);

139.9 법률상 사형제 폐지를 검토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프랑스);

139.10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할 것(파나마);

139.11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포르투갈);

139.12 사형제 폐지에 관한 모라토리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형제를 폐지하는 입법 조치를 승인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스페인);

139.13 사형제를 폐지하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조항 없이 비준할 것(아이슬란드);

139.14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우루과이);

139.15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코트디부아르);

139.16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기존에 선고된 모든 사형을 감형할 것(멕시코);

139.17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스위스, 영국);

139.18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룩셈부르크);

139.19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칠레);

139.20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 가능성에 대하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국내 심의 절차를 추진할 것(인도네시아);

139.2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주자와 그 가족의 결합을 위한 국내 정책을 강화할 것(이집트);

139.22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콜롬비아);

139.2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알제리, 방글라데시, 필리핀, 토고);

139.2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리비아, 세네갈);

139.2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파라과이);

139.2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 및 이를 비준할 것(덴마크);

139.27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몽골);

139.2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이탈리아);

139.29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핀란드);

139.3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를 강화할 것(가나);

139.31 주요 미가입 국제인권조약의 비준을 검토할 것(말라위);

139.32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지체없이 도입할 것(아일랜드);

139.33 노동 관련 법령이 모든 유형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개정할 것(폴란드);

139.34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재검토를 고려하고 인권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개선할 것(동티모르);

139.35 모든 유형의 노동자가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 확장을 고려하고 모든 경제 영역에 노동 기준을 확대할 것(동티모르);

139.36 「국가보안법」 및 기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모든 악법, 도발적인 소위 「북한인권법」을 폐지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9.3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고려할 것(이집트);

139.38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인권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 (투르크메니스탄);

139.39 기후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적 대응 시스템 및 이행계획 수립을 고려할 것(부탄);

139.40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하여 이행,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국내 상설 메커니즘을 신설할 것(파라과이);

139.41 형사 범죄의 양형에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하도록 「형법」 개정을 검토할 것(요르단);

139.42 국제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거나 위법적인 일방적·강제적 조치의 시행을 종결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139.43 국제법 및 유엔헌장에 반하며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방적·강제적 조치를 방지 및 폐기할 것(벨라루스);

139.4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정부 전략을 발전시키고, 포괄적 평등법을 통과시킬 것(네덜란드);

139.45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을 도입하고, 법령에 인종차별의 개념을 규정하며, 인종적 사유로 인종 혐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러시아);

139.46 성, 종교, 사회적 조건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인종, 성적 지향, 성별 등을 사유로 한 차별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시행을 고려할 것(페루);

139.47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 법률 기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우크라이나);

139.48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합리적·객관적 기준에서 현역 복무와 비교할 때 복무 특성, 비용 및 기간이 비징벌적·비차별적이며, 온전히 민간 성격을 지닌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도록 관련 법률 및 관행을 검토할 것(코스타리카);

139.49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크로아티아);

139.50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포함하도록 고려할 것(그리스);

139.51 「평등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그리스);

139.52 사형제를 폐지하고 대체형벌의 도입을 고려할 것(카자흐스탄);

139.53.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마셜 제도);

139.54 한국 국내법에서 사형제 관련 규정을 영구히 삭제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하는 등 사형제의 공식적 폐지를 통해 사형 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움을 확고히 할 것(뉴질랜드);

139.55 장기간 지속된 사형제 모라토리움에 기초하여, 사형제의 공식적 폐지를 추진할 것(노르웨이);

139.56 사형제의 법률적 폐지를 추진하고, 기존에 선고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것(슬로바키아);

139.57 사형제의 법률적 폐지를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를 지속할 것(동티모르);

139.58 사형제의 법률상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우즈베키스탄);

139.59 25년간 사실상 모라토리움 상태에 있는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캐나다);

139.60 사형제를 폐지할 것(코스타리카);

139.61 사형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기존에 선고된 사형을 감형 또는 사면할 것(사이프러스);

139.62 사형 집행에 대한 법적 모라토리움 도입을 고려할 것(이탈리아);

139.63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관행을 근절할 것(베네수엘라);

139.6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국가예방메커니즘(NPM)의 설립을 검토하는 등 고문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우루과이);

139.65 군 내 성폭력 관련 보호 및 방지 제도를 검토하고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사법권과 권리구제를 보장할 것(이란);

139.66 군 내 성폭력 관련 방지 및 보호 제도를 검토할 것(이스라엘);

139.67 군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할 것(엘살바도르);

139.68 사상, 신념,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말라위);

139.69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를 검토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정확한 사항을 개정할 것(멕시코);

139.70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파라과이);

139.71 1948년 「국가보안법」 및 대한민국 「형법」의 조항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것(러시아);

139.72 「국가보안법」이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할 것(스위스);

139.73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민사법률로 대체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미국);

139.74 모든 사람이 결사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의 제한 및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규칙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베네수엘라);

139.75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억압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기능을 임의로 방해하는 행위,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9.7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하도록 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자의 재능과 기술의 범위를 고려하여 다양한 대체복무 선택지를 제공할 것(캐나다);

139.77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구금되거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온전히 민간 성격을 지닌 비징벌적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스페인);

139.7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국제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할 것(슬로바키아);

139.79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온전히 민간 성격을 지닌 적절한 비징벌적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복무기간의 연장 없이, 현역 군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파나마);

139.80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가 자의적으로 활용되거나 표현 및 의견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개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독일);

139.81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아르헨티나);

139.8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사이프러스);

139.83 구금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석방하고, 이들의 범죄 기록을 폐기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룩셈부르크);

139.84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종료하고,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비징벌적·비차별적이며, 민간의 주도로 운영되도록 할 것(우루과이);

139.85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민간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할 것(에스토니아);

139.86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며, 이때 대체복무는 민간이 주도하고 현역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며, 비징벌적인 민간 성격을 지니도록 하고, 대체복무제도가 불합리하게 지연되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호주);

139.87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복무기간을 줄이고 대체복무가 가능한 영역(장소)를 확대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간 성격의, 비징벌적 대체복무를 차별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크로아티아);

139.8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비징벌적인 민간 성격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폴란드);

139.89 보안감시 시스템 등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시스템이 사생활권을 비롯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코스타리카);

139.90 인신매매의 위협을 퇴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더욱 강화할 것(파키스탄);

139.91 비정규적 이민 상황에 놓인 성매매 종사자 및 이주자 등 여성의 성착취에 대한 진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인신매매 근절에 관한 일반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것(페루);

139.92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접근법을 채택하는 등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카타르);

139.93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을 보장할 것(스리랑카);

139.94 인신매매 범죄, 특히 현대적 형식의 노예 상태와 연관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근절할 것(시리아);

139.95 성적 착취 및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아동 범죄율 증가와 같은 모든 사회악적 관행을 근절할 것(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39.96 인신매매 근절을 향한 노력을 지속할 것(키르기스스탄);

139.97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조지아);

139.98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인도네시아);

139.99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및 기타 분야에 관한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것(중국);

139.100 HIV 보균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강화를 지속할 것(세네갈);

139.101 연령에 맞는 성교육, 특히 10대의 임신과 HIV/AIDS를 예방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는 성교육을 제공할 것(룩셈부르크);

139.102 분쟁상황에서 학교 보호를 위한 「안전한 학교 선언」을 지지할 것(스페인);

139.103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과 도시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카타르);

139.104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인권 의무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위협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것(말레이시아);

139.105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할 것(마셜 제도);

139.106 비정부기구 및 선주민이 미래의 기후변화 관련 협상에 평등하고 완전하게 참여할(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바누아투);

139.107 모든 화석 연료의 사용을 근절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바누아투);

139.108 젠더기반 차별, 폭력, 학대를 영속화하는 구조나 규범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인적, 재정적 자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등 관련 법률과 계획의 이행을 더욱 강화할 것(필리핀);

139.109 성에 대한 권리 및 여성의 권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무를 강화할 것(콜롬비아);

139.110 사법부, 법집행기관, 정치 및 공공 부문, 민간 부문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우크라이나);

139.111 SNS 등에서 여성이나 여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의 확산을 근절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며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시리아);

139.11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제1항제(g)호 유보 철회 가능성을 고려할 것(파라과이);

139.113 차별 방지 및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통해 직장과 정치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노르웨이);

139.114 정치 및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네팔);

139.11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제1항제(g)호 유보를 철회할 것(나미비아);

139.116 국회, 도의회, 지방의회에서의 비례적 대표성을 비롯하여 공공 및 정치 부문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 및 구조적 개혁을 구상하고 이행할 것(마셜 제도);

139.117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젠더 및 여성인권 관련 임무를 강화할 것(몰디브);

139.118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탈리아);

139.119 정치 부문에서의 여성 차별을 해소할 것(이란);

139.120 국내외 민간기업들이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상의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할 것(아일랜드);

139.121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과 젠더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사이프러스);

139.122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차별, 혐오표현을 근절하고 젠더기반 고정관념을 타파하며, 건강한 성관계, 동의, 온라인 성범죄를 포함한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코스타리카);

139.123 여성, 여아를 모든 형태의 폭력, 괴롭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수단);

139.124 여성, 여아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폭력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가해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중국);

139.125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스리랑카);

139.126 온라인 폭력 등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감시, 예방,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리투아니아);

139.127 강요된 자백의 사용 금지 및 법정후견인의 재판 참여 보장을 통해 아동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감비아);

139.128 국내에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할 것(아제르바이잔);

139.129 온라인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에 대응하고, 노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 방지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을 도입할 것(세르비아);

139.13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형사 책임연령 하향 계획을 재고할 것(필리핀);

139.131 온라인 폭력을 비롯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예방, 근절, 감시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몬테네그로);

139.132 「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고려할 것(몽골);

139.133 부모의 법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수립할 것(리투아니아);

139.134 부모의 법적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크);

139.135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한 주거 정책을 도입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공식 주거지나 주택의 수를 줄일 것(슬로베니아);

139.136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OECD 평균으로 높이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면서,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동등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입할 것(슬로베니아);

139.137 선거절차와 공공 정치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개선할 것(요르단);

139.138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돌봄 시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뉴질랜드);

139.139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을 중단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제도를 마련할 것(코스타리카);

139.140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할 것(카타르);

139.141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없앨 것(아일랜드);

139.142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스라엘);

139.143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멕시코);

139.144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가 이성부부와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고 인정받는 것을 보장할 것(뉴질랜드);

139.145 성소수자와 그 밖의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노르웨이)

139.146 모든 영역(노동, 교육, 공공서비스의 이용 등)에서 성별, 성적 지향, 인종, 국적에 따른 모든 차별에 대응하는 포괄적 법률을 도입할 것(스페인);

139.147 성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영국);

139.148 성 소수자 등 소외집단의 구성원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미국);

139.149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할 것(미국);

139.150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성별정정을 전제조건 없이 허용할 것(호주);

139.151 인종,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 특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시행 가능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벨기에);

139.152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고,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캐나다);

139.153 「군형법」의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콜롬비아);

139.154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기 위한 기준을 도입하고 연구계획 수정 등을 통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코스타리카);

139.155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보장할 것(덴마크);

139.156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 강화를 지속할 것(프랑스);

139.157 모든 차별, 특히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도입·시행할 것 (독일);

139.158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독일);

139.159 합의에 의한 성인 간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동성부부의 입양을 합법화할 것(아이슬란드);

139.160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제재를 폐지할 것(아이슬란드);

139.161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의 조건으로 정신과 진단, 의료적 조치, 결혼 및 출산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개인의 자발적 선언(self-declaration)을 성별 정정의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행정적 절차를 도입할 것(아이슬란드);

139.162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강화할 것(콜롬비아);

139.163 전환 치료를 금지할 것(아이슬란드);

139.164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주아동 등록 제도를 개선할 것(폴란드);

139.16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고려를 지속할 것(키르기스스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40. 상호 대화에서 도출된 아래 권고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검토 후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140.1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자행한 성노예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과 피해자 요구에 기반한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lasting) 해결책을 보장할 것(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41.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결론 및 권고사항은 제안국 또는 수검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써, 실무그룹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4차 UPR 정부답변서

2023. 6.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종입장

대한민국은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유엔 인권 매커니즘의 건설적인 정신과 숭고한 노력에 동참하며, 2023년 1월 26일에 진행된 제4차 심의에서 받은 권고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전 세 차례의 UPR 심의를 통하여 구축된 관계부처·기관,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2023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UPR 권고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관계부처·기관 간 의견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 및 협의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본 보고서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총 263개의 권고사항 중 159개를 수용하고, 5개를 일부 수용하고, 99개를 참조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제4차 UPR 실무그룹 보고서 채택 시 유보한 165개 권고와 다른 항목으로 분류된 1개의 권고(138.86)를 포함하여 총 166개의 권고를 검토하였습니다. (11문단 참조) 이 중 63개 권고는 수용, 5개 권고는 일부 수용, 98개 권고는 참조(이는 “참조(note)”와 “수용 불가(not accept)”로 구분)한다는 입장을 본 보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의 권고들의 경우 하나의 권고에 복수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수용을 고려했습니다. (139.3, 139.6, 139.10, 139.84, 139.136)

UPR 정신을 존중하여, 개별 권고들이 요구하는 조치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실행되었거나 구현 중인 기타 권고사항들은 수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권고는 UPR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를 요구하거나 우리의 법과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정부의 기본적 입장과 차이가 있는 문제가 있어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수용하지 못하거나 권고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제도 및 사회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이러한 권고를 참조하도록 한 UPR 메커니즘의 취지에 따라 보편적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인권 매커니즘과의 협력, 국제적 의무의 이행 및 국가인권 프레임워크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6 전단, 139.10 후단, 139.31, 139.38, 139.40, 139.109, 139.117을** 수용합니다.

1. **권고 139.6 전단, 139.31**에 대해, 실무그룹 보고서 7문단을 참조 바랍니다.

2. **권고 139.109, 139.117**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시정과를 두고 성평등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정책 개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권고 139.10 후단**에 대해, 대한민국은 본 의정서에 대하여 WHO FCTC(담배규제 기본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의정서 비준을 통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국내 체계와 국제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 **권고 139.40**에 관련하여, 실무그룹 보고서 123문단을 참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1~2, 139.3 후단, 139.4~5, 139.6 후단, 139.7, 139.10 중단, 139.18 후단, 139.19~20, 139.21 전단, 139.22 전단, 139.23~24, 139.25 전단, 139.26~30, 139.64 전단, 139.102, 139.112, 139.115, 139.132, 139.165**를 참조합니다.

5. **권고 139.6 후단, 139.19~20, 139.21 전단, 139.22 전단, 139.23~24, 139.25 전단, 139.165**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인도주의에 관한 사항은 협약 비준과 관계없이 법적·제도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6. **권고 139.4, 139.10 중단**에 대해, 대한민국은 「국적법」을 통하여 권고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7. **권고 139.7**에 대해, 대한민국은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차별을 철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8. **권고 139.1~2, 139.3 후단, 139.5, 139.18 후단, 139.26~30, 139.64 전단, 139.102, 139.112, 139.115, 139.132**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비차별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47, 139.49~51, 139.108, 139.163을** 수용합니다.

9. **권고 139.108**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10. **권고 139.47, 139.49~51**과 관련하여, 심의 당시 발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8.86, 139.32, 139.41, 139.44~46, 139.141~162**를 참조합니다.

11. **권고 138.86, 139.32, 139.44, 139.45 전단, 139.46, 139.142, 139.145~147, 139.148 전단, 139.150 전단, 139.151, 139.152 전단, 139.154~157, 139.162**와 관련하여,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2. **권고 139.141, 139.143, 139.149, 139.152 후단, 139.153, 139.158, 139.160**에 대해, 「군형법」 제92조의6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며, 군대 내 건전한 공동생활과 군 기강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13. **권고 139.41, 139.45 후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현행 형사법상 범행의 동기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법」 개정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권고 139.144, 139.148 후단, 139.159**와 관련하여, 동성 간 결혼 및 입양을 비롯한 가족제도 변경은 법적·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즉각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15. **권고 139.150 후단, 139.161**에 대해, 성별정정은 성별이라는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입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입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별정정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대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환경·외교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39, 139.104~106**을 수용합니다.

16. **권고 139.39, 139.104~106**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42~43, 139.107**을 참조합니다.

17. **권고 139.107**에 대해, 탄소중립을 위한 각 국가의 전원믹스 정책은 각국의 제반 여건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화석 연료 사용의 근절은 어렵습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자유·안전권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63, 139.65~67, 139.125**를 수용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8~9, 139.10 전단, 139.11~17, 139.18 전단, 139.22 후단, 139.25 후단, 139.36 전단, 139.52~62, 139.64 후단, 139.71~72, 139.73 후단, 139.130**을 참조합니다.

18. **권고 139.8~9, 139.10 전단, 139.11~17, 139.18 전단, 139.22 후단, 139.25 후단, 139.52~62**과 관련하여, 심의 당시 발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19. **권고 139.36 전단, 139.72, 139.73 후단**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또한 권고 **139.71**에 대해 1948년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후 수차례 전면 또는 일부 개정하여 처벌대상과 법정형을 조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0. **권고 139.64 후단**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등 국가예방기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 **권고 139.130**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나라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공적·정치적 참여의 자유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70, 139.74, 139.75 후단, 139.81, 139.83, 139.84 전단**을 수용합니다.

22. **권고 139.70, 139.81, 139.83, 139.84 전단**과 관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23. **권고 139.74, 139.75 후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집회·결사의 자유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집회를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의 권리 보장과 공공복리가 조화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34, 139.48, 139.68~69, 139.73 전단, 139.76~80, 139.82, 139.84 후단, 139.85~88**을 참조합니다.

24. **권고 139.34, 139.48, 139.68, 139.76~79, 139.82, 139.84 후단, 139.85~88**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법률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26일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과 복무분야는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이나 복무 부담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5. **권고 139.69, 139.80**에 대해, 실무그룹 보고서 문단 124를 참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자의적 법률 적용을 예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6. **권고 139.73 전단**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지 여부, 강력한 민사제재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구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신매매, 노예 금지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90~139.97**을 수용합니다.

27. 권고 **139.90~139.97**과 관련하여, 실무그룹 보고서 11문단을 참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관련 법률을 시행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139.91 전단**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착취 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89**를 수용합니다.

28. **권고 139.89**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령을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개인의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노동권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75 전단, 139.99~100, 139.129 후단, 139.135, 139.136 후단**을 수용합니다. 해당 권고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29. **권고 139.75 전단**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33, 139.35, 139.98, 139.136 전단**을 참조합니다.

30. **권고 139.33, 139.35, 139.98**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노동 형태를 고려했을 때, 모든 유형의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1. **권고 139.136 전단**에 대해, 대한민국은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실시 중으로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육권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101, 139.103, 139.122 후단**을 수용합니다.

32. **권고 139.101, 139.122 후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각급 학교에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있으며, 성 관련 교육 시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3. **권고 139.103**과 관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3 전단, 139.110~111, 139.113~114, 139.116, 139.118~121, 139.122 전단, 139.123~124, 139.126**을 수용합니다.

34. **권고 139.3 전단**에 대해,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의 세부절차와 사회, 심리적 상담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35. **권고 139.110~111, 139.113~114, 139.116, 139.118~119, 139.121, 139.122 전단, 139.123~124, 139.126**과 관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36. **권고 139.120**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국내외 민간기업들이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방지·완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37, 139.127~128, 139.129 전단, 139.131, 139.133~134, 139.164**를 수용합니다.

37. **권고 139.37**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38. **권고 139.127, 139.129 전단, 139.131**과 관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39. **권고 139.128, 139.133~134**와 관련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논의 중입니다.

40. **권고 139.164**에 대해, 대한민국은 2022년 2월부터 국내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이 6~7년 이상 국내에 체류 중이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애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137~138, 139.140**을 수용합니다.

41. **권고 139.137~138, 139.140**과 관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139**를 참조합니다.

42. **권고 139.139**에 대해, 대한민국은 권고의 취지에 동의하나, 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공동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원천적인 금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난민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21 후단**을 참조합니다.

43. **권고 139.21 후단**에 대해, 정부는 이민정책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분류한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기타 권고

44. 대한민국 정부는 **권고 139.36 후단**을 불수용(not accept)합니다. 「북한인권법」은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자료집

| 인 쇄 | 2023년 9월
| 발 행 | 2023년 9월

| 발행인 | **송 두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887 | F A X | (02) 2125-091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968-6 9336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4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결과 자료집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국가인권위원회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Tel. (02)2125-9887 Fax. (02)2125-0918 www.humanrights.go.kr

ISBN 978-89-6114-968-6 93360